



#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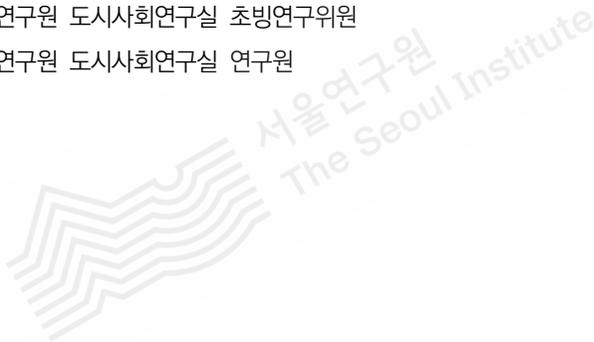
## 연구책임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진

최광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

박민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부모 지위 영향력 커지고 내부 격차 심각해진 청년 불평등, 완화 위한 근본대책 ‘발등의 불’

## ‘다차원적 특성’ 청년 불평등, 객관적 현실·주관적 인식 종합적으로 분석

이 연구는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을 다룬 기존의 여러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다차원적 특징을 지닌 청년과 불평등의 문제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의 측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고찰했다. 다차원적 불평등 분석이 객관적 상황을 분석하며 불평등 차원 각각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분석은 다차원적 불평등을 시간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청년 불평등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에 따라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와 변화 양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 인식 분석은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고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내용을 보완했다.

## 소득, 자산, 교육, 노동시장, 주거, 가족형성 등에서 청년 내부 불평등 심화

이전의 청년세대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불평등의 변화를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묶기보다 여러 차원에서 내부 격차를 지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연령대(20대와 30대), 성별, 소득, 학력,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 등에 따른 내부 격차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며,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또한 깊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최근 더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

의 소득과 자산 격차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불평등은 혼자 사는 청년 사이에서 가장 컸고 청년부부 가구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다. 30대 부부가구의 상대적 소득은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구유형 중 가장 높았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가구의 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30대 청년부부 가구는 주택 구매 등의 영향으로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부채도 많아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불평등이 30대보다 훨씬 심각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은 예상대로 사교육, 학업성취도, 대학진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구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1990년대생 청년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렸다. 그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 비율이 급감한 것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실업률도 30대와 달리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가운데 저학력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으며, 20대 남성의 종사상 지위도 크게 불안정해졌다. 반면, 20대와 달리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30대보다는 20대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나빠졌다.

주거와 가족형성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면서 1인 가구 급증, 월세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가구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이 더욱 두드러졌다. 30대 부부 가구의 자가 비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 격차와 더불어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를 증폭시켰다.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과 더불어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던 30대 혼인율마저 2010년대 후반에 정체 내지 하락한 영향이 컸다. 20대의 결혼은 더욱 드문 현상이 되었고, 30대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야만 결혼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출산율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러 차원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과거의 청년보다 오늘날의 청년, 특히 현재 90년대생인 20대 청년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주거 불평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은 예상대로 학업성취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불안정성 증가는 특히 20대 저학력 청년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진 20대는 가족형성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고, 30대 남성은 경제력과 혼인율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인구행동의 계층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

### 교육·노동시장, 2000년대 이후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점점 커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현상을 살펴볼 목적으로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교육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파악했다. 서울 소재 대학진학 비율은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대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획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2000년대 이후 점점 커졌다는 사실이다. 경제자본의 직접적인 상속을 제외하면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이는 학령기 이전의 양육 격차부터 시작되며, 대학진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사재기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 노동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대출 임금 프리미엄이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교육 투자 연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하다. 교육으로 부모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상은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 양상도 바뀌었다.

## 세대 간 사회이동성, 2000년대 이후 감소로 불평등 고착화 경향 두드러져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사회이동성이라는 렌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 간 상대적 사회이동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1980년도 출생 코호트부터 커지기 시작해 1990년생에 이르러 극대화되었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무려 70% 정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고, 30대는 그 절반으로 조사됐다. 20대 취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대 간 교육의 절대적 이동성을 살펴보면, 30대의 상승 이동이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20대의 상승 이동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20대 부모의 다수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간 직업의 절대적 이동성에서는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이 크게 두드러졌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소득이 낮은 그룹은 10년 후에도 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초기 소득이 높은 그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른 소득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동성의 저하가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위의 상승 가능성도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어떤 경로로 하느냐가 이후의 생애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와 함께 교육에서의 경쟁체제와 기회 불평등을 촉진한다.

### 서울 청년 “한국 사회 불평등 중 자산이 가장 심각… 그다음은 소득, 주거”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평등 인식이 세대 간 및 세대 내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은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꼽았다. 집단 사이의 불평등은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을 묻는

항목도 청년들은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을 묻는 앞의 문항에서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은 소득과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청년 사이의 불평등에서는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이 소득과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 정도도 10명 중 6명은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은 남성보다 심각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정도는 10명 중 4명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이 남성보다 심각했다.

### 서울 청년 10명 중 9명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 10명 중 9명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다수였다. 계층이동성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본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은 이보다 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인식 등을 묻는 항목에서 청년 10명 가운데 1~2명만이 우리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지위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2명에 그쳤다. 우리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10명 중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약간 낮았는데, 학력에 따른 격차는 매우 큰 편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학력에 따른 삶의 조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서울 청년,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낮아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들의 불평등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응답자가 15세 무렵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가족 배경,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응답

자가 15세 무렵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청년의 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사회 일반과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가운데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영역의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족형성 불평등의 심각성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인식에서는 가족 배경이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 예측을 제외하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에서는 부모의 지위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다음은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앞서 나타난 비교적 뚜렷한 상관관계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하층보다 소득 중하위층에서 더욱 컸고, 주거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에서도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심각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은 발견되지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에서는 흥미롭게도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계층이 소득 최하층이 아니라 중간층이었다.

## 소득 격차, 재분배, 취업기회 불평등 측면에서 20대·30대 인식 격차 존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 차이를 소득 격차와 재분배, 소득과 재산 불평등, 취업 및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30대와 중장년층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30대의 인식은 20대보다는 중장년층의 인식과 가까웠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서도 재분배를 강하게 지지하는 비율은 20대가 가장 낮았고, 30대와 중장년층의 지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20대의 인식이 나머지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재산 불평등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취업 기회가 불평

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2009년, 2014년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20대가 근소하게 높았는데, 20대와 30대의 격차가 가장 컸던 2014년도 조사에서 20대는 45.5%가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30대는 37.1%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도 조사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때 세대 간의 격차는 매우 미미했다.

##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재분배에 우호적, 취업기회 불평등 인식 경향 높아

청년세대 내 불평등 인식의 차이를 비교적 최근인 2014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 인식에서는 성별 격차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소득에 따른 차이는 드러났는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득 상위층이 오히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재분배 의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재분배에 우호적이었고, 소득 최상위층의 재분배 찬성 의견이 소득 최하위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성별이나 소득에 따른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고, 소득 하위층의 청년이 상위층의 청년보다 훨씬 더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직접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남녀 각각 18.3%, 26.0% 증가했다. 한편, 20대와 30대 사이의 연령대별 차이는 미미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10년대 후반 청년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답한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소득 하위층보다 소득 상위층이 많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취업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또한 2014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5.7%가 증가했고, 여성은 무려 24.3%나 증가했다.

## 본인·자녀세대 계층상승 가능성, 지난 10여년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본인과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이 지난 10여년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20대와 30대 모두 상향이동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20대는 지난 10여년 사이 이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절대적인 수치는 30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인 변화의 폭을 보면 20대의 비관적 인식이 30대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또한 지난 10여년간 20대와 30대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다. 다만, 20대는 본인이나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지난 10여년간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인 동조현상이 있었는데, 30대는 이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10여년 전 30대는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51.4%),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는 훨씬 덜 부정적이었는데(32.1%), 이 격차가 최근 매우 좁혀진 것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최근 한국사회의 계층이동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20대와 30대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 청년의 일반적인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청년 불평등, 노동시장 개혁·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 중심으로 완화 필요

청년세대가 마주한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전반적인 일자리의 부족 속에 청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를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때 교육-고용-복지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증진하고, 후자의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양질의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획일화된 삶의 경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인생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완화해 기회와 결과의 과도한 불평등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면 현재 각각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목차

<b>01 연구 개요</b>	<b>2</b>
1_연구 배경과 목적	2
2_연구 내용	3
3_연구 방법	4
<b>02 장벽사회와 청년 불평등의 메커니즘</b>	<b>8</b>
1_장벽사회의 문턱에서	8
2_청년과 오늘날 다차원적 불평등의 공간	10
3_불평등의 세습,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13
<b>03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b>	<b>22</b>
1_소득과 자산 불평등	22
2_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	35
3_주거와 가족형성 불평등	49
4_소결	60
<b>04 청년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가능성</b>	<b>64</b>
1_청년에게 대물림되는 불평등	64
2_끈적끈적한 바닥과 끈적끈적한 천장	71
3_소결	80
<b>05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b>	<b>84</b>
1_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본 청년의 불평등 인식	84

2_청년 연구자 및 플랫폼 노동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99
3_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의 차이	109
4_소결	120
<b>06 결론 및 정책과제</b>	<b>126</b>
1_청년 불평등의 현실과 인식, 그리고 연구의 한계	126
2_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35
<b>참고문헌</b>	<b>143</b>
<b>부록: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 요약</b>	<b>149</b>
<b>Abstract</b>	<b>162</b>



# 표 목차

[표 1-1] 주요 사용 데이터	5
[표 1-2]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구성	6
[표 2-1] 사회이동성의 다양한 차원	15
[표 3-1] 2017년과 2019년의 순자산 점유율과 평균액 비교	25
[표 3-2]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26
[표 3-3]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	27
[표 3-4] 청년 가구의 유형별 분포(2018)	28
[표 3-5] 청년 가구의 유형별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2018)	29
[표 3-6]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구성 비율(2018)	30
[표 3-7]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5분위배율(2018)	30
[표 3-8] 청년 가구의 유형별 순자산 보유액 분포	31
[표 3-9] 연령대별 순자산 지니계수와 p90/p10	32
[표 3-10] 전체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32
[표 3-11] 청년 가구의 유형별 자산 및 부채 현황과 전체 대비 배율	33
[표 3-12] 청년세대의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35
[표 3-13] 청년 가구주의 주거면적 상·하위 20% 변화	53
[표 3-14] 청년 가구주의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 변화	54
[표 3-15] 청년 가구주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상·하위 20% 변화	54
[표 3-16] 청년 가구의 유형별 분포	55
[표 3-17] 청년 가구의 유형별 주거 점유형태	56
[표 3-18] 청년 가구의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57
[표 5-1] 조사내용	85

[표 5-2] 가구원 수	86
[표 5-3] 가구유형	87
[표 5-4] 경제활동 유형	88
[표 5-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와 주요 질문	100
[표 5-6] 소득과 재산, 취업 기회,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비교	113
[표 6-1] 청년 불평등 관련 기존 정책	136
[표 6-2] 청년 불평등 관련 기존 정책 제안	139

# 그림 목차

[그림 2-1] 청년이 마주한 다차원적 불평등의 관계	12
[그림 2-2] 위대한 개츠비 곡선	14
[그림 2-3] 불평등의 세습 메커니즘	17
[그림 2-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시간적 변화	18
[그림 3-1]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	23
[그림 3-2]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의 자산 상위 1%와 10% 점유율 추이	25
[그림 3-3]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 추이	36
[그림 3-4] 임금노동자 하위집단별 비율 추이	37
[그림 3-5] 청년 고용률 추이	38
[그림 3-6] 5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 중 청년과 장년 비율 추이	39
[그림 3-7] 소득계층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위)과 참여율(아래)	40
[그림 3-8] 성적순위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위)과 참여율(아래)	41
[그림 3-9] 성별, 연령대에 따른 실업률 추이	42
[그림 3-10]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43
[그림 3-11] 청년세대의 성별, 학력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44
[그림 3-12] 청년세대의 성별, 연령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45
[그림 3-13] 청년세대의 연령대, 소득수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46
[그림 3-14] 청년세대의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47
[그림 3-15]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 변화	48
[그림 3-16] 청년세대의 성별, 학력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 변화	48
[그림 3-17] 1인 가구, 소득, 연령대별 전세 및 보증월세 비율 추이	50
[그림 3-18] 한국의 성별, 연령대에 따른 혼인율 추이	51

[그림 3-19] 한국의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52
[그림 3-20] 소득분위에 따른 미혼율 비교	58
[그림 3-2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미혼율 비교	59
[그림 4-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 비율	65
[그림 4-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서울 및 외국대학 입학 비율	66
[그림 4-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소득	67
[그림 4-4] 가구주 아버지의 직업환경하 개천용불평등지수 추이	68
[그림 4-5] 2012년 기준 OECD 국가의 교육 투자 연간 수익률(%) 비교	70
[그림 4-6] 출생 코호트별 추정계수	72
[그림 4-7] 아버지와 자녀의 절대적 직업 이동성	74
[그림 4-8] 아버지와 자녀의 절대적 학력 이동성	75
[그림 4-9] 부모와 자녀의 상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성	76
[그림 4-10] 소득 잠재집단의 월평균 소득 계적	78
[그림 4-11] 고용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79
[그림 5-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90
[그림 5-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91
[그림 5-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92
[그림 5-4]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93
[그림 5-5]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94
[그림 5-6]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95
[그림 5-7]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96
[그림 5-8]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97
[그림 5-9]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98
[그림 5-10] 소득 격차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109
[그림 5-11]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110
[그림 5-12]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111
[그림 5-13]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112
[그림 5-14]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112
[그림 5-15] 소득 격차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114
[그림 5-16]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115

[그림 5-17]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115
[그림 5-18]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116
[그림 5-19]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117
[그림 5-20] 20대와 30대 본인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 추이	118
[그림 5-21] 20대와 30대 자녀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 추이	119
[그림 6-1] 청년정책의 포괄성	141



01

## 연구 개요



- 1\_연구 배경과 목적
- 2\_연구 내용
- 3\_연구 방법

# 01. 연구 개요

## 1\_연구 배경과 목적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은 최근 시민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청년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면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널리 확산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월에는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꾸준히 커지고 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지역 등의 비경제적 불평등의 영역으로 그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불평등 차원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쇄를 이루면서 다차원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을 고찰함으로써 불평등을 어느 한 시점의 공간 속에서 정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과 불평등의 문제는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상호 간의 여러 교차 지점들을 갖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상황이 대체로 악화하는 가운데, 단순한 악화보다는 그 내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임이 관찰되고 있다(김전기 외, 2019).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세대 간 불평등이나 유무형의 자산 세습을 통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심화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확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교차성을 반영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청년 불평등’은 청년에게 고유한 어떤 특수한 형태의 불평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차성

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불평등’은 ‘청년의 불평등’이라기보다 ‘청년과 불평등’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청년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불평등을 보다 입체적이고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마침 서울시는 2020년 1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숙의를 지속하고, 2022년 1월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이 기구에서의 논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_연구 내용

이 연구는 청년이 직면한 다차원적 불평등과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2장에서는 오늘날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주목하는 이유를 밝히고, 사회이동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불평등의 세습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서 이후 분석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이전의 청년세대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불평등의 변화를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묶기보다 여러 차원에서 내부 격차를 지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연령대(20대와 30대), 성별, 소득, 학력,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 등에 따른 내부 격차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가 청년에게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이것이 교육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밝혀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파악하고, 소득이나 고용 지위의 변동을

추적하여 2000년대 이후 세대 내 사회이동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한국사회 일반과 청년 내부의 여러 불평등 영역,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등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먼저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청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러한 불평등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불평등 인식의 심층을 들여다본다. 또한, 기존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불평등 인식에서 세대 간과 세대 내 격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불평등의 구조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현상의 단면을 드러내고,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고리를 찾아본다. 나아가 기존 청년정책과 사회보장 제도가 청년세대 내부의 취약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각하며,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개별 청년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3\_연구 방법

이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이를 보완하는 형태의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했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연구의 통계분석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통계청과 여러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로 수집해 다양한 분석에 사용했다. 아울러 불평등에 대한 서울 거주 청년의 인식과 태도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방식을 이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를 시행해 1차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했다. 본문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인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는 [부록]에 실었다. 본문에 사용한 양적 분석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변수를 기초로 통계량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이였다. [표 1-1]은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주요 데이터를 보여준다.

[표 1-1] 주요 사용 데이터

작성기관	데이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사회조사, 인구동향조사,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OEC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World Inequality Lab,	World Inequality Database

또한,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연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는 등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했다. 질적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는 제5장 제2절에 담았다. 덧붙여, 불평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네 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이동성과 청년의 불안정 노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별도의 자문회의 또한 개최했다([표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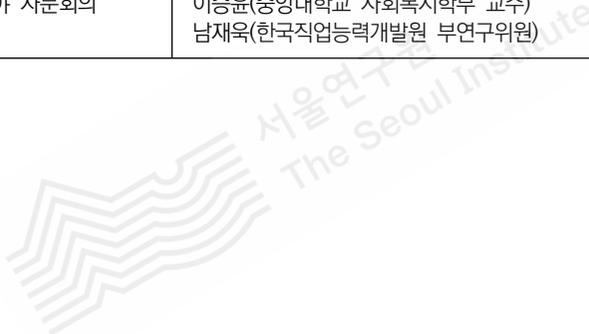
한편, 청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합의된 기준은 없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와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청년을 90년대생과 80년대생(2020년 현재 만 20~39세)을 포괄하는 인구로 정의하고, 분석의 필요에 따라 90년대생(만 20~29세)과 80년대생(만 30~39세)을 구분하여 사용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상위 한계는 34세이지만, 전통적인 생애과정의 전환 또는 이행이 점차 늦어지

1) 참고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되며,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된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은 관련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이다.

는 최근 추세뿐만 아니라 청년의 상한 연령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39세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sup>2)</sup> 다만, 일부 분석에서는 그 목적이나 활용 가능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 다른 정의를 사용했다.

**[표 1-2]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구성**

구분	참여자
전문가 포럼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유석(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익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석철(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조민서(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사회이동성 분야 자문회의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불안정 노동 분야 자문회의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sup>2)</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과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 항목을 살펴보면, 2016년 청년의 평균 하한 연령은 19.3세였고 평균 상한 연령은 29.5세였는데, 2018년에는 각각 19.8세와 31.4세로 증가했다(변금선·김기현, 2019). 한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청년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02

## 장벽사회와 청년 불평등의 메커니즘



- 1\_장벽사회의 문턱에서
- 2\_청년과 오늘날 다차원적 불평등의 공간
- 3\_불평등의 세습,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 02. 장벽사회와 청년 불평등의 메커니즘

### 1\_장벽사회의 문턱에서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양극화 경향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경제 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까지 거론되면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기에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격차가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러한 격차의 심화를 넘어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가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다. 즉, 한 세대 내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음은 물론 세대를 거치면서도 그 사다리를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흙수저’로 표현되는 수저계급론은 새로운 계급사회의 도래를 은유하고, ‘헬조선’은 이러한 사회를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로 쓰인다. 취업, 연애, 출산 등을 포기한 ‘3포세대’나 ‘N포세대’라는 말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웅변한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는 줄임말)’은 절망을 넘어 삶에 대한 희망 자체를 놓아버린 극단적인 좌절감을 표현한다. 어느 한 시점에서 삶의 격차가 매우 큰 두 사회가 있는데, 한 사회에서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격차를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다른 한 사회에서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고 가정해보자.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두 사회는 분명 다른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정말 이들 신조어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회일까?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이미 그 격차가 좀처럼 뛰어넘기 힘든 하나의 장벽이 되어버린 것일까? 이 질문에 뚜렷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는 분명 ‘장벽사회’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장벽사회’로 진입한다면 청년세대의 좌절감과 자포자기 현상은 견잡을 수 없이 더욱 확산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

하고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 또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갑과 을 사이의 또는 계층 사이의 갈등을 넘어 을과 을 사이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이미 이러한 징후가 표출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기존 질서의 기득권층은 여러 겹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려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이 증가하면 사회구성원 다수를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게 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다시 결과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Brunori et al., 2013). 이러한 질서가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지면 사회경제적 장벽은 허물기 어려울 정도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가 한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한 부분에 메스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면서 온전히 대물림까지 되는 상태에 이르면, 어느 정도 열린 기회를 허용하던 기존의 ‘격차사회’는 이제 그 기회마저 차단하는 폐쇄적 ‘장벽사회’로 변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러한 ‘장벽사회’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이미 이러한 ‘장벽사회’로의 이행을 매듭지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국사회가 현재 위치한 지점이 앞서 정의한 ‘장벽사회’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아직 ‘장벽사회’의 문턱을 밟지 않았다면,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이 담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은 복잡하지 않다.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의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쟁의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경쟁에서의 승리가 승자독식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다음번 또는 다음 세대의 경쟁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eves, 2017).

## 2\_청년과 오늘날 다차원적 불평등의 공간

청년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청년이라는 정체성은 단지 이행기 혹은 전환기로 이해될 수 있는가? 청년기를 사회로의 안정적인 편입기로 이해하는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을 독립적인 주체이자 미래세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 문제를 대하는 두 극단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극단은 청년 문제가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나 가부장제와 같은 구조적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의 극단은 독자적인 청년 문제란 존재할 수 없는 허구라는 입장이다. 청년이라는 개념의 포괄성 탓에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청년이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함께 일컫는 개념이다. 개념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미리 정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같은 정도의 삶의 질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Roemer, 1998).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것들에서의 차이로부터 파생하는 한에서 기회의 평등과 양립할 수 있지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환경적 영향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은 대부분 중첩되어 나타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능력은 이를 발달시키는 기회 자체가 누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어서 사실 기회의 평등과 양립할 수 있는 순수한 노력, 재능, 능력은 성립하기 어렵다. 즉, 결과의 불평등은 현실적으로 항상 기회의 불평등을 구성하고 있다(Fishkin, 2014).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결과의 불평등에 눈감고 균등한 기회의 보장만을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 아울러 어떤 기회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놓고 이것의 공정한 분배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기회의 불평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결과의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대 간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hauvel & Schröder(2014)의 논의에 따르면, 특히 경기 후퇴의 시기에 두드러지는 세대 간 불평등의 양상은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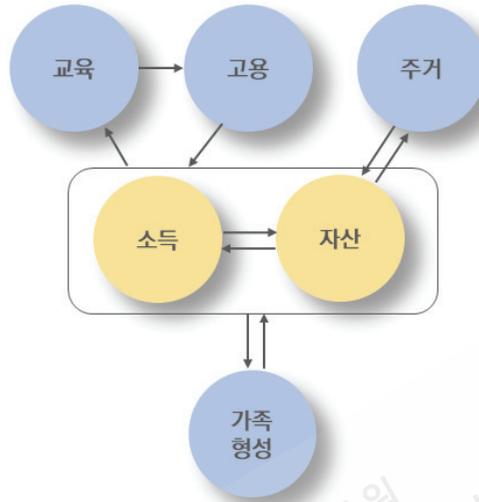
지국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세대 간 불평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만, 자유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세대 내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대 내 불평등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세대 간 불평등의 양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미(2016)는 구조 조정기에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은 세대가 없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세대 간 불평등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을 강조하고, 이철승(2019)은 세대 내 불평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불평등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sup>3)</sup> 또한, 조귀동(2020)은 세대 간 불평등을 강조하는 견해가 계층 세습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을 비판한다. 한편, 청년세대와 386세대를 대립시키는 세대담론의 역사를 질적으로 분석한 신진욱·조은혜(2020)는 세대 간 갈등과 격차는 단일한 거대구조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세대담론이 미디어에 의한 확산 과정을 거치며 매우 과장되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386세대 혐오 프레임이 이후 증폭되면서 세대담론과 결합해 왔다고 파악한다. 세대 간 불평등을 둘러싼 이견에 이러한 맥락 또한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불평등의 다차원적 특징이다. 다차원적 불평등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불평등의 여러 차원이 다차원적으로 병존한다는 약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강한 의미이다. 강한 의미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로 새롭게 명명하여 이론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황규성, 2016).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이 약한 의미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강한 의미의 다차원적 불평등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불평등 차원이 완전한 독립성을 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적으로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체계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불평등이라 일컬을 때 어떤 차원을 주요하게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 합의에 이른 것은 없지만, 최근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청년세대가 마주한 객관

3) 이와 관련하여 이철승 외(2020)는 고령층 증가, 연공제 심화, 세대네트워크 강화라는 구조변동, 즉 인구-연공-세대의 착종 현상이 비정규직 사용과 청년실업 증대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적인 불평등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그리고 가족형성 등에서의 불평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한편, 이들 불평등 각각의 영역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5)</sup>



[그림 2-1] 청년이 마주한 다차원적 불평등의 관계

우선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은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소득의 축적이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형성된 자산으로부터 자산소득을 얻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에 기여한다.<sup>6)</sup> 이는 경제적

4) 한편, 변금선·김기현(2019)은 경제, 교육·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해 청년의 삶의 질 격차와 다중격차의 위험 요인을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척도에 기초한 것이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제5장에서 다른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를 별개로 이들 주관적 영역을 포괄하지 않는다.

5) [그림 2-1]에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 또한 존재하지만, 이 연구보고서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기에 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른바 학군의 분리와 주거지의 계층별 분리 사이에 동조 현상이 있는데, 이는 주거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사이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가족형성의 불평등과 양육 및 교육에서의 불평등도 서로 관련이 있다.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배우자끼리의 동류 짝짓기가 증가하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 및 기회의 계층 간 격차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덧붙여,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가족형성의 특징이 상속의 집중도를 높여 세대 간 사회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Piketty, 2014; 2020), 이 연구에서는 소득, 직업, 교육 등으로 드러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회이동성을 다룬 뿐 다차원적 불평등 관계 속의 다른 차원과 사회이동성을 직접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한편,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동적인 상호관계를 포착하는 ‘운명의 분기(diverging destinies)’ 가설에 대한 고찰도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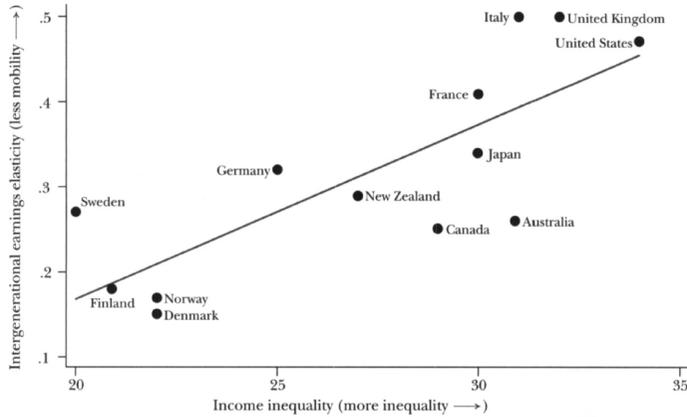
6) 여기서는 교육의 격차에 주목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실제로 양육과 양육 방식의 격차에서부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Doepke & Zilibotti, 2019; Lareau, 2011; Putnam, 2015), 이는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격차가 커짐에 따라 교육비 지출의 격차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의 인지발달과 학습 관련 투자와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의 격차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학진학에서의 격차가 교육 불평등의 핵심을 이룬다. 교육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취업과 미취업의 차이, 취업 가운데에서도 전문직·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와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는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주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금융화의 급속한 확산은 한편에서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매입을 부추겨 주거 격차와 자산 격차 사이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출 비율의 차이는 주거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가족형성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끼리끼리' 결혼하는 동류 짝짓기 assortative mating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상위계층 가구와 하위계층 가구 사이의 소득과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 3\_불평등의 세습,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불평등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사회이동성이다. 사회이동성은 기회의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회의 평등 수준이 더 높아지면 사회이동성은 더 높아지고, 기회의 평등 수준이 더 낮아지면 사회이동성도 더 낮아진다(World Economic Forum, 2020). 만일 사회이동성이 큰 사회라면 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한순간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될 가능성이 있고, 한 사회의 불평등 수준도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사회이동성이 낮다면 어떤 한 개인의 삶의 질이 자신의 생애에 걸쳐 나아질 가능성이나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이 현재 세대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사회이동성의 수준은 불평등의 정도나 추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사회이동성과 불평등 사이의 이러한 밀접한 관련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림 2-2]와 같은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이다.<sup>7)</sup> 이 그림은 소득 불평

등이 큰 나라들에서 세대 간 소득이동성 또한 매우 낮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출처: Corak(2013) 82쪽.

주: 가로축은 1985년 무렵의 가구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측정한 지니계수이고, 세로축은 부모의 소득과 1960년대 초중반생 성인 자녀의 1990년대 중후반 소득 사이의 탄력성(elasticity)을 측정한 것임.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동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

**[그림 2-2] 위대한 개츠비 곡선**

[표 2-1]은 사회이동성의 다양한 차원을 보여준다. 필요와 맥락에 따라 이들 차원은 중첩적으로 사용되는데, 절대적 및 상대적 이동성은 주로 세대 간 이동성과 함께 쓰인다. 예를 들어, 소득의 세대 간 상대적 이동성은 자녀세대 소득의 상대적인 지위가 그 부모세대 소득의 상대적인 지위와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낸다. 사회 전체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조합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이동성이 모두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 한 번 물려받은 지위를 평생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7)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대학 경제학 교수였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앨런 크루거(Alan Krueger)가 2012년의 한 연설에서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표 2-1] 사회이동성의 다양한 차원

구분	정의
세대 내 이동성 (intragenerational mobility)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개인의 생애 내에서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
세대 간 이동성 (intergenerational mobility)	한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에 걸쳐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
절대적 이동성 (absolute mobility)	한 개인의 소득, 교육, 직업 등에서의 실질적인 지위가 부모가 같은 나이였을 때의 실질적인 해당 지위보다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
상대적 이동성 (relative mobility)	한 개인의 소득, 교육, 직업 등에서의 상대적인 지위가 부모가 같은 나이였을 때의 상대적인 해당 지위보다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

이 연구가 청년세대가 겪는 불평등을 사회이동성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세대 간 이동성을 파악하면 오늘날 청년세대가 마주한 불평등이 어느 정도 이들 부모세대의 지위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세대 내 이동성을 파악하면 오늘날 청년세대가 마주한 불평등이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세대 간 이동성에 주목했는데, 세대 내 이동성 또한 중요하다. 세대 내 이동성이 저하하면 청년이 겪는 불평등이 앞으로 이들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더욱 심화하고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기간에 걸친 세대 내 이동성의 크기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이동성이 그 이상 연령집단의 이동성보다 훨씬 큰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성의 패턴은 연령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Carroll & Chen, 2016). 따라서 한 사회의 세대 내 사회이동성 수준은 다른 세대보다 청년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학술적 용어라면, 이와 관련하여 더욱 널리 쓰이는 일반적 용어에는 불평등한 지위의 세습 또는 줄여서 불평등의 세습(또는 대물림)이 있다. 현대 사회 이전에는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신분의 세습이 가능한 시대가 있었지만, 신분제 사회가 아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부의 세습이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세습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습은 특히 상위 10% 또는 20%의 계층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계층의 등장을 새로운 귀족계층인 능력자계층(meritocratic class)의 출현으로 묘사하기도 한다(Reeves, 2017; Stewa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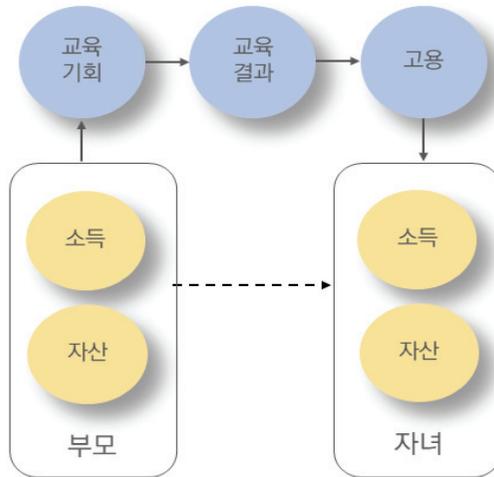
불평등의 세습을 간단히 정의하면, 소득이나 자산, 직업, 교육 등으로 표현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병목현상이 증대하면서 이러한 불평등 대물림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형성된다. 병목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근래에 늘어난 대학 졸업자와 좁아진 취업 관문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1990년대 말 이후 한국경제가 고성장 국면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하고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세습 메커니즘은 [그림 2-3]의 점선 화살표가 가리키는 직접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논외로 한다면,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등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는 자녀의 발달 과정과 학업성취를 좌우하며 대학진학과 노동시장 진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물론 학업성취도가 같다고 해서 대학진학에서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제한적인 장학금 제도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노동시장 진출에서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이수빈·최성수, 2020). 예를 들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생계비를 벌며 겨우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과 그런 걱정 없이 부모의 연줄로 일류 인턴이나 논문 저자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학생 사이에는 사회진출에서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sup>8)</sup>

[그림 2-3]이 보여주듯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한 교육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은 고용 기회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sup>9)</sup> 이는 다시 자녀인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불러온다. 이때 자녀의 발달 과정과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교육비 지출이다. 물론 더욱 넓은 범위에서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또한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다.

8) 이수·박가열(2018)에 따르면,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한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 경험은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생계를 목적으로 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자리 경험은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 예를 들어, 이러한 기회 격차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드러나는데, 시험 준비는 대체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가 낮을수록 많이 하고 있지만, 시험 합격에서는 계층수준과 교육성취가 높을수록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일관되게 합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도영·최율, 2019).



[그림 2-3] 불평등의 세습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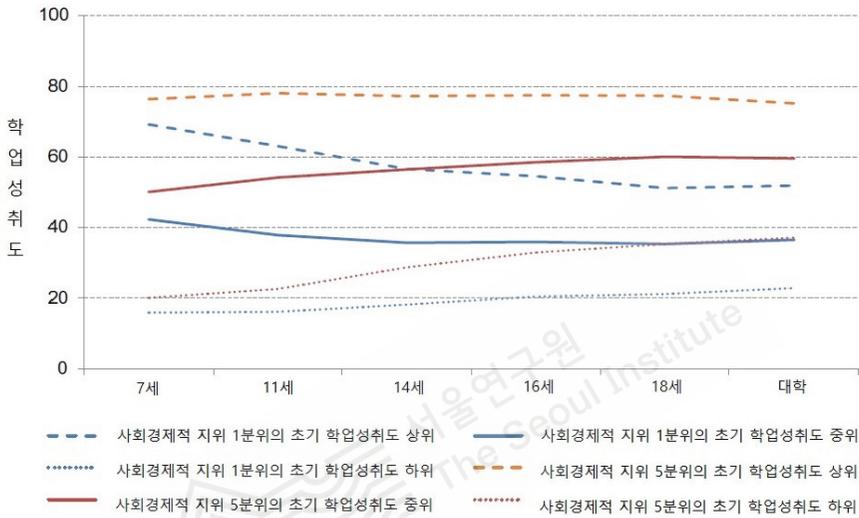
문화자본 가운데 특히 부모의 문화적 소유물, 독서 향유 정도, 문화적 소통 등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yun et al., 2012). 변수용·김경근(2008b)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및 외국어 영역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문화자본으로 학업성취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변수용·김경근(2008a)은 관계적 측면의 사회자본 가운데 하나인 학습이나 생활지도 형태의 교육적 관여가 부모의 학력이 높은 자녀의 영어 학업성취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학령기 이후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인 아동의 인지발달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다(Wilkinson & Pickett, 201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인간발달 경제학 전문가인 제임스 Heckman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발달 초창기의 투자가 장래 아이들의 성취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sup>10)</sup>

이렇듯 교육의 출발선 자체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교육 기간 내내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림 2-4]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령

10)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eckman, J., "Four Big Benefits of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https://heckmanequation.org/www/assets/2017/01/F\\_Heckman\\_FourBenefitsInvestingECDevelopment\\_022615.pdf](https://heckmanequation.org/www/assets/2017/01/F_Heckman_FourBenefitsInvestingECDevelopment_022615.pdf)

기 아동부터 시작해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꾸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초기에 학업성취도가 비슷했던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벌어지고 있다. 특히, 초기에 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던 하위계층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져 14세 무렵에는 초기에 중위권의 성취도를 보여주었던 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성적이 따라잡힌다(Crawford et al., 2017).



출처: Crawford et al.(2017) 97쪽.

[그림 2-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시간적 변화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다. 김수혜 외(2020)는 서울교육중단연구 1~9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당시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마친 2018년까지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 등의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 배경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수학 학업성취도 격차는 초등학교 5학년부턴 벌어지기 시작하여 중학교 시기에 가장 컸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다소 줄었다. 그리고 취약한 가족 배경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교육의 결과가 단순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무관한 개인의 순수한 재능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다. 아동의 인지발달과 지능의 향상에서부터 학생의 재능과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김세직 외(2015)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의 잠재력(또는 인적자본) 발달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교육의 성취에 이를 훨씬 넘어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구별 소득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울대 입학 확률이 학생의 잠재력 격차를 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경제력 격차를 주로 반영하는지를 분석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구)에는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많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보다 서울대 입학 확률이 높지만, 분석 결과는 이러한 잠재력의 격차로 입학 확률의 지역 간 큰 격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학생 잠재력의 분포 격차로는 서울시의 구별 서울대 입학 확률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지 않는데, 실제로는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학생의 잠재력 격차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명문대학의 진학이나 노동시장에서 높은 고용 지위 등을 획득하는 성취가 오로지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의 산물이라는 믿음, 즉 능력주의(meritocracy)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sup>11)</sup> 미국의 전설적인 대학 미식축구 감독이었던 배리 스위처(Barry Switzer)가 그의 불우한 청년기에 했다는 이 말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마치 자기가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 Barry Switzer**

11) 능력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판은 Wilkinson & Pickett(2018)과 박효민(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03

##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 1\_소득과 자산 불평등
- 2\_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
- 3\_주거와 가족형성 불평등
- 4\_소결

## 03.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 1\_소득과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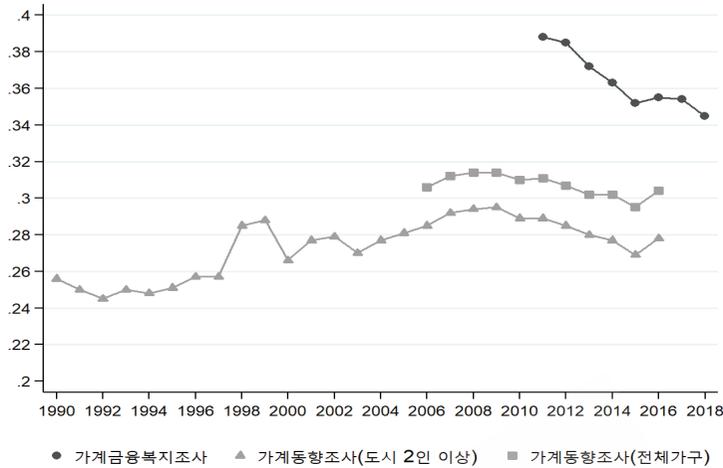
#### 1)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

이 절에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를 살펴본 다음 이러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한다. 먼저 소득 불평등을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추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지니계수는 가구원 수 2인 이상의 도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지니계수로 그 추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2009년 무렵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그 이후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up>12)</sup>

한편,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 평균은 경상소득 평균의 약 62%를 차지하는데, 이는 임금 불평등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 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임금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1기(1980~1994년)에는 하락했고, 2기(1995~2007년)에는 상승했으며, 3기(2008~2016년)에는 다시 하락한다(Koh, 2018). 이는 [그림 3-1]에 나타난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유사하다. 임금과 소득 불평등의 이러한 추이 변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Koh(2018)는 임금 불평등의 변화를 숙련수요와 숙련공급 간의 괴리에서 찾는다. 즉, 1기에는 고졸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했고, 2기에는 대졸

<sup>12)</sup> 지난 2011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지니계수가 발표되었는데, 2016년(조사연도 2017년)부터는 이 조사자료가 행정자료로 보완된 것이다. 소득 및 비소비지출 등과 관련한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한 가구의 응답 거부나 과소과대 응답 등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오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조사자료부터 행정자료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를 그 이전의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2010년대에 걸쳐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한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통계상의 착시일 수 있다.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으며, 3기에는 대출 노동 공급은 지속하는데 대출 수요가 정체되면서 대출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1]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

하지만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최상위 10%의 임금 비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임금 불평등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전반까지 임금 불평등이 계속 증가했는데(홍민기, 2015), 이는 위의 연구와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또한, 성재민(2018)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 불평등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하락했지만,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 불평등은 같은 기간에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자의 원인은 월 임금이 낮은 단시간 노동(파트타임)의 증가로 설명된다. 이상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불평등 지표의 선택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정의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6개 OECD 국가 가운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0.355)은 칠레(0.460), 미국(0.390), 리투아니아(0.374), 영국(0.357) 다음으로 라트비아(0.355)와 같은 수준의 높은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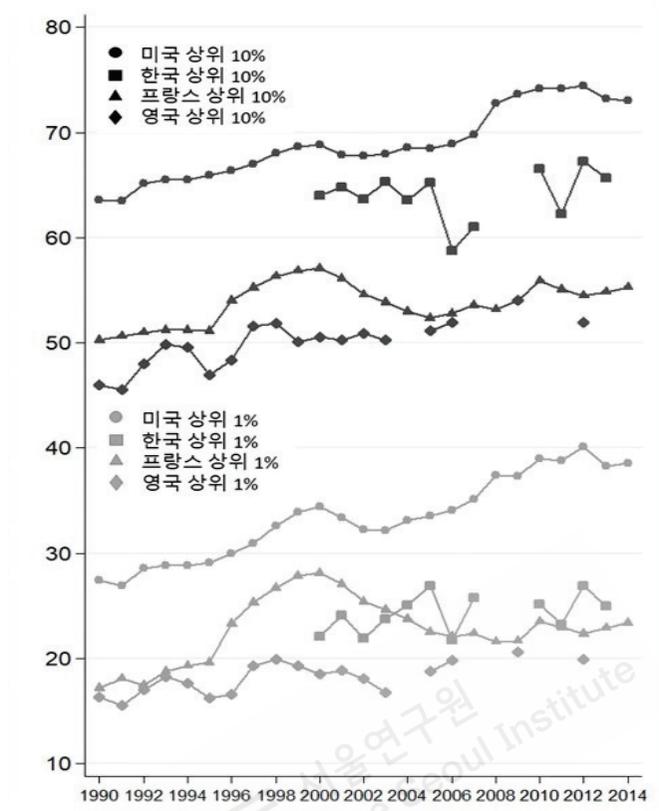
13) 칠레, 미국, 리투아니아, 영국, 한국, 라트비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프랑스, 헝가리, 독일,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소득 불평등의 현황에 이어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3-2]는 1990년대 이후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의 총자산 상위 1%와 10%의 점유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 모두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점유율의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난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자산의 불평등도가 낮지만, 프랑스나 영국과 비교하면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27개 OECD 국가의 비교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 자산 상위 1%와 10%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10% 점유율에서 한국(65.67%)은 미국(72.99%)과 네덜란드(68.35%) 다음으로 매우 높은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었고, 상위 1% 점유율에서도 한국(24.98%)은 미국(38.56%), 네덜란드(27.83%), 오스트리아(25.53%) 다음으로 매우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냈다.<sup>14)</sup>

한편, [표 3-1]은 2017년과 2019년의 순자산 상위층과 하위층의 자산 점유율과 자산 평균액 등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먼저 순자산 상위층과 하위층의 점유율 증가를 보면, 하위 40%의 점유율은 불과 2년 사이에 하락했고, 상위 20% 이내 각 층의 점유율은 모두 상승했다.<sup>15)</sup> 다음으로 평균액 증가를 살펴보면, 하위 40%의 순자산 평균액이 불과 250만 원 증가할 때 상위 1%의 순자산 평균액은 약 6억 2천만 원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평균액의 증가율을 보면, 상위 1%의 증가율이 18.34%로 가장 높고, 순차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지다가 하위 40%는 불과 5.35%에 그친다. 즉, 자산 상위층으로 갈수록 자산의 증가액뿐만 아니라 자산의 증가율도 가팔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최근 2년 사이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것임에도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이다. 서베이는 최상위 자산계층을 충분히 표집하지 못하거나 이들의 과소 응답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 자산 불평등은 김낙년(2016)의 추정치가 보여준 바와 같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드러난 수준보다 훨씬 더 크고 불평등의 심화 현상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체코, 슬로베니아 등 26개국의 데이터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가져왔다.

- 14) 미국, 네덜란드, 한국, 덴마크, 라트비아, 독일, 칠레,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등 27개국 가운데 한국(2013년), 프랑스, 영국(2012년), 미국 데이터는 World Inequality Database(WID)로부터 온 것이고, 나머지 데이터는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에서 가져왔다. 단, 스페인은 2012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13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15년, 캐나다는 2016년 기준 자료이다.
- 15)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도 조사부터는 행정자료로 부분적인 보완이 이뤄졌지만 이는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관련 항목 등에만 해당하며 자산은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 조사에 기초한 자산 점유율 등의 지표는 앞서 언급한 자산 점유율 추정치와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2019년도까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조사는 가장 최근의 자산 불평등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WID)

주: 한국 자료는 상속세 자료와 유산승수법(estate multiplier method)을 이용한 김낙년(2016)의 계산에 기초함.

[그림 3-2]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의 자산 상위 1%와 10% 점유율 추이

[표 3-1] 2017년과 2019년의 순자산 점유율과 평균액 비교

(단위: %, 만 원)

구분	2017년		2019년		점유율 증가	평균액 증가	평균액 증가율
	점유율	평균액	점유율	평균액			
상위 1%	10.74	339,762	11.38	402,067	0.64	62,305	18.34
상위 5%	28.43	179,610	29.59	209,322	1.16	29,712	16.54
상위 10%	41.79	131,977	43.32	152,839	1.52	20,862	15.81
상위 20%	59.99	94,670	61.52	108,517	1.53	13,847	14.63
하위 40%	5.93	4,677	5.59	4,927	-0.34	250	5.35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해당 연도는 자산 기준 연도로 그해 3월 말 기준임.

덧붙여, 소득은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의 주요 원천이고, 자산은 소득형성 시 하나의 원천이므로 그 관계 양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소득과 자산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대체로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미국의 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전병유·정준호, 2014). [표 3-2]는 이를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2012년과 2019년 조사 모두 가처분소득은 순자산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여러 소득 유형 가운데 재산소득과 순자산 사이의 상관성이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상당히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표 3-2]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구분	소득	순자산	
		2012년	2019년
전체	가처분소득	0.57*	0.55*
	근로소득	0.24*	0.27*
	사업소득	0.24*	0.23*
	재산소득	0.42*	0.63*
순자산 5분위	가처분소득	0.24*	0.20*
	근로소득	-0.02	-0.03
	사업소득	0.12*	0.08*
	재산소득	0.29*	0.40*
순자산 1분위	가처분소득	0.11*	0.15*
	근로소득	0.10*	0.12*
	사업소득	0.01	0.05*
	재산소득	0.10*	0.16*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p < 0.001$ . 해당 연도는 자산 기준 연도로 그해 3월 말 기준, 소득은 그 전년도 기준임.

## 2) 청년세대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다음으로 청년세대 내부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우선 청년세대 내부를 다양한 집단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령대(20대와 30대)와 성별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청년 가구의 유형에 따른 구분도 사용할 수 있다. 청년은 혼자 독립하여 사는지, 결혼했는지, 결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지, 그리

고 부모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불평등과 관련한 특징들이 충분히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청년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가구, 그 외 청년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고 이를 [표 3-3]에서와 같이 정의했다. 다만, 같은 구분을 사용하는 김문길 외(2017)와 이태진 외(2016) 등의 연구에서는 청년 연령을 만 19~34세로 정의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1장의 연구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년대생과 80년대생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청년을 만 20~39세로 정의한다.

[표 3-3]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

가구유형	정의
청년단독	만 20~39세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	가구주가 만 20~39세인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자녀	가구주가 만 20~39세인 청년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청년+부모	만 20~39세인 청년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기타청년	위 가구 이외의 청년 가구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청년 가구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20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약 85%이며, 30대는 약 29%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0대는 청년부부+자녀 가구 비율이 31.12%로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조사방식의 차이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관찰할 때 청년단독 가구와 청년+부모 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했고, 청년부부 가구와 청년부부+자녀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김문길 외, 2017).

[표 3-4] 청년 가구의 유형별 분포(2018)

(단위: %, 가구 수)

구분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청년+부모	기타청년	계
20대	5.06	0.41	1.26	84.53	8.73	100
	225	23	43	2,993	347	3,631
30대	8.93	5.02	31.12	28.50	26.43	100
	402	242	1,201	1,146	1,039	4,03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앞의 [표 3-3] 참조.

### (1) 청년세대의 소득 불평등

청년 가구의 유형별로 소득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고 전체 가구의 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배율을 구했다([표 3-5] 참조). 가처분소득 배율은 전체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청년 가구의 유형별 가처분소득 평균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20대 청년부부+자녀 가구는 상대적인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기타청년 가구를 제외하면 청년단독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 청년부부 가구는 상대적인 가처분소득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 청년부부+자녀 가구는 청년단독 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부모 가구와 기타 청년 가구를 제외할 때, 청년부부 가구가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인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고, 청년부부+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훨씬 크지만 양육으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 탓에 상대적인 가처분소득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5] 청년 가구의 유형별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2018)

(단위: %, 만 원)

구분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청년+부모	기타청년
20대	배율	92.6	106.3	74.2	129.2	91.0
	소득	2,605	2,990	2,087	3,634	2,561
30대	배율	101.1	136.3	101.7	128.1	105.9
	소득	2,843	3,835	2,860	3,604	2,978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앞의 [표 3-3] 참조. 2019년 전체 가구의 평균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2,813만 원임.

[표 3-6]은 청년 가구의 유형별로 소득 구성의 비율을 보여준다. 20대와 30대 청년부부 가구의 전체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 3-5]에서 청년부부 가구의 상대적 가처분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이 맞벌이 부부가구의 근로소득에 의존한 것임을 시사한다. 사업소득은 30대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데,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표 3-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년부부와 청년부부+자녀 가구의 표본 수가 적다는 점을 유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청년+부모 가구와 기타청년 가구를 제외하면 청년부부+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표 3-5]에서 본 것처럼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 가구의 상대적 가처분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의 보장과 더불어 공적이전소득을 보다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7]은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5분위배율을 보여줌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수준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20대와 30대는 물론 청년이 속한 전체 가구 가운데 청년단독 가구 내부의 소득 5분위배율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 기준 만 18세부터 65세까지의 전체 근로연령인구의 소득 5분위배율인 5.67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청년부부 가구는 내부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부부 가구의 소득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따라서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6]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구성 비율(2018)**

(단위: %)

구분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청년+부모	기타청년
20대	근로소득	85.9	95.3	67.2	70.4	69.9
	사업소득	10.1	4.6	23.4	20.8	17.4
	재산소득	0.5	0.2	0.4	6.0	3.9
	공적이전소득	0.8	0.0	6.0	2.4	6.7
	사적이전소득	2.8	0.0	3.0	0.5	2.0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30대	근로소득	81.6	83.1	81.1	64.4	74.8
	사업소득	15.1	13.7	13.7	17.7	18.0
	재산소득	1.8	2.5	2.2	9.1	3.0
	공적이전소득	0.6	0.2	2.2	8.1	3.2
	사적이전소득	0.8	0.4	0.8	0.7	1.1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앞의 [표 3-3] 참조.

**[표 3-7]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5분위배율(2018)**

구분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청년+부모	기타청년
20대	6.06	2.96	4.14	5.40	4.55
30대	5.73	4.48	4.51	4.57	5.35
전체	5.85	4.45	4.53	5.28	5.31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전체는 20대와 30대 전체를 말함.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앞의 [표 3-3] 참조.

## (2) 청년세대의 자산 불평등

[표 3-8]은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청년 가구의 유형별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보유액의 분포를 구간별로 살펴본다. 2019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20대 청년단독 가구가 81.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 청년단독 가구는 63.7%를 차지했다. 한편, 전체 가구 가운데 순자산

1억원 미만 가구의 비율은 34.5%이다. 그리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30대 청년단독 가구가 6.7%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가구의 순자산 마이너스 가구 비율은 3.0%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거나 기타청년 가구를 제외하면,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청년 가구는 20대는 청년부부+자녀 가구가 2.3%로 가장 높았고, 30대도 청년부부+자녀 가구가 13.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 가구 가운데 5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19.3%이므로, 30대 청년부부+자녀 가구 가운데 상대적인 고자산층이 다른 청년 가구유형에 비해서는 많지만 전체 가구에서보다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표 3-8] 청년 가구의 유형별 순자산 보유액 분포

(단위: %)

순자산 (억원)	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 이상	평균 (만 원)	중앙값 (만 원)	
20대	청년단독	4.0	77.3	14.7	1.8	0.4	0.9	0.9	5,977	3,592
	청년부부	4.3	65.2	26.1	4.3	0.0	0.0	0.0	6,502	4,533
	청년부부+ 자녀	2.3	53.5	27.9	2.3	9.3	2.3	2.3	12,085	7,008
	청년+부모	2.9	19.2	14.8	14.5	11.5	7.5	29.7	47,487	30,070
	기타청년	4.3	43.2	23.1	13.0	5.2	2.6	8.6	20,845	11,537
30대	청년단독	6.7	57.0	22.1	7.2	3.2	2.0	1.7	10,529	6,630
	청년부부	2.1	30.2	28.5	22.3	6.2	4.5	6.2	21,470	18,330
	청년부부+ 자녀	2.0	21.2	24.6	19.2	11.7	7.8	13.4	28,769	21,572
	청년+부모	1.9	17.6	16.3	14.5	11.1	8.4	30.2	49,057	31,360
	기타청년	2.9	26.7	23.2	14.7	9.4	7.3	15.8	31,582	19,882
전체 가구	3.0	31.5	18.5	13.0	8.9	5.9	19.3	35,281	20,05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앞의 [표 3-3] 참조.

한편, 이철승·정준호(2018)는 2010~2017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대 별 순자산 지니계수를 살펴봤는데, 1980~1990년대 출생 세대에서 중장년 혹은 노

년층 세대에 필적하는 자산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은 2012년도와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0세 연령계층별 순자산 지니계수와 순자산 상위 10% 경계값(p90)과 하위 10% 경계값(p10) 비율(p90/p10)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30세 미만 가구주 연령대의 순자산 불평등도가 2012년도 기준 30대와 2019년도 기준 30대와 40대 가구주의 불평등도를 능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U자형 불평등 지표는 자산 불평등의 재생산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철승·정준호, 2018).

[표 3-9] 연령대별 순자산 지니계수와 p90/p10

구분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2012년	지니계수	0.55	0.50	0.57	0.59	0.66
	p90/p10	31.5	17.7	34.9	37.6	110.2
2019년	지니계수	0.55	0.49	0.52	0.54	0.59
	p90/p10	22.8	18.2	18.6	23.7	47.8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3-10]과 [표 3-11]은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및 청년 가구의 유형별 자산과 부채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청년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청년 가구의 유형에 따른 자산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청년단독 가구가 전체 가구 평균 대비 각각 19.0%와 31.3%로 나타나 다른 가구유형보다 가장 자산 형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저축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의 청년단독 가구가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면 가장 낮았다.

[표 3-10] 전체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만 원, %)

구분	자산 (A)	저축액 (B)	부채 (C)	금융부채 (D)	부채/자산 (C/A)	금융부채/저축액 (D/B)
2019년	43,191	7,873	7,910	5,755	18.3	73.1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3-11] 청년 가구의 유형별 자산 및 부채 현황과 전체 대비 배율

(단위: 만 원, %)

구분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청년+부모	기타청년	
2019 년	20 대	자산(A)	8,218	11,045	18,216	58,477	26,246
			19.0	25.6	42.2	135.4	60.8
		저축액(B)	2,368	3,339	3,635	11,992	4,314
			30.1	42.4	46.2	152.3	54.8
		부채(C)	2,241	4,543	6,131	10,990	5,401
			28.3	57.4	77.5	138.9	68.3
	금융부채(D)	2,234	4,543	6,110	8,024	4,602	
		38.8	78.9	106.2	139.4	80.0	
	C/A	27.3	41.1	33.7	18.8	20.6	
	D/B	94.3	136.1	168.1	66.9	106.7	
	30 대	자산(A)	13,537	31,344	40,123	56,943	40,809
			31.3	72.6	92.9	131.8	94.5
		저축액(B)	3,718	5,473	6,301	10,270	7,147
			47.2	69.5	80.0	130.4	90.8
부채(C)		3,008	9,874	11,354	7,886	9,227	
		38.0	124.8	143.5	99.7	116.7	
금융부채(D)	2,609	8,228	9,462	4,818	7,249		
	45.3	143.0	164.4	83.7	126.0		
C/A	22.2	31.5	28.3	13.8	22.6		
D/B	70.2	150.3	150.2	46.9	101.4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앞의 [표 3-3] 참조. 자산, 저축액, 부채, 금융부채 항목 각각의 아래쪽 음영 부분은 전체 가구의 자산, 저축액, 부채, 금융부채 각각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유형별 자산, 저축액, 부채, 금융부채의 평균 비율임.

다음으로, 부채를 살펴보면, 20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를 제외할 때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30대는 청년부부+자녀 가구가 전체 가구 평균보다 43.5%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부부 가구가 24.8%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만을 살펴보면, 이런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 청년부부+자녀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 금융부채 대비 64.4%나 높다.<sup>16)</sup>

<sup>16)</sup> 참고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7.9%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60% 수준에 머물던 비율이 이후부터 줄곧 상승한 결과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3%인데, 20대 청년 가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청년 가구가 이보다 훨씬 높은 부채 비율을 보여준다. 특히 20대 청년부부 가구는 이 비율이 41.1%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의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30대도 청년부부 가구는 부채 비율이 31.5%로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전체 가구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3.1%인데,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와 30대 청년단독 가구를 제외하면 이 비율이 전체 가구의 평균 비율을 훨씬 상회한다. 특히, 20대와 30대 모두 청년부부 및 청년부부+자녀 가구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50% 안팎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20대와 30대의 청년부부 및 청년부부+자녀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표 3-2]에서 소득과 자산의 관계를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로 살펴본 있었는데, [표 3-12]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20대와 30대 청년 가구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는 20대와 30대 모두 2012년과 2019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고, 근로소득은 20대에서는 순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했지만, 30대에서는 상관관계가 다소 강화되었다. 사업소득은 20대와 30대 모두 순자산과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약했다. 한편, 재산소득과 순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20대와 30대 모두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 3-12] 청년세대의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구분	소득	순자산	
		2012년	2019년
전체	가처분소득	0.57*	0.55*
	근로소득	0.24*	0.27*
	사업소득	0.24*	0.23*
	재산소득	0.42*	0.63*
20대	가처분소득	0.45*	0.45*
	근로소득	0.38*	0.33*
	사업소득	0.11	0.11
	재산소득	0.19*	0.50*
30대	가처분소득	0.57*	0.54*
	근로소득	0.38*	0.43*
	사업소득	0.11*	0.03
	재산소득	0.28*	0.5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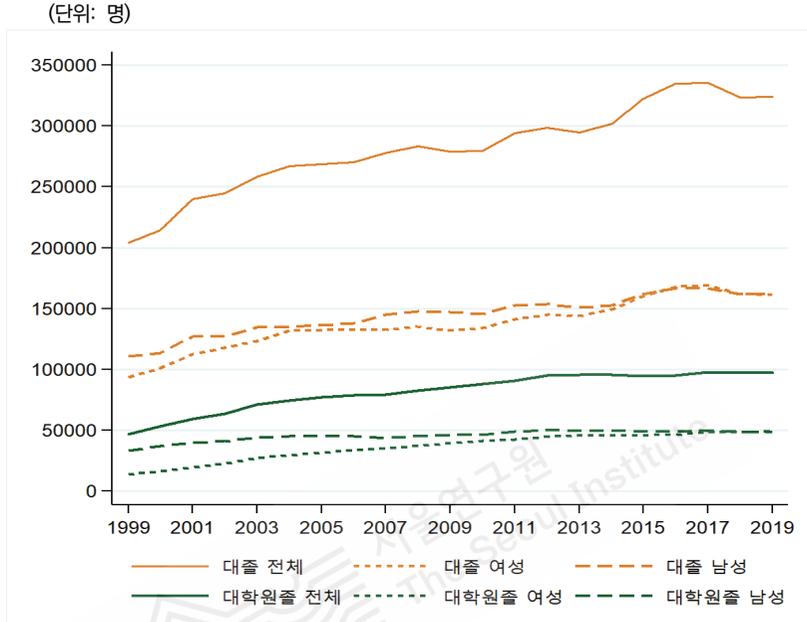
주: \*  $p < 0.001$ . 해당 연도는 자산 기준 연도로 그해 3월 말 기준, 소득은 그 전년도 기준임.

## 2\_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

### 1) 교육과 노동시장의 과거와 현재

이 절에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를 파악하고 청년세대의 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살펴본다. 먼저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 추이로 본 교육의 현황은 [그림 3-3]과 같다.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20만 명 수준이던 일반대학 졸업자 수가 2019년 약 32만 명이 되었고(약 58% 증가), 대학원 졸업자 수는 1999년 4만 7천여 명 수준에서 2019년 9만 7천여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이 되었다(약 107% 증가). 한편, 일반대학 및 대학원 모두의 졸업자 수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2010년대 후반에는 성별 격차가 거의 사

라졌다. 2000년대 이후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노동시장 진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쟁은 8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2000년대보다 9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2010년대, 특히 2010년대 후반기에 더욱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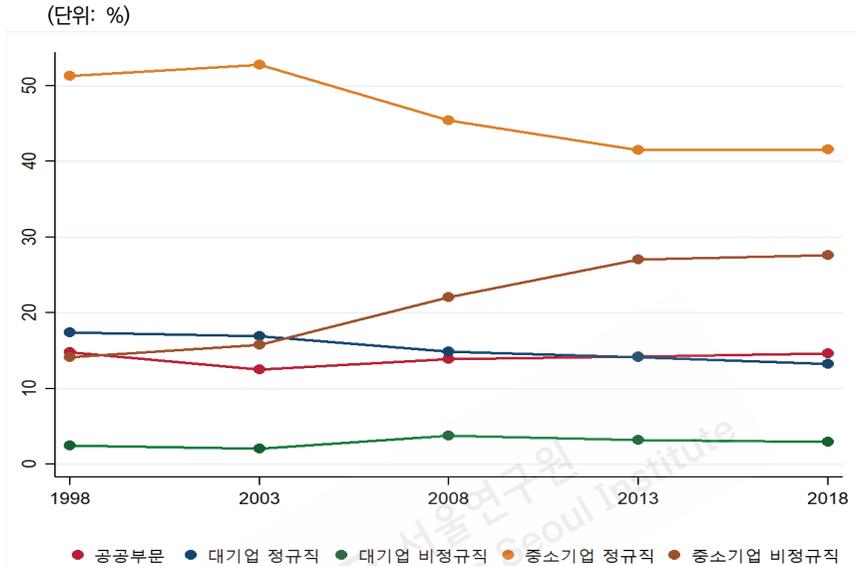
주: 졸업자 수는 해당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포함.

[그림 3-3]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 추이

다음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 구성 비율의 추이로 노동시장 전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면 [그림 3-4]와 같다.<sup>17)</sup> 이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노동시장 구조의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중소기업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2003년 약 53%에 달했던 중소기업 정규직 비율은 2018년 약 42%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03년 약 16%였던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 약 2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2003년 약 17%에서

17) 좀 더 정확한 임금노동자의 구성 비율은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나 고용형태 공시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자료들은 2013년 이전의 정보가 없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의 전반적인 임금노동자 구성 비율의 변화를 살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다.

2018년 약 13% 수준으로 떨어졌다.<sup>18)</sup> 이를 종합하면, 최근 고학력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화 추세 속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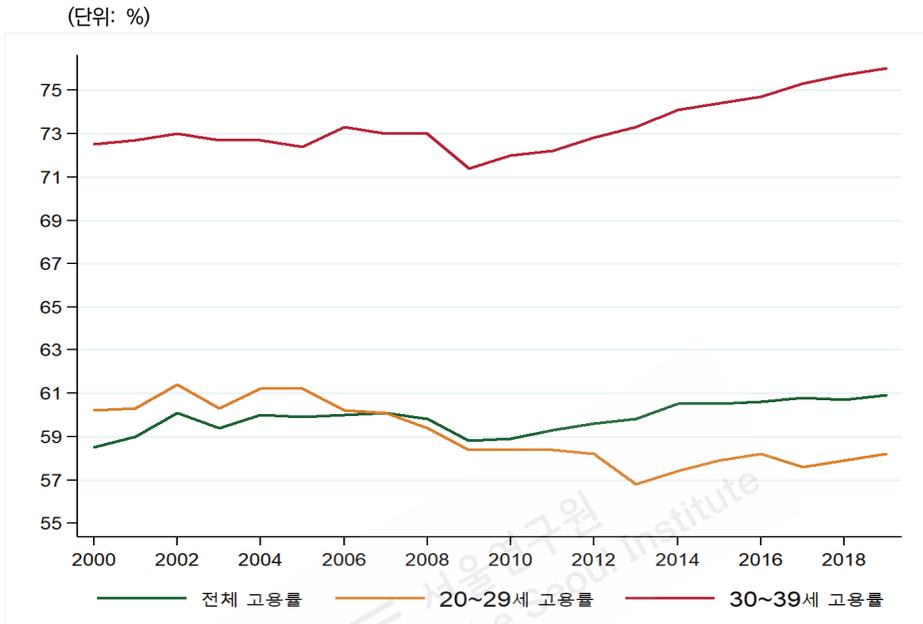
주: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정부기관 종사자임. 대기업 종사자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이고, 중소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임.

[그림 3-4] 임금노동자 하위집단별 비율 추이

한편, [그림 3-5]는 20대와 30대의 청년 고용률 추이를 전체 고용률 추이와 비교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30대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정체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증가한다. 반면, 20대

<sup>18)</sup> 고용정책기본법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에 따르면, 2014년의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14.6%,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8.6%(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2.4%)이며, 2019년의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14.5%,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9.1%(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6.4%)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임금노동자 구성 비율 추정은 대기업 정규직은 비교적 현실과 가깝지만, 3%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기업 비정규직은 조사방식 등의 한계로 상당히 과소추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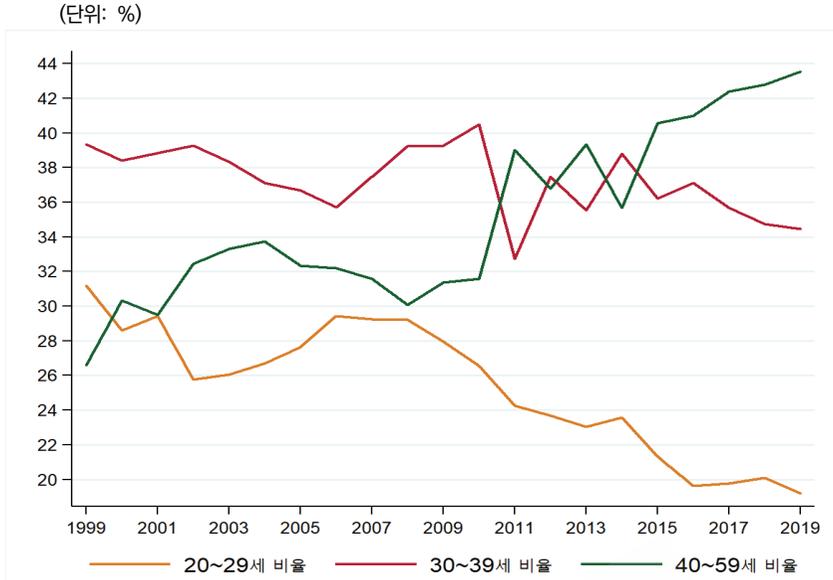
의 고용률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는 앞서 살펴본 고학력 청년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연령대별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 청년 고용률 추이

앞서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같은 기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연령대별 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 3-6]을 보면, 30대의 비율은 전체 기간에 걸쳐 등락이 있는 완만한 내림세가 나타났지만, 20대의 비율은 2000년대 초중반 U자형 곡선을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급격한 내림세를 보인다. 1999년 31.2%에 달하던 20대의 비율이 2019년 19% 수준으로 떨어져 약 12%나 하락했지만, 40~59세 중장년층의 비율은 1999년 약 27% 수준에서 2019년 약 44%로 약 17%나 증가하면서 거의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즉, 대기업 정규직 비율이 최근까지 점차 축소됐는데, 중장년층은 대체로 자리를 보전하면서 상대적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30대의 비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20대의 비율은 급감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3-6] 5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 중 청년과 장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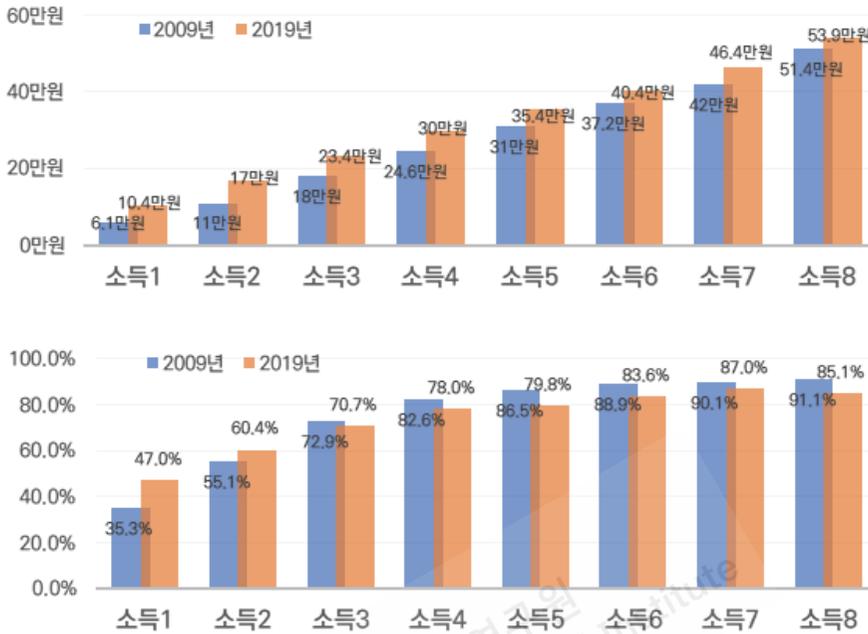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가 최근 20여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90년대생 청년의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특히, 90년대생인 최근 20대 청년이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즉, 최근 20대 청년 상당수가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며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더욱 배제되고 있다.

## 2) 청년세대의 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

### (1) 청년세대의 교육 불평등

다음으로 청년세대 내부의 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좀 더 들여다보자. 먼저 교육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현황을 파악하면 [그림 3-7]과 같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지위와 사교육비 지출 사이에 거의 정비례에 가까운 확연한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지출과 같이 정비례에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참여율 또한 높아진다. 한편,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경향은 지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사교육 참여율이 소득 중상위계층에서 다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분포가 소득에 더욱 비례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자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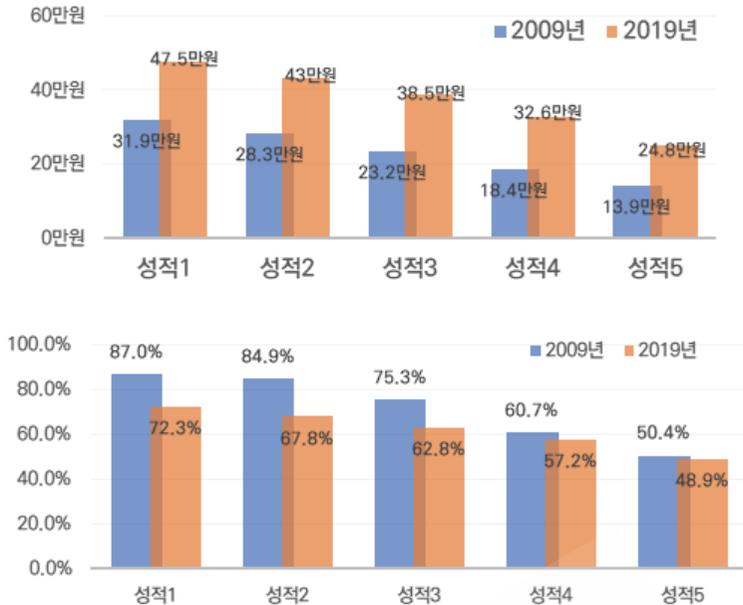
주: 2009년의 소득1은 100만 원 미만, 소득2는 100~200만 원 미만, 소득3은 200~300만 원 미만, 소득4는 300~400만 원 미만, 소득5는 400~500만 원 미만, 소득6은 500~600만 원 미만, 소득7은 600~700만 원 미만, 소득8은 700만 원 이상임. 2019년의 소득1은 200만 원 미만이고, 소득2부터는 모두 100만 원씩 증가함.

[그림 3-7] 소득계층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위)과 참여율(아래)

다음으로 [그림 3-8]은 성적순위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현황을 보여준다. 성적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비례적으로 높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sup>19)</sup>

[그림 3-7]과 [그림 3-8]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고 사교육비 지출 또한 많으며, 이러한 높은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성과 거의 정비례에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성적이 학생 개인의 뛰어난 학습 능력이나 재능,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sup>19)</sup> 참고로, 2009년과 2019년 사이의 격차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 성적만을 조사함으로써 생긴 집계 방식의 차이가 큰 원인이다.



자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주: 2019년 조사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 집계함(2018년부터 고등학생만 성적 조사). 성적1은 상위 10% 이내, 성적2는 10~30%, 성적3은 31~60%, 성적4는 61~80%, 성적5는 하위 20% 이내임.

[그림 3-8] 성적순위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위)과 참여율(아래)

한편, 구인회·김정은(2015)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진학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자료(2004~2014)를 사용하여 대학진학 결과에 가족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시절의 가족소득이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영향은 대학진학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나타났다. 또한, 문혜진 외(2015)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1999년과 2009년의 만15~18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대학진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코호트에서 4년제 대학진학에 미치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양부모 여부 등 가족 구조의 영향력은 최근 코호트에서 크게 약화된 현상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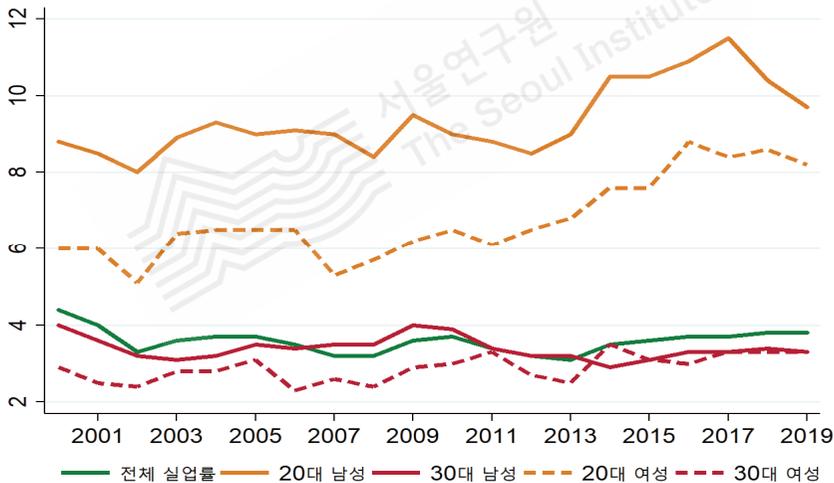
앞의 그림과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의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과 학생의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으로 표현되는 교육성취에도 큰 격차를 불러온다. 이는 한국에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 (2)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불평등

청년세대 내부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00년대 이후 청년세대 내부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추이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2009년과 2018년도 조사를 비교하면서 성별, 연령대,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와 성별, 학력, 고용형태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의 격차를 파악한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3-9]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20대와 30대의 실업률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30대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20대의 실업률은 전체 및 30대의 실업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20대의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30대는 큰 변화 없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한다. 셋째, 실업률의 성별 격차가 30대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20대에서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나 20대 남성의 실업률이 20대 여성보다 훨씬 높다.<sup>20)</sup>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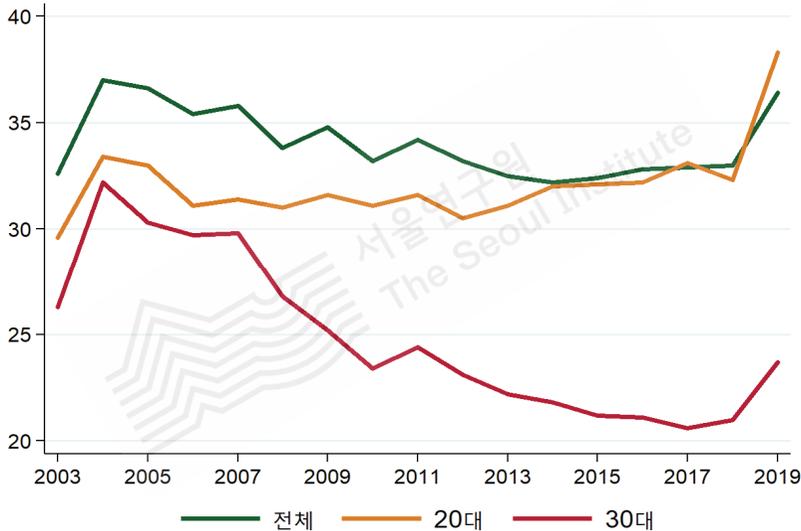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9] 성별, 연령대에 따른 실업률 추이

20) 한편,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공식실업률에서 나타난 이러한 추세가 체감실업률에서도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대의 공식실업률은 10.1%이지만, 실업자의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확장실업률은 24.4%에 이른다(이기쁨, 2019). 이 확장실업률은 2015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 1, 2, 3 가운데 고용보조지표 3의 수치로, 기존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를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인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3-10]은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임금노동자 전체로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를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보면, 서로 상당히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20대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4년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 평균 비율까지 따라잡았고, 30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함께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까지 큰 차이가 없이 함께 등락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그 격차가 점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해 2007년 1.6%에 불과하던 격차가 2019년 14.6%까지 벌어진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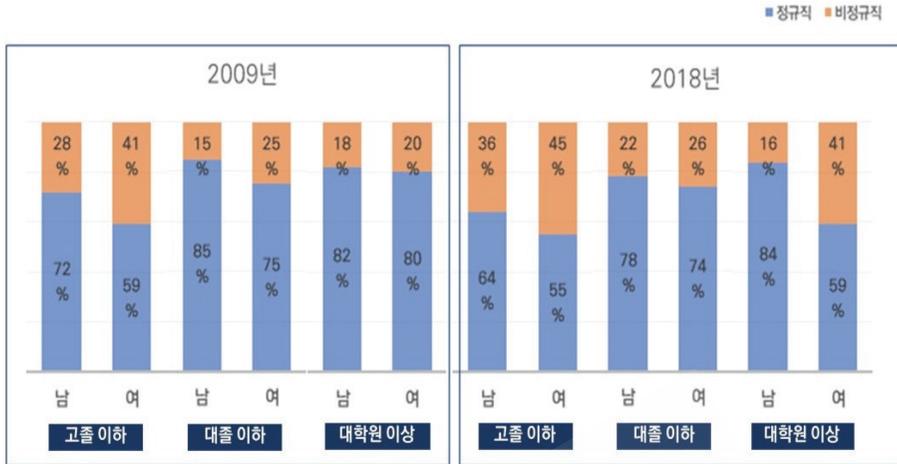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3-10]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그림 3-11]부터 [그림 3-14]까지는 청년세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가 성별, 연령대,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어떤 격차를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먼저 [그림 3-11]은 성별과 학력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와 그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저학력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2009년과 2018년의 조사를 비교하면, 고졸 이하와 대졸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했지만, 대학원 이상에서는 남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18%에서 16%로 소폭 감소했고, 여성은 20%에서 41%로 대폭 늘어났다(2017년에는 37%). 다만, 대학원 이상은 표본 수의 한계(응답자 100명 이하)로 오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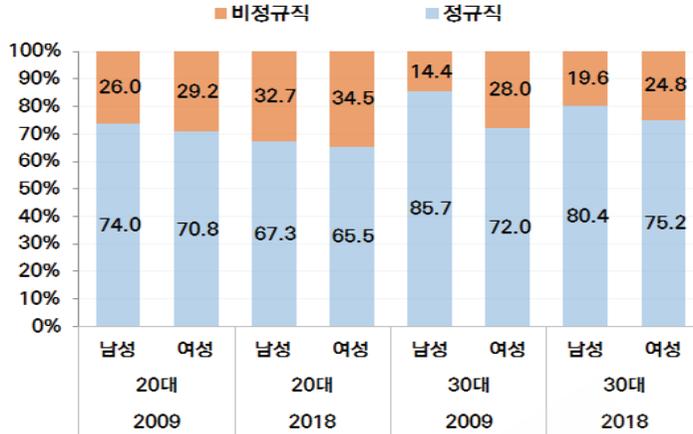
주: 고졸 이하는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중 모두를, 대졸 이하는 2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중 모두를, 대학원 이상은 대학원 석사와 박사의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중 모두를 말함.

### [그림 3-11] 청년세대의 성별, 학력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그림 3-12]는 지난 10여 년간 고용형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성별,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본 것이다. 우선 30대 여성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8년의 30대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19.6%이며, 20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2.7%로 13.1%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지난 2009년의 차이인 11.6%보다 더 크다. 한편, 30대 여성을 제외하고 세대와 성별로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늘어난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남성 6.7%, 20대 여성 5.3%, 30대 남성 5.2%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절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상의 모든 구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는데, 20대보다 30대에서 그 격차가 다소 크지만, 20대의 전반적인 비정규직 비율이 30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형태가 아닌 종사상 지위를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20대 남성의 상용직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임시직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여성은 상용직 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임시직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 30대 남성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고, 30대 여성은 상용직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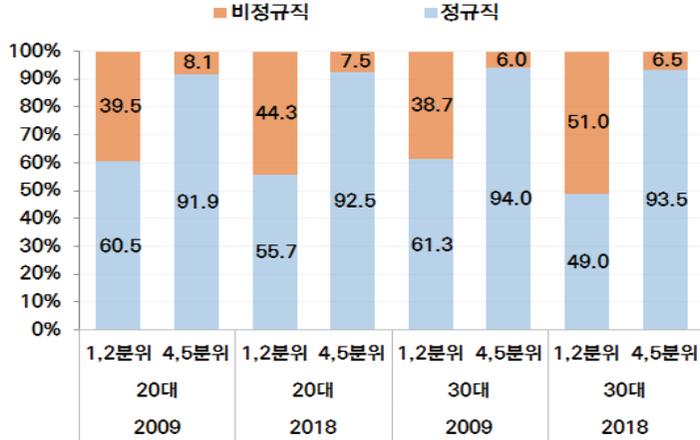
상당히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즉, 20대 남성의 종사상 지위가 최근 크게 불안정해졌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그림 3-12] 청년세대의 성별, 연령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그림 3-13]은 고용형태의 차이와 그 변화를 연령대와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득수준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득 하위 분위의 비정규직 비율이 소득 상위 분위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소득 상위 분위에서는 2009년과 2018년 사이의 차이는 물론 20대와 30대의 차이도 미미하지만, 소득 하위 분위에서 20대와 30대 모두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더욱 늘어났다. 특히, 30대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12.3%나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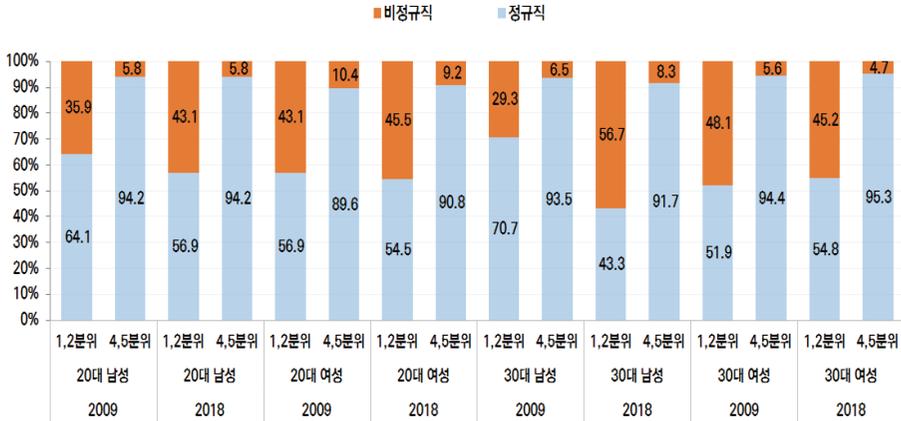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주: 12분위는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가운데 1분위와 2분위를 합한 것이며, 45분위는 4분위와 5분위를 합한 것임.

**[그림 3-13] 청년세대의 연령대, 소득수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그림 3-14]는 고용형태의 격차와 그 변화를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20대의 소득 1~2분위에서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늘어난 데에는 성별 격차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20대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2.4% 증가했지만, 20대 남성은 7.2%나 늘어났다. 다른 하나는 30대 소득 1~2분위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 역시 30대 남성의 비정규직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30대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2.9% 감소했지만, 30대 남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27.4%나 증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10여 년간 청년세대 내의 비정규직 증가는 소득 하위 분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저소득 여성보다는 저소득 남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20대의 저소득 남성보다는 30대의 저소득 남성이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같은 조사를 이용하여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0대 저소득층 남성과 30대 저소득층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20대 소득 1~2분위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5년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요인은 좀 더 탐색이 필요하지만,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소득 하위 분위에 속하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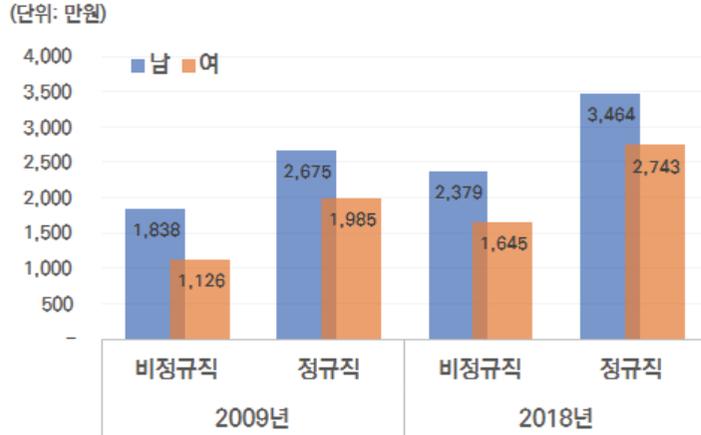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주: 12분위는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가운데 1분위와 2분위를 합한 것이며, 45분위는 4분위와 5분위를 합한 것임.

#### [그림 3-14] 청년세대의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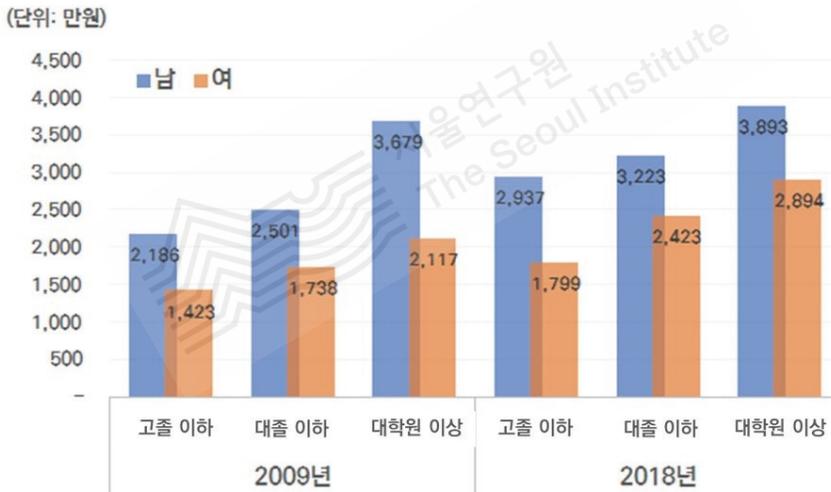
다음으로 청년세대의 연간 근로소득 격차를 성별, 학력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자. 먼저 [그림 3-15]는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형태별 연간 근로소득 격차를 보여준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 특징은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남성 임금의 약 70% 수준임에 반해,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 임금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16]은 청년세대의 성별과 학력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의 격차를 보여준다.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성별과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지만, 2009년의 격차에 비해 2018년의 격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는 성별 임금 격차가 2009년 1,562만 원에서 2018년 999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고졸 이하 저학력자는 성별 임금 격차가 2009년 763만 원에서 2018년 1,138만 원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둘째, 남성 가운데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임금 격차는 2009년 1,493만 원에서 2018년 956만 원으로 많이 축소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여성 가운데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임금 격차는 2009년 694만 원에서 2018년 1,095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주: 단위는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

[그림 3-15]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 변화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주: 단위는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 고졸 이하는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중 모두를, 대졸 이하는 2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중 모두를, 대학원 이상은 대학원 석사와 박사의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중 모두를 의미함.

[그림 3-16] 청년세대의 성별, 학력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 변화

### 3\_주거와 가족형성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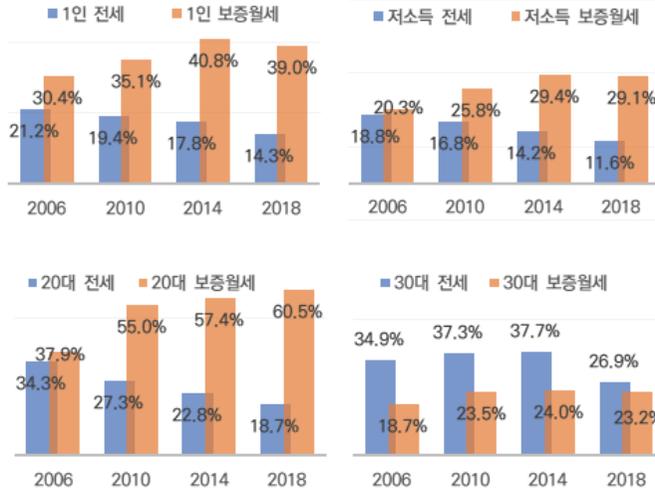
#### 1) 주거와 가족형성의 과거와 현재

이 절에서는 주거와 가족형성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청년세대의 주거 및 가족형성 불평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먼저 주거 불평등은 여러 층위에 걸쳐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거 면적의 격차, 소득계층에 따른 점유형태의 격차, 그리고 가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 비율의 격차 등이 비교적 널리 쓰이는 관련 지표이다.<sup>21)</sup>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은 2006년 하위계층(소득 1~4분위) 49.7%, 상위계층(소득 9~10분위) 67.0%였지만 지난 2018년에는 각각 47.2%와 75.2%로 확인됐다. 즉,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 점유는 감소했고, 소득 상위계층의 자가 점유는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의 상위 20% 가구의 특성 변화를 보면, 서울은 2008년 38.4%에서 2018년 41.6%로 늘었고, 20대 가구주의 비율은 2008년 13.7%에서 2018년 24.5%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RIR 상위 20% 가구 중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8년 7.8%로 늘었고,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2008년 69.2%에서 2018년 71.7%로 증가했다(조윤지, 2020).

한편,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14.4%에 불과하던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28.6%로 급격히 증가했다(서울은 2006년 14.55%에서 2018년 31.04%로 증가함). 또한, [그림 3-1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인 가구 가운데 전세 가구는 줄어든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득 하위계층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달리 20대 청년세대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의 비율이 같은 기간 약 23%나 늘어났다. 이는 주거비 부담 상승이 20대의 저소득 1인 가구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성장 경제의 지속 속에 월세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21) 덧붙여, 주거 불평등은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위 소득계층은 초고층 수상복합 건축물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밀집하고, 하위 소득계층은 노후불량주택 지역 등으로 밀집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김동한·고영화, 2017). 또한,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부로 밀어내면서 계층 간 주거지와 학군의 분리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저소득계층은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1~4분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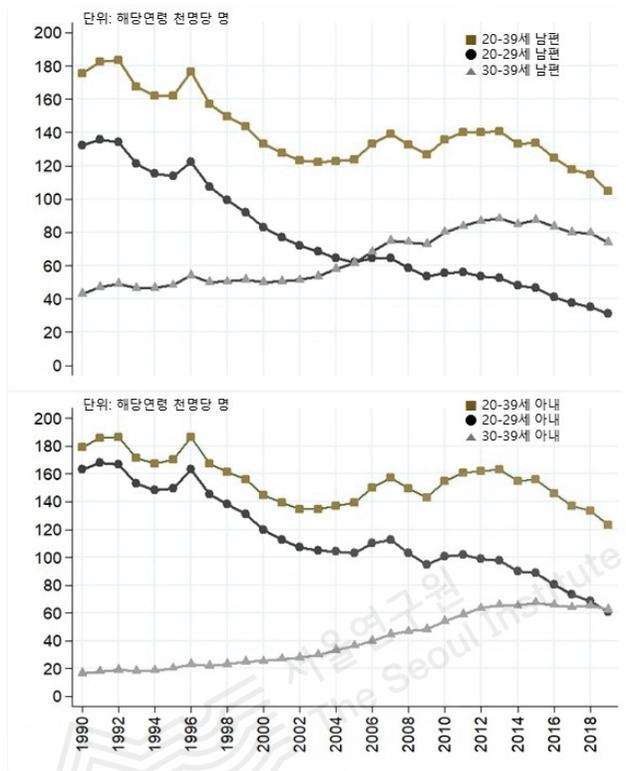
[그림 3-17] 1인 가구, 소득, 연령대별 전세 및 보증월세 비율 추이

결혼과 출산으로 대표되는 가족형성의 문제에서도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부터 문화와 가치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많은 변화가 영향을 끼쳐 비혼 청년의 증가와 초(超)저출산 현상이 확인됐다. [그림 3-18]은 199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혼인율 추이를 보여준다. 20~39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율이 꾸준히 하락했는데,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의 혼인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여성은 1990년경 약 8배에 달하던 20대와 30대의 혼인율 격차가 2019년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고, 남성은 2000년대 중반 20대와 30대의 혼인율이 역전되었다. 한편, 30대 남성과 여성의 혼인율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는 만혼 현상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20대 혼인율의 하락 폭이 너무 커 청년세대 전체의 혼인율은 내림세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의 혼인 건수는 239,159건으로 1990년 399,312건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연령대별 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1993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가운데 20대 남성은 약 467만 명이고 20대 여성은 약 441만 명인데,<sup>22)</sup> 2019년에는 각각 357만 명과 321만 명으

<sup>22)</sup>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 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2019년 1월 1일과 2019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의 산술평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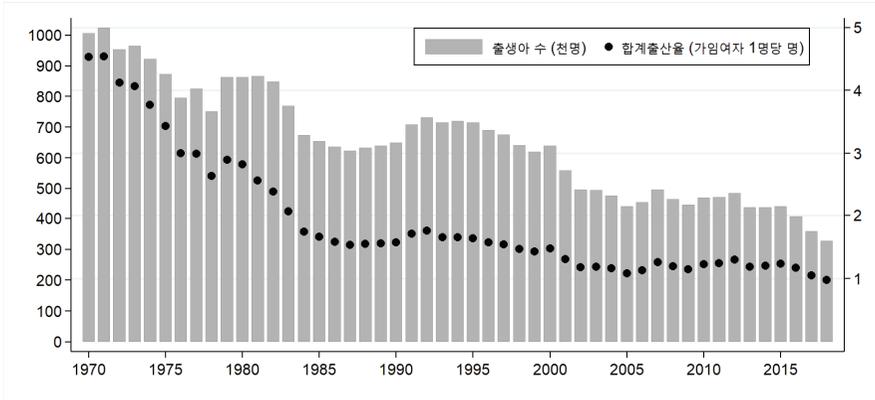
로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3-18]에서와 같이 해당연령 천명당 결혼한 사람의 수를 살펴보는 것이 청년세대의 혼인 추이 파악에 적합하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18] 한국의 성별, 연령대에 따른 혼인율 추이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보지만, 한국은 현재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7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내려가면 통상 초저출산 사회라 불리는데, [그림 3-19]가 보여주듯이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한국은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 이하를 기록한 나라가 되었다. 2019년에는 이 수치가 더욱 떨어져 0.92명이 되었다. 한편, 현재 20대의 주축을 이루는 90년대 초중반생이 30대의 주축인 80년대 중후반생보다 많다는 점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20대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자료: 통계청, 「2018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주: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대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이는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그림 3-19] 한국의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대학 진학의 일반화 등으로 인한 총 교육 연한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 일과 양육 병행 조건의 열악함, 높은 주거비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등이 있다. 문화와 가치관의 영역에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이러한 현상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경희(2019)의 청년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대와 30대 청년의 절반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결혼에 대한 탈전통적이고 탈벌률혼 지향성이 최근 더욱 강해졌다. 자녀를 가질 의향 또한 절반 이하로 나타났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20대와 30대 여성의 90%가 동의했다. 이혼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최근 청년세대 내에서 더욱 증가했다.

## 2) 청년세대의 주거와 가족형성 불평등

### (1) 청년세대의 주거 불평등

다음으로 청년세대의 주거와 가족형성 불평등을 좀 더 들여다보자. 먼저 청년의 주거 불평등을 대표적인 지표인 주거면적, 가구의 주거면적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주거면적,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3]에

따르면, 2018년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의 25.5%는 20대 청년 가구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의 12.1%에 비해 두 배 이상 매우 많이 증가한 수치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반면, 주거면적 상위가구 중 20대와 30대 청년 가구주의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표 3-13] 청년 가구주의 주거면적 상·하위 20% 변화

(단위: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08년	주거면적 하위 20%	0.1	12.1	21.4	19.1	19.0	13.2	11.9	3.2	100
	주거면적 상위 20%	0.0	1.1	13.9	28.1	23.8	19.1	12.3	1.8	100
2018년	주거면적 하위 20%	1.2	25.5	18.5	15.5	18.6	11.4	5.9	3.4	100
	주거면적 상위 20%	0.0	0.7	10.2	26.1	29.0	19.8	10.2	4.0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출처: 조윤지(2020)

[표 3-14]는 청년 가구주의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8년 하위 20%의 20대 비율은 2008년 비율의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1인당 주거면적 상위 20%에서는 20대와 30대 비율 모두 2018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3-15]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보여주는데,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상위 20% 가운데 20대 청년 가구주의 비율이 2008년 13.7%에서 2018년 24.5%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2008년 19.6%에서 2018년 13.9%로 감소했다. 2008년에는 RIR 상위 20% 가운데 30대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는데, 2018년에는 20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 변화**

(단위: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08년	1인당 면적 하위 20%	0.4	4.2	27.5	34.9	17.0	8.9	5.7	1.4	100
	1인당 면적 상위 20%	0.1	4.1	8.5	8.6	16.8	27.3	27.8	6.7	100
2018년	1인당 면적 하위 20%	0.5	8.3	20.7	32.4	25.7	8.6	2.9	1.0	100
	1인당 면적 상위 20%	0.1	3.5	7.6	10.9	20.4	25.4	19.6	12.7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출처: 조윤지(2020)

**[표 3-15] 청년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상·하위 20% 변화**

(단위: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08년	RIR 하위 20%	0.1	8.7	26.8	33.2	19.8	6.7	3.7	1.0	100
	RIR 상위 20%	1.1	13.7	19.6	18.5	12.3	14.3	15.5	4.9	100
2018년	RIR 하위 20%	0.1	10.9	22.2	26.9	26.0	10.0	2.9	1.1	100
	RIR 상위 20%	1.9	24.5	13.9	15.3	16.3	13.4	9.6	5.0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출처: 조윤지(2020)

[표 3-16]은 청년 가구의 유형별 분포를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보여준 것으로, 먼저 청년단독 가구를 살펴보면, 20대는 지난 2008년 청년이 속한 전체 가구 가운데 약 10%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약 24%로 많이 증가했고, 30대 청년단독 가구 또한 약 6%에서 약 15%로 증가했다. 청년부부 가구는 20대 비율은 소폭 줄어들었고, 30대 비율은 소폭 늘어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혼율의 하락 및 만혼 현상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청년부부+자녀 가구의 비율은 20대와 30대 모두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청년은 60%가 넘고, 30대 또한 20%가 넘는데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다.

[표 3-16] 청년 가구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구분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청년+부모	기타청년	계
2008년	20대	10.28	2.05	3.99	65.34	18.33	100
	30대	6.01	5.73	39.80	24.08	24.38	100
2018년	20대	23.55	1.66	2.04	62.42	10.34	100
	30대	15.19	8.55	32.90	23.56	19.80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청년 가구의 유형 구분기준은 [표 3-3] 참조.

[표 3-17]은 청년 가구의 유형별 주거 점유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청년단독 가구는 20대와 30대 모두 전세의 비율이 급격히 줄었고,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20대가 30대보다 그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청년부부 가구는 전세 비율이 20대와 30대 모두 급격히 줄었는데, 20대는 보증부 월세가 급격히 늘었고, 30대는 자가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청년부부+자녀 가구는 20대와 30대 모두 자가 비율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는 20대는 전세와 보증부월세 하락 폭만큼 상승한 것이고, 30대는 전세 비율의 하락 폭만큼 상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모 가구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자가와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소폭 상승했고, 전세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표 3-18]은 청년 가구의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 보증금은 30대 청년부부+자녀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증부월세의 월세 평균은 30대 청년부부+자녀 가구가 2008년 24만 원에서 2018년 35만 원으로 11만 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표 3-17] 청년 가구의 유형별 주거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청년단독	20대	2008년	2.41	28.62	51.39	4.14	13.44
		2018년	2.83	16.09	66.48	6.49	8.11
	30대	2008년	9.31	38.75	45.15	2.61	4.19
		2018년	10.65	23.99	49.90	7.63	7.83
청년부부	20대	2008년	23.06	47.32	21.19	3.99	4.44
		2018년	24.72	34.30	34.57	2.44	3.97
	30대	2008년	26.86	50.35	19.93	0.67	2.19
		2018년	40.33	39.75	16.05	0.77	3.10
청년부부 +자녀	20대	2008년	28.09	40.74	23.02	1.99	6.16
		2018년	40.95	34.27	18.82	0.52	5.43
	30대	2008년	46.78	37.15	11.80	0.58	3.69
		2018년	58.32	25.67	11.16	0.62	4.23
청년+ 부모	20대	2008년	69.25	16.24	10.57	1.34	2.60
		2018년	72.06	13.05	12.25	0.44	2.20
	30대	2008년	74.91	12.40	9.17	0.85	2.66
		2018년	75.13	10.52	12.22	0.41	1.72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주거 점유형태 구분에서 기타는 사글세, 일세, 무상 등을 포함한 것임.

[표 3-17]과 [표 3-18]을 종합하면, 30대 청년부부 가구와 20대와 30대의 청년부부 +자녀 가구의 자가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 또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청년 가구의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과 함께 주거비 부담도 더욱 양극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청년 가구의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단위: 만 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청년 단독	20대	2008년	9,982	3,728	816	31	21
		2018년	21,819	7,430	994	35	29
	30대	2008년	13,738	4,264	986	29	26
		2018년	20,531	9,153	1,462	37	31
청년 부부	20대	2008년	18,656	5,776	909	29	35
		2018년	30,464	13,994	2,539	37	49
	30대	2008년	18,082	7,031	1,861	30	24
		2018년	30,664	16,393	2,867	38	47
청년 부부+ 자녀	20대	2008년	12,853	5,546	1,550	22	27
		2018년	18,940	12,434	2,849	29	40
	30대	2008년	19,450	7,471	1,962	24	30
		2018년	29,122	19,545	5,196	35	44
청년+ 부모	20대	2008년	22,777	6,463	1,575	27	22
		2018년	33,168	18,115	3,276	34	36
	30대	2008년	20,573	5,991	1,414	25	26
		2018년	32,383	15,383	3,085	3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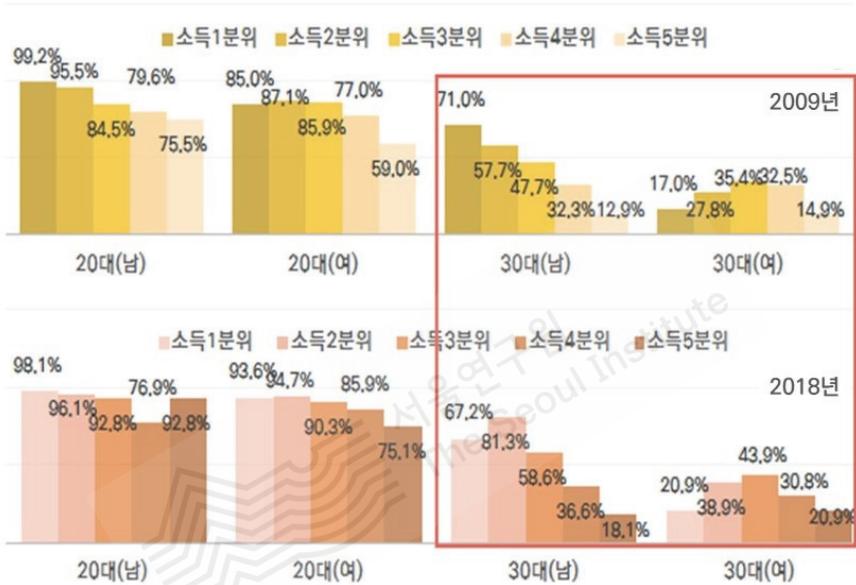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한편, 2020년 6월 한국감정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30대의 비율이 30.7%로 40대의 27.3%를 압도한다. 최근 집값 상승의 공포를 체험한 30대가 서울 아파트의 '큰 손'이 되어 이른바 '패닉바이딩(panic buy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기인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지닌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청년세대 내부의 주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측면의 문제도 심각하다.

## (2) 청년세대의 가족형성 불평등

가족형성에서의 불평등은 주로 결혼과 출산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sup>23)</sup> 먼저, [그림 3-20]은 소득수준에 따른 미혼율을

성별, 연령대에 따라 보여주면서 2009년과 2018년 조사 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미혼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2009년에 비해 소득수준과 거의 무관하게 미혼율이 전체적으로 더욱 상승한다. 소득분위와 미혼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2018년 30대 남성 소득 1분위에서 나타난 예외를 제외하면 30대 남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 30대 여성은 소득분위 중간층의 미혼율이 가장 높은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 확인됐다.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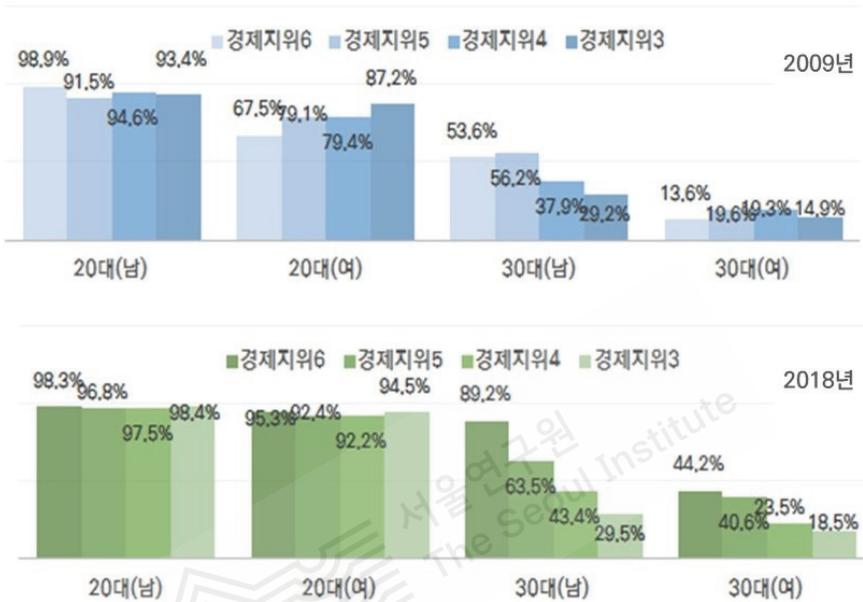
주: 소득분위는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그림 3-20] 소득분위에 따른 미혼율 비교

[그림 3-21]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미혼율을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보여 주는데, 객관적 소득분위로 파악한 경향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2018년도 조사를 보면, 20대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따른 미혼율의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30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미혼율이 현저하게 낮

23)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이혼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나 계층 사이의 격차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청년의 가족형성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10년 전인 2009년의 조사와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30대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한 사람의 미혼율이 53.6%에서 89.2%로 현격히 높아졌고, 30대 여성은 2009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18년에는 이러한 격차가 뚜렷해졌다.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연도(2009)와 21차연도(2018) 통합표본

주: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 선택지는 상(상-1, 하-2), 중(상-3, 하-4), 하(상-5, 하-6)의 6개임. 이 중 상(상-1, 하-2)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제외함.

[그림 3-2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미혼율 비교

[그림 3-20]과 [그림 3-21]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0대 남성은 객관적인 소득분위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모두에서 자신의 위치가 하락할수록 미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30대 여성은 객관적 소득분위에서 나타난 경향과는 달리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미혼율에서만 최근에 비교적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편, 20대 미혼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소득이나 기타 지위에 따른 격차가 더욱 줄었는데, 이는 20대 전체 결혼율의 대폭 하락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정패널조사 6차연도(2013년)부터 9차연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주

휘정·김민석(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만 19~39세의 청년 가운데 자가주택을 보유한 남성은 그렇지 못한 남성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약 7.2배 높았다. 또한,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 가운데 정규직 남성은 비정규직 남성보다 결혼할 확률이 약 4.6배 높았고,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 여성보다 결혼할 확률이 약 4.9배 높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가 청년의 결혼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준다. 한편, 미국은 결혼할 확률, 결혼을 유지할 확률, 이혼 후 재혼할 확률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이러한 격차는 최근 점점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Doepke & Zilibotti, 2019).

출산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계봉오·김영미(2020)의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대의 전반적인 합계출산율 수준은 시기에 따라 변화했지만, 소득분위와 합계출산율 사이의 패턴은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소득분위 하위 약 25%까지는 소득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위 약 25%부터 상위 약 25% 구간까지는 소득이 상승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마지막으로 상위 약 25% 구간부터는 소득이 상승할수록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 4\_소결

지금까지 이전의 청년세대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불평등의 변화를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묶기보다 여러 차원에서 내부 격차를 지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연령대(20대와 30대), 성별, 소득, 학력,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 등에 따른 내부 격차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또한 깊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소득과 자산 격차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불평등은 혼자 사는 청년 사이에서 가장 컸고, 청년부부 가구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다. 30대 부부 가구의 상대적 소득은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가구의 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30대 청년부부 가구는 주택 구매 등의 영향으로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부채도 많아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불평등이 30대보다 훨씬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은 예상대로 사교육, 학업성취도, 대학진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구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90년대생 청년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렸다. 그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 비율이 급감한 것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실업률도 30대와 달리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 가운데 저학력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으며, 20대 남성의 종사상 지위도 크게 불안정해졌다. 반면, 20대와 달리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30대보다는 20대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나빠졌다. 마지막으로 주거와 가족형성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성장 경제의 지속 속에 1인 가구의 급증 및 월세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가구주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이 최근에 더욱 두드러졌다. 30대 부부 가구의 자가 비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탓에 이는 주거 격차와 더불어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를 증폭시켰다.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과 더불어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던 30대 혼인율마저 2010년대 후반에 정체 내지 하락한 영향이 컸다. 20대의 결혼은 더욱 드문 현상이 되었고, 30대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야만 결혼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출산율 사이

에 비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러 차원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과거의 청년보다 오늘날의 청년, 특히 현재 90년대생인 20대 청년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주거 불평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은 예상대로 학업성취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불안정성 증가는 특히 20대 저학력 청년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가했다.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진 20대는 가족형성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고, 30대 남성은 경제력과 혼인율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인구행동의 계층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



## 04

# 청년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가능성



- 1\_청년에게 대물림되는 불평등
- 2\_끈적끈적한 바닥과 끈적끈적한 천장
- 3\_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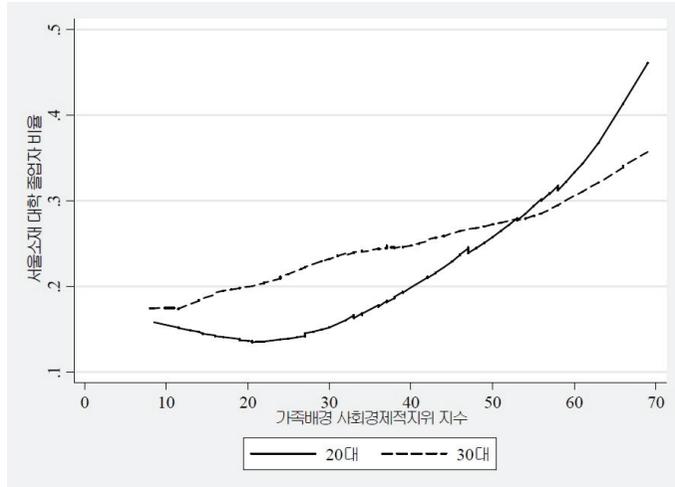
## 04. 청년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가능성

### 1\_청년에게 대물림되는 불평등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인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원에서 관찰된다. 먼저 대학진학의 격차로 나타낼 수 있는 교육 불평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동그라미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를 이용한 김영미(2016)는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의 부모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했는데, [그림 4-1]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비율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4)</sup> 또한, 이러한 경향은 30대보다 20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같은 자료를 이용한 조귀동(2020)은 대상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 좁히고 성별의 차이를 살폈는데, 20대 여성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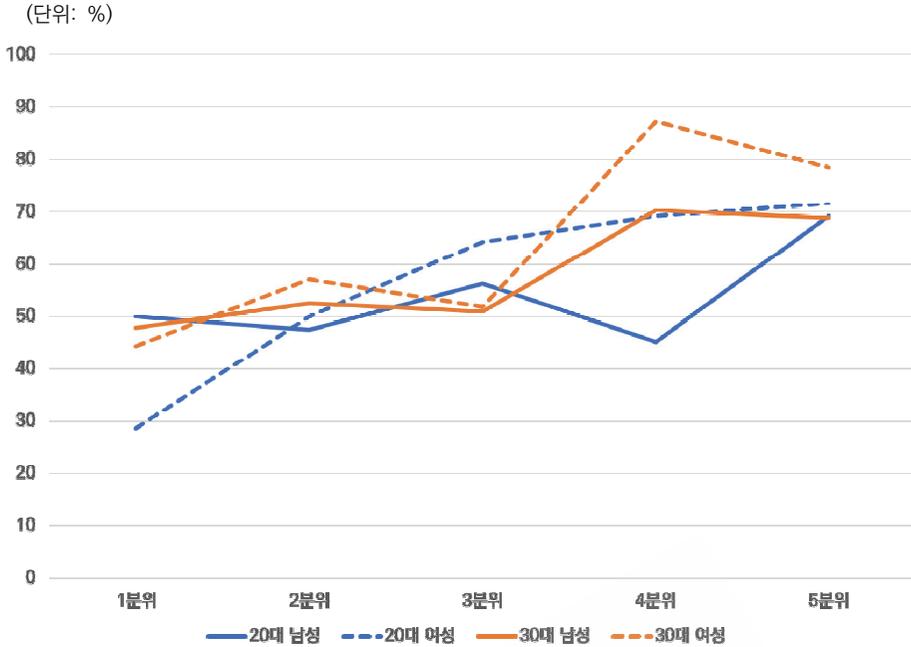
24) 이와 관련하여 최성수·이수빈(2018)은 한국사회의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8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1940년대 출생자부터 1980년대 출생자까지 포괄하는 30개의 코호트 표본을 구성해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7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증가했다가 198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정체를하거나 감소했지만, 상위권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의 격차는 1980년대 출생 코호트로 갈수록 의미 있게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졸 여부에서 전문대졸 이상 여부로, 또한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를 거쳐 다시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로 점차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김영미(2016) 35쪽.

[그림 4-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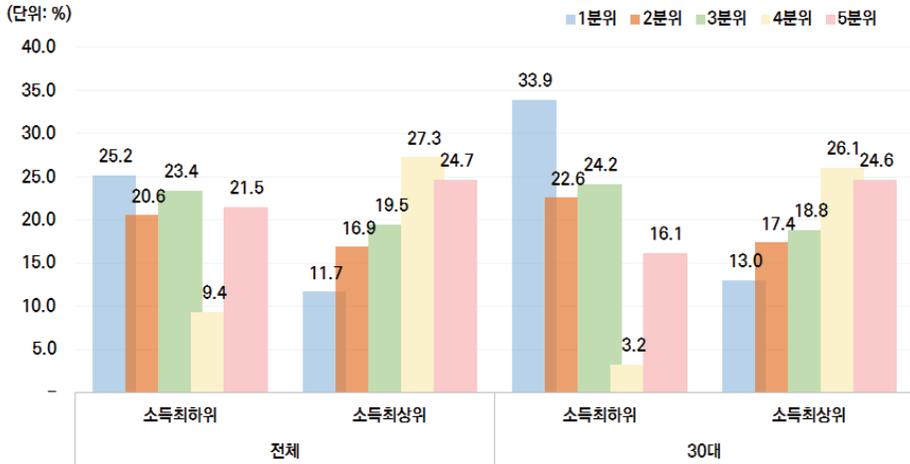
한편,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의 만 20~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결과도 [그림 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이 조사에 대해서는 제5장 제1절과 [부록] 참조). [그림 4-2]는 이 인식조사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의 부모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를 5분위수로 구분한 다음 각 분위의 서울 및 해외 대학 입학 비율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서울 및 해외 대학 입학자 수는 578명(57.8%)이고, 이 가운데 남성은 269명(54.7%)이고, 여성은 309명(60.8%)이다. 청년 전체를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은 45%가 서울 및 외국대학에 진학했고, 5분위에 속하는 청년은 그 수치가 71.8%로 큰 격차가 나타난다. 이를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30대 여성보다 20대 여성에게 좀 더 큰 영향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현재 서울에 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앞의 동그라미재단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그림 4-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서울 및 외국대학 입학 비율**

[그림 4-3]은 앞의 [그림 4-2]에서 사용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5분위수를 사용하여 자녀의 소득 층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95명이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월평균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07명을 소득 최하위로 분류하고, 월평균 소득이 451만 원 이상인 77명을 소득 최상위로 분류하여 개별 그룹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최상위층인 전체 청년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면 부모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이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 청년(595명 가운데 400명)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 최상위층의 분포는 거의 비슷하고, 소득 하위층의 분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그룹에 더욱 쏠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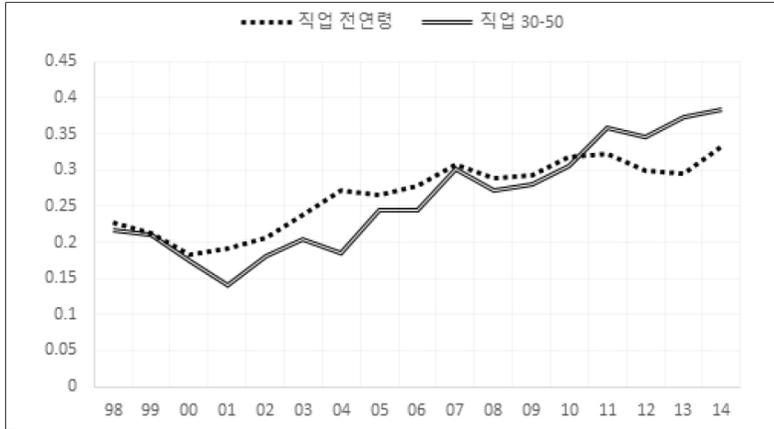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그림 4-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소득

참고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5~201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서열과 대학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17개 대학군을 분류한 다음 세대 간 이동을 분석한 이수빈·최성수(2020)는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을 졸업할 경우 상위계층 출신이 고소득 직장을 얻을 확률이 하위계층 출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위권 대학 출신이 아닐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오성재·주병기(2017)는 소득획득 기회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개천용불평등지수를 계산했다. 개천용불평등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이라는 것은 최상위 소득계층 가운데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최하위 환경에 처한 인구의 비율과 같다는 것이고, 이는 기회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개천용불평등지수 값이 1이라는 것은 최상위 소득계층 가운데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기회불평등이 가장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가구주 아버지의 직업환경으로 이 지표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40대의 소득기회 불평등도가 2001년과 2014년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했다. 즉, 2001년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명 가운데 1~2명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4명 정도가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림 4-4]에 따르면, 3~40대의 변화폭이 전 연령대의 평균적인 변화폭보다 크며, 가족 배경에 따른 소득획득 기회의 불평등이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악화했다.



출처: 오성재·주병기(2017) 17쪽.

[그림 4-4] 가구주 아버지의 직업환경하 개선용불평등지수 추이

이를 종합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 활동에까지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력의 정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25)</sup> 이러한 부모 지위의 영향은 전국 단위의 서베이 자료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교육과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서울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 2) 교육을 통한 대물림의 메커니즘

교육에서의 격차는 사실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대학 입학 직전까지의 교육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동발달 과정의 초창기에서부터 양육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양육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교육 격차로 연결된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원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대학생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해서 학업에 충실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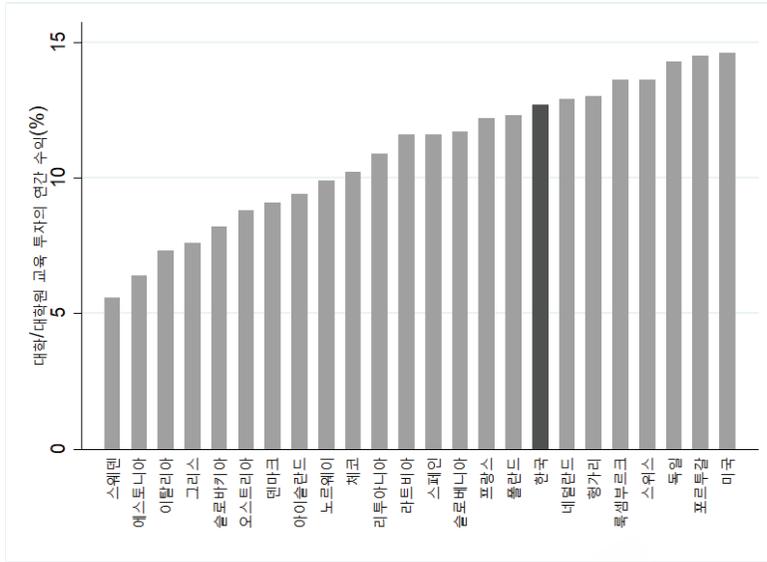
25) 2020년 9월 28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2학기 소득 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학생 2명 중 1명은 연 소득 1억 1,000만 원 이상인 8~10구간 가구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는 5.8%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연 소득 1억 7,000만 원이 넘는 10구간 가구 자녀의 비율은 25%로 전체 대학 평균인 10.3%보다 월등히 높았다. 문제는 이들 8~10구간 가구 자녀의 국가장학금 신청 비율이 2016년 41.4%에서 2019년 51.0%로 더욱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의과대학생의 8~10구간 가구 자녀 비율은 앞의 3개 대학의 해당 비율보다 더욱 높았다.

수 없는 대학생 사이에는 학업에서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 처럼 맴돌며 모든 일에 간섭하는 오늘날의 부모를 지칭하는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가 기회 사재기(opportunity hoarding)를 이용해 노동시장 진출이나 전문대학원의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예도 있다.<sup>26)</sup>

교육에 대한 합리적 투자의 증가 배경은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와 맞물린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의 상승이다(Doepke & Zilibotti, 2019).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장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한편,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동기 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상위 계층 부모와 최하위계층 부모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 결과를 좌우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여 자녀의 교육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위 계층의 부모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녀의 장래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란 학력의 향상에 따른 소득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림 4-5]는 OECD 국가의 대학/대학원 교육 투자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 이는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을 그 재학 년 수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대학/대학원 교육 투자의 연간 수익률은 12.7%로 미국(14.6%)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나, 스웨덴(5.6%)보다는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이러한 표준적인 자료는 국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같은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도 나라에 따라 앞으로 취업한 직종에 따른 소득 격차가 클 수 있다. 명문대학이나 의학, 법학 계열 전문대학원 등의 소득 프리미엄 또한 이러한 표준적인 지표로는 포착할 수 없다. 한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Koh, 2018), 서열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하락하지 않았다.

<sup>26)</sup> 극단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지만 논문 저자를 허위로 등재해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도 일어났다(KBS 뉴스, 2020.04.20., "아들 '허위 스펙' 만들어 준 교수 아버지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8563&ref=D>).



자료: Montenegro & Patrinos(2014)

주: 한국과 미국은 2010년 자료. 2012년 자료 가운데 멕시코(20.7%)는 제외.

**[그림 4-5] 2012년 기준 OECD 국가의 교육 투자 연간 수익률(%) 비교**

한편, 이지영·고영선(2019)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특히 노동시장 진입단계뿐만 아니라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큰 대학서열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차 커져 40~44세 무렵에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하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보다 46.5%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서열은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대규모사업장 종사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등 일자리의 질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불러온다. 대학서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상당한 격차도 문제이지만, 서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가 가족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도 문제이다. 최성수·이수빈(2018)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이전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서 나타나다가 대학교육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상위권 대학의 졸업 여부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 장에서 한국의 교육과 노동시장이 200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략히 살펴해보았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분절화 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늘었는데,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 비좁은 관문을 서열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이 상당수 통과하는데,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는 부모의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열려 있다. 하지만 서열 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계층 출신의 대학 졸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하위계층 출신 졸업자보다 훨씬 높다(이수빈·최성수, 2020). 즉, 교육을 통한 부모 지위의 대물림 경향은 서열화된 대학 시스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위계의 아랫부분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덧붙여, 이진영(2017)은 한국노동패널조사로 2013년과 2014년 무렵 30대 중반인 자녀의 소득과 이들 부모의 1998년과 1999년 소득을 비교하며 학력이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학력이 소득에 끼친 영향이 최대 70%까지 감소했으며,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고소득층일 때 자녀도 고소득층일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계속하지 못하고, 부모 지위의 대물림 경향을 높이면서 사회이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_ 끈적끈적한 바닥과 끈적끈적한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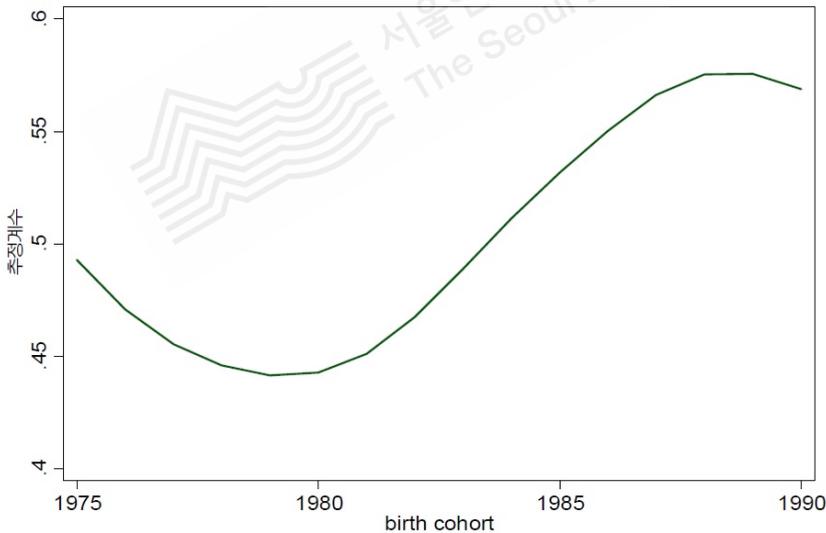
### 1) 불평등의 세대 간 고착화: 소득 및 직업, 지위의 이동성

최근 OECD는 사회이동성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끈적끈적한 바닥(sticky floors)”과 “끈적끈적한 천장(sticky ceilings)”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회이동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OECD, 2018). 끈적끈적한 바닥이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하고, 끈적끈적한 천장이란 최상위 계층 집단이 기회 사재기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표현은 세대 간 이동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세대 내 이동성의 저하를 표현하는 용어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경희·민인식(2016)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1998년)부터 17차(2014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의 매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득 및 직업의 이동성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을 했다. 먼저 소득이동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세대의 소득계층이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특히 부모소득이 가장 높을 때(5분위) 자녀의 소득분위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는데, 아들보다 딸의 평균소득이 부모의 소득분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권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20대 여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앞서 언급한 조귀동(2020)의 분석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이경희·민인식(2016)의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지점은 이러한 소득이동성 정도의 추이이다. [그림 4-6]이 보여주듯이 부모의 소득분위가 자녀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이 1980년생 그룹부터 점차 증가하여 1990년생에 가까워지면 이 영향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부터 불평등의 세대 간 고착화가 소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직업계층의 이동성 분석 또한 소득이동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직업 이동성의 추이 또한 부의 직업이 평균 임금이 높은 1군 직업일 경우 자녀직업이 1군일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다. 1975년 이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직업이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 1980년대 초반 출생 그룹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급격히 높아졌고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된다.



출처: 이경희·민인식(2016)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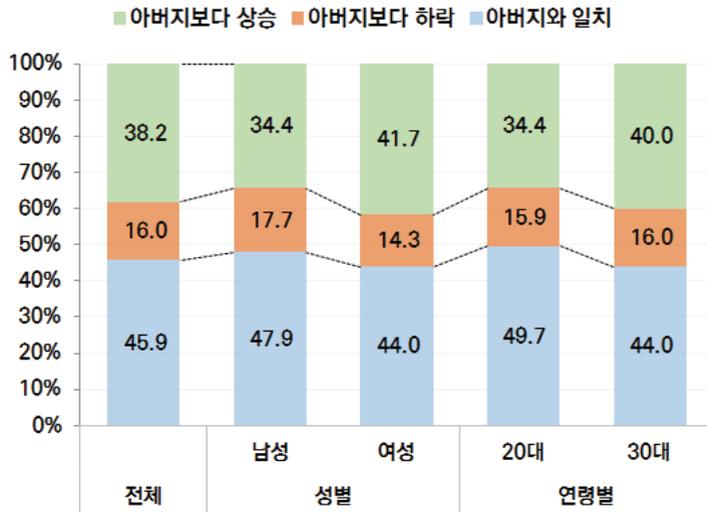
주: 추정계수는 부모와 자녀 모두 동일 연령대 소득 5분위(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함.

[그림 4-6] 출생 코호트별 추정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2002-2016)를 이용하여 1984년 출생 코호트의 부모-자녀 소득 상관성을 분석한 계봉오 외(2019)도 소득 최상위층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했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조사 1~20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9)는 저소득계층의 뚜렷한 대물림 효과를 보여주었다. 노동시장 참여 기간의 평균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 연구에서 교육서열의 영향력이 두드러졌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귀속적, 교육적 격차의 영향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60년대생에서는 교육요인이, 70년대생과 80년대생에서는 귀속요인(부모의 학력과 고교 무렵 원가정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 한편, 정보화세대라는 이름을 붙여 1975~1995년 출생 코호트를 분석대상에 포함한 여유진(2019)도 현재의 근로소득이 아버지의 학력 및 소득계층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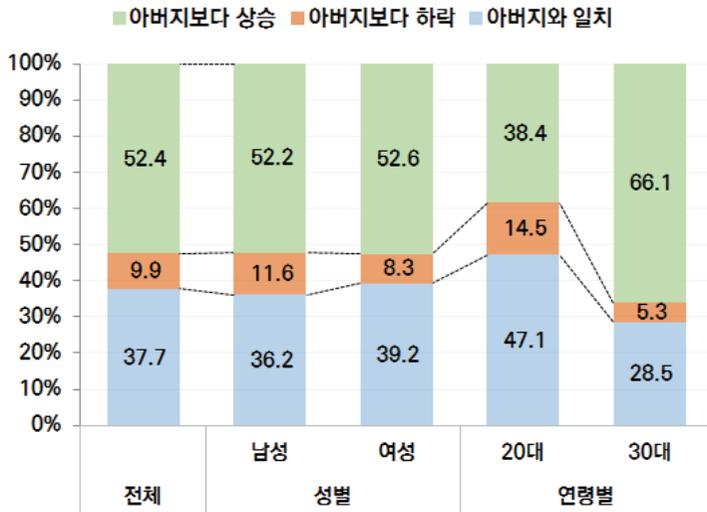
한편,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의 만 20~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직업 및 학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27)</sup> [그림 4-7]은 아버지와 자녀의 절대적 직업 이동성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의 직업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관리자와 전문가 및 준전문가는 상위 직업군으로, 사무서비스 종사자 등은 중상위 직업군으로, 숙련기능직 등은 중하위 직업군으로, 반숙련기능직과 단순직 종사자 등은 하위 직업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직업이 있는 595명의 절반은 아버지의 직업군과 같았으며, 16%는 아버지의 직업 지위보다 하락했고, 40%는 직업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보다 30대의 상승 이동이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의 상승 이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이 조사는 부모와 자녀의 매칭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한 시계열 자료는 아니지만, 응답자 본인의 직업 및 학력과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의 부모 직업과 학력을 파악할 수 있어 직업 및 학력의 세대 간 절대적 이동성을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수치화하여 분위를 산출하고, 응답자의 직업, 학력, 그리고 소득을 통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위를 산출하여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절대적 이동성 비교를 통해서도 경제구조 변동과 세대 간 상관관계 변화를 구별하기 어려워 절대적 이동성은 사회의 개방성 비교 척도가 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계봉오·황선재, 2016). 따라서, 이 연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구는 상대적 이동성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덧붙여, 직업의 절대적 이동성은 한국에서도 점차 정체 또는 감소하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계봉오·황선재, 2016), 이는 유럽 및 미국의 패턴과 비슷한 것으로 후기 산업사회의 직업구조 변동이 예전과 비교하여 정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득의 절대적 이동성의 경우 상대적 이동성이 포착하기 어려운 소득 불평등의 구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림 4-7] 아버지와 자녀의 절대적 직업 이동성

[그림 4-8]은 아버지의 학력 수준과 자녀의 학력 수준을 비교한다. 부모와 자녀의 학력은 모두 입학기준으로 대학원 이상,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의 4단계로 구분했다. 전체적으로 청년의 약 40%는 아버지의 학력과 같고, 약 50% 정도는 자녀의 학력이 상승했으며, 불과 10% 정도만 아버지의 학력보다 하락했다. 이는 직업에 비해 학력의 절대적 상승 이동이 컸음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연령대별 차이가 큰 것은 90년대생인 20대 청년의 아버지 가운데 입학기준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가 약 61%(301명)지만, 30대 청년은 약 38%(192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30대 청년은 부모의 학력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세대이고, 20대 청년은 대적으로 고학력 부모를 많이 둔 세대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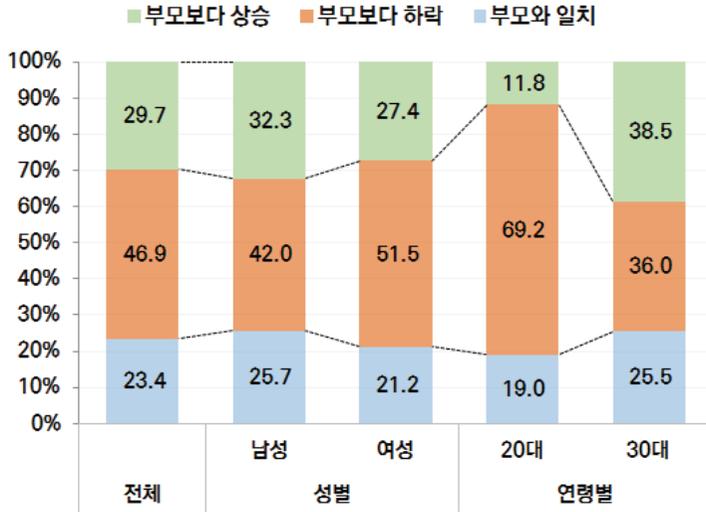


[그림 4-8] 아버지와 자녀의 절대적 학력 이동성

마지막으로, [그림 4-9]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이동성의 정도를 보여준다. 이는 앞의 [그림 4-2]와 [그림 4-3]에서 사용한 5분위로 구분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역시 5분위로 나눈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대응시켜 그 일치 여부를 파악했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와 달리 직업과 학력에 덧붙여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5단계로 구분한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지표화했다.<sup>28)</sup>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이동성은 앞서 살펴본 직업과 학력의 절대적 이동성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전체적으로 상승 이동을 경험한 청년은 불과 30% 수준에 불과하고, 하락 이동을 경험한 청년은 거의 절반이다. 상대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지만, 가장 큰 차이는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무려 70% 정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직업이나 학력 지위와 달리 20대 취업자의 소득이 30대 취업자의 소득에 비해 낮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sup>28)</sup> 부모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5분위수로 나누어 상대적 사회이동성을 파악하는 대신에 원래 가족의 월평균 총소득(경제적으로 독립한 본인 포함 가구의 세전 총소득 제외)과 본인의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을 4분위수로 나누어 상대적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또한 [그림 4-9]와 거의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4-9] 부모와 자녀의 상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성

따라서 범위를 30대 청년으로 좁혀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 이동성 고찰에서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없는 30대 청년 비율은 25.5%에 불과하고, 상승 이동과 하락 이동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지위가 일치하는 응답자 102명 가운데 부모의 지위가 최하위일 때 자녀의 지위도 최하위인 응답자는 36.3%(37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모의 지위가 최상위일 때 자녀의 지위도 최상위인 응답자가 21.6%(22명)로 많았다. 지위의 하락 이동을 경험한 144명은 부모의 지위가 2분위 이상이었는데 자녀의 지위가 최하위인 1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50.7%(73명)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지위의 상승 이동을 경험한 154명 가운데, 부모의 지위가 4분위 이하에서 자녀의 지위가 최상위인 5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44.2%(68명)로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30대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과거 이들이 중학교 3학년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변동이 없는 경우는 지위의 최하층과 최상층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자녀 지위의 하락과 상승은 각각 자녀 지위의 최하층과 최상층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양극단에서의 고착화와 양극단으로의 이동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 2) 불평등의 세대 내 고착화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과 별개로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 또한 불평등의 고착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가능하고, 따라서 본인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적다면 동기 부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세대 내 이동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현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세대 간 이동성의 저하와 결합한다면,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대물림과 고착화가 더욱 강화되어 사회계층 간에 더욱 넘나들기 힘든 장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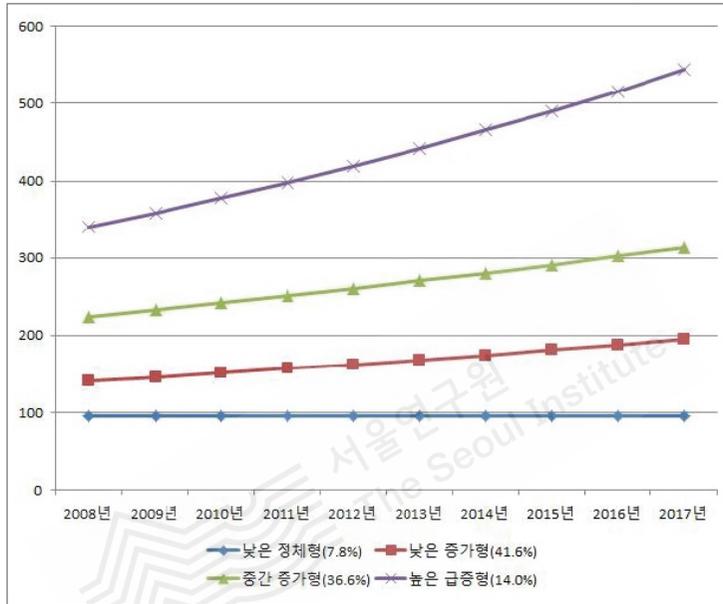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김성태 외(2012)는 1998~2008년 사이에 소득이동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소득 유형에 상관없이 잔류비율이 상승하고 이동비율이 하락했는데, 이러한 소득이동성의 감소가 빈곤의 고착화와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같은 조사를 이용한 김용성(2014)도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1~2005년에 비해 2006~2010년의 소득이동성이 낮아졌는데, 이때 저학력계층 소득의 하향이동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들 또한 이 기간에 소득이동성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성명재, 2018; 윤성주, 2018). 먼저 성명재(2018)는 다른 두 연도 사이의 소득순위 및 소득금액의 상대비 변화를 바탕으로 이동성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득이동성의 하락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활동연령 인구(30대에서 50대 중반)에서도 소득이동성이 하락함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이동성의 동태적 추이를 분석한 윤성주(2018)는 2007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소득이동성이 나타나지 않은 비율의 증가와 상향이동 비율의 저하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1978~1983년생 그룹의 10년간(2008~2017) 개인 소득의 이행궤적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9)는 초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는 소득 증가가 거의 없고, 초기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가파른 소득 증가가 나타남을 보여준다(그림 4-10 참조). 이렇게 다른 경로를 보이는 소득이동 궤적 유형에는 원

가정 소득과 교육수월, 그리고 첫 일자리의 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문길 외(2017)는 청년의 경제활동이 경기침체에 불안정할수록 이들이 중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는 청년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고착화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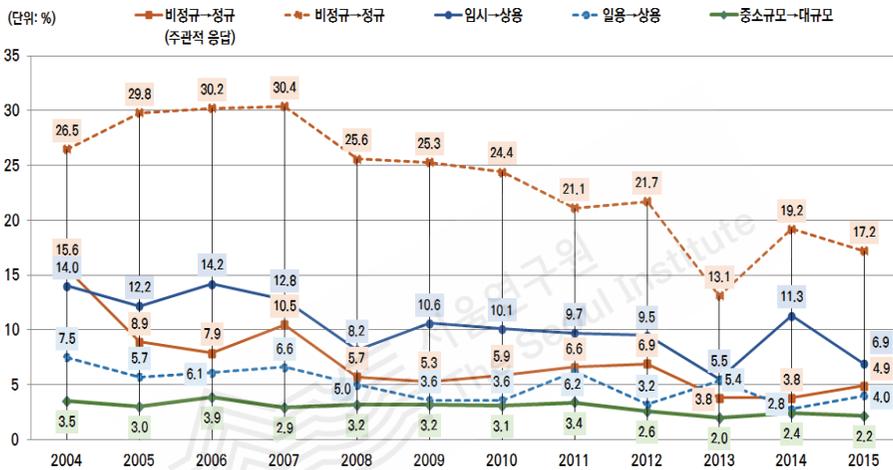
출처: 남재욱 외(2019) 138쪽.

[그림 4-10] 소득 잠재집단의 월평균 소득 궤적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크게 분류되는 고용형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등의 종사상 지위 등에 성별, 학력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불안정성이 강화되어왔다는 사실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이렇게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지위의 상승 이동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고용불안 등의 사유로 비정규직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 생존율의 감소가 정규직으로의 긍정적 전환보다는 실업과 미취업 등 불안정한 직업이동을 반복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의 이동 가교가 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함정으로 작용하여 정규직으

로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정원오·김연아, 2015).

[그림 4-11]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1년 후 고용 지위의 변화(일자리 1년 이행률)를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것이다(전병유, 2018). 우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일자리 이동률은 2015년 현재 17.2%인데, 이는 2007년의 30.4%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이고, 주관적 응답 기준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동률도 각각 10.5%에서 4.9%로 감소했다.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일자리 이동률은 2004년 14.0%에서 2015년 6.9%로 하락했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일자리 1년 이행률도 2006년 3.9%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현재 2.2%로 매우 낮아졌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출처: 전병유(2018) 27쪽.

**[그림 4-11] 고용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이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동할 가능성 또한 크게 줄었으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노동이동의 단절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한 번 정해진 일자리를 벗어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설계하려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이들을 극

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를 확대재생산하고, 대학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을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로 몰아가면서 교육 불평등 또한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의 접근법과 다른 사회이동성 측정 방법이 등장했다. 사회이동성지수2020(Social Mobility Index 2020)이 대표적이다(World Economic Forum, 2020). 기존 접근법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소득이나 교육, 직업 등의 특정한 하나의 변수를 추적하여 비교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새로운 접근법은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측정하여 통합적인 사회이동 지표를 만들고, 국제비교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이동성지수2020은 건강, 교육접근성, 교육의 질과 형평성, 평생교육, 기술접근성, 노동기회, 공정한 임금 분배, 노동조건, 사회보장, 포용적 제도 등의 10개 요인을 사회이동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 사회이동성지수에서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그나마 기술접근성(technology access)과 건강(health) 등의 항목에서 한국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공정한 임금 분배(fair wage distribution)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 간 순위를 따져보면, 공정한 임금 분배 항목에서 한국은 35위로 콜롬비아,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이고, 사회보장 항목에서는 33위로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 3\_소결

지금까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교육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사회이동성이라는 렌즈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먼저 서울 소재 대학진학 비율은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대 여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획득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2000년대 이후 점점 커져 왔다는 사실이다.

경제자본의 직접적인 상속을 제외하면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이는 학령기 이전의 양육 격차에서부터 시작되며, 대학진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사재기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 노동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교육 투자 연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하다. 교육을 통한 부모 지위의 대물림 경향은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 양상도 바뀌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사회이동성이라는 렌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 간의 상대적 사회이동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1980년도 출생 코호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생에 이르러 그 영향이 극대화되었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무려 70% 정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그 절반으로 밝혀졌다. 20대 취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세대 간 교육의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30대의 상승 이동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20대의 상승 이동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20대 부모의 다수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간 직업의 절대적 이동성에서는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이 크게 두드러졌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소득이 낮은 그룹은 10년 후에도 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초기 소득이 높은 그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른 소득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소득이동성의 저하가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위의 상승 가능성도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어떤 경로로 하느냐가 이후의 생애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와 함께 교육에서의 경쟁

체제와 기회 불평등을 촉진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을 횡단면과 종단면으로 살펴보았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인식은 세대 간 및 세대 내에서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 05

#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



- 1\_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본 청년의 불평등 인식
- 2\_청년 연구자 및 플랫폼 노동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 3\_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의 차이
- 4\_소결

## 05.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

### 1\_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본 청년의 불평등 인식

#### 1)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개요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는 서울 거주 청년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청년과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90년대생과 80년대생(2020년 현재 만 20~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거주 청년 1,000명이고, 조사기간은 2020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7일 동안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소득, 자산, 교육, 고용, 건강, 주거,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 둘째,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소득, 자산, 교육, 고용, 건강, 주거,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 넷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 마지막으로 응답자 특성과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를 묻는 항목 등이다.

[표 5-1]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거주 지역</li> <li>- 본인/배우자/아버지/어머니의 교육수준</li> <li>-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li> <li>-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교 소재지</li> <li>- 정치적 성향</li> </ul>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영역별 불평등 심각성</li> <li>-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영역 중 가장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영역</li> <li>- 한국사회에서 집단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li> <li>- 한국사회의 집단 간 불평등 영역 중 가장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영역</li> <li>-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일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는지의 의견</li> <li>- 향후 10년간 한국사회 일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인지의 의견</li> </ul>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영역별 불평등 심각성</li> <li>-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영역 중 가장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영역</li> <li>- 청년세대 내의 남녀 간 불평등 심각성</li> <li>- 청년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li> <li>- 수도권 거주 청년과 비수도권 거주 청년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li> <li>- 청년의 취업 기회의 평등/불평등한 정도</li> <li>- 청년의 취업 기회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li> <li>- 청년의 교육 기회의 평등/불평등한 정도</li> <li>- 청년의 교육 기회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li> <li>- 지난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는지의 의견</li> <li>- 향후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인지의 의견</li> </ul>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15세(중학교 3학년) 무렵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li> <li>- 본인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li> <li>- 본인의 자녀가 현재 본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의 사회경제적 지위 예상</li> <li>- 노력에 따른 공정성</li> <li>- 청년세대의 경제적 지원 및 기회</li> <li>-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li> </ul>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의 심각성</li> <li>-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li> <li>-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승진에 미치는 영향</li> <li>- 한국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li> <li>-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li> </ul>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수/가구유형/혼인상태/경제적 독립상태/주거 독립상태</li> <li>- 경제활동 상태/고용형태/현재 직업/근로소득/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li> <li>- 15세 무렵 아버지/어머니의 직업</li> <li>- 주택 유형/주거점유 형태/가구소득/가구부채</li> <li>- 원래가족의 주택 유형/주거 점유형태/가구소득/가구부채</li> </ul>

## 2)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와 가구 특성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응답자는 총 1,000명으로 남성 49.2%(492명), 여성 50.8%(508명)이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9.5%(495명), 30대 50.5%(505명)로 나타났다. 학력별(입학기준)로 살펴보면 대학교(4년제)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2, 3년제) 15.8%, 대학원 이상 13.1%, 고등학교 이하가 8.4% 순이다. 즉, 10명 가운데 9명은 고학력 청년(대졸 이상)이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비혼이 79.4%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 18.6%, 동거 1.8%, 별거/이혼/사별 0.2% 순이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미혼/비혼 비율이 94.7%였고, 30대는 미혼/비혼 비율이 64.4%, 기혼 비율이 33.1%로 조사됐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질문한 결과, 경제활동 중이라는 응답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양육 또는 가사에 전념 11.8%, 취업 준비 및 구직 중 4.9%, 기타이유로 경제활동 하지 않음 3.9%, 학업 중 2.0% 순으로 확인됐다.

가구원 수는 4인 가구 35.8%, 3인 가구 24.1%, 2인 가구 14.7%, 1인 가구 19.0%, 5인 이상 가구 6.4%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명 중 1명은 4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30대는 3인 가구가 30.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4.0%, 2인 가구 21.8%로 20대보다 소형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5-2] 가구원 수

(단위: %)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19.0	14.7	24.1	35.8	6.4
20대	13.9	7.5	17.8	50.3	10.5
30대	24.0	21.8	30.3	21.6	2.4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와 자녀 가구 22.8%, 1인 가구 1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모두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확인됐다. 30대는 20대보다 1인 단독가구 비율이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30대는 부부가구 비율이 20대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5-3] 가구유형

(단위: %)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부부와 자녀 가구	1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동거포함)	기타
전체	43.1	22.8	19.0	9.7	5.4
20대	54.3	22.0	13.9	4.0	5.7
30대	32.1	23.6	24.0	15.2	5.1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중도적이라는 입장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진보적 34.0%, 보수적 18.7%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중도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보적, 보수적 순이었다. 또한 여성(38.6%)이 남성(29.3%)보다, 30대(36.2%)가 20대(31.7%)보다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 경제상황

응답자의 10명 중 6명(59.5%)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 중이고 15.2%는 학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양육·가사에 전념한다는 비율이 4.9%로 남성(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경제활동 중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현재 학업 중(28.5%)이거나 취업 준비 및 구직 중(27.7%)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10명 중 8명(79.2%)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다음은 취업 준비 및 구직 중 비율 10.9%, 양육·가사에 전념하는 비율 4.4% 순이었다.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비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사업을 함 10.4%,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보수 없이 돕는다는 비율 0.5% 순이었다. 경제활동 유형에서 성별,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학력에 따라서는 달랐다. 대학교 졸업은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이하는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비율과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보수 없이 돕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3.4%, 비정규직이 16.6%로 나타났으며, 여성(81.7%)보다 남성(85.3%), 20대(78.3%)보다 30대(85.9%)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확인됐다.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88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한시적 근로자 비율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비전형근로자 34.1%, 시간제근로자 25.0%

순이었다. 남성과 20대에서는 한시적 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여성과 30대에서는 비전형 근로자 비율이 높게 확인됐다.

[표 5-4] 경제활동 유형

(단위: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함	자신의 사업을 함(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또는 식당 운영)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보수 없이 도움
전체	89.1	10.4	0.5
고등학교	77.4	19.4	3.2
대학교(2, 3년제)	87.2	12.8	0.0
대학교(4년제)	90.5	9.0	0.5
대학원 이상	89.0	11.0	0.0

### 3)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주요 결과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상세한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고,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들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이 꼽았다. 집단 사이의 불평등 가운데는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다음으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 청년들은 자산 불평등이 여전히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을 묻는 앞의 문항에서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은 소득 및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청년 사이의 불평등에서는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이 소득 및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은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은 남성보다 심각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4명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이 남성보다 심각했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관한 질문에서 청년들 10명 가운데 9명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다수였다. 계층이동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이었다. 불과 4명 중 1명만이 본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항목에서 청년들 10명 가운데 불과 1~2명만이 우리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지위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우리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10명 가운데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약간 낮았는데, 학력에 따른 격차는 매우 큰 편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학력에 따른 삶의 조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4) 사회경제적 배경과 청년의 불평등 인식

앞에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전체적인 개요와 그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불평등 인식의 주요 결과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응답자가 15세 무렵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여기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했을 때 현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답하는 질문에 기초하고 있고,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신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관한 질문에 기초한다. 한국사회 일반의 개별 불평등 영역의 심각성 인식 문항에서는 ‘매우 심각하다’와 ‘약간 심각하다’를 합하여 심각함으로 구분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하여 동의함으로 구분했다.

청년세대 내부의 개별 불평등 영역의 심각성 인식 문항 또한 ‘매우 심각하다’와 ‘약간 심각하다’를 합하여 심각함으로 구분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하여 동의함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기회와 교육 기회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불평등’과 ‘약간 불평등’ 등을 합하여 불평등으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 가운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각성 문항에서는 ‘매우 심각하다’와 ‘약간 심각하다’를 합하여 심각함으로 구분하

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자녀 교육과 취업 및 승진 영향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하여 동의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자신과 자녀세대  
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를 합하여 낮음  
으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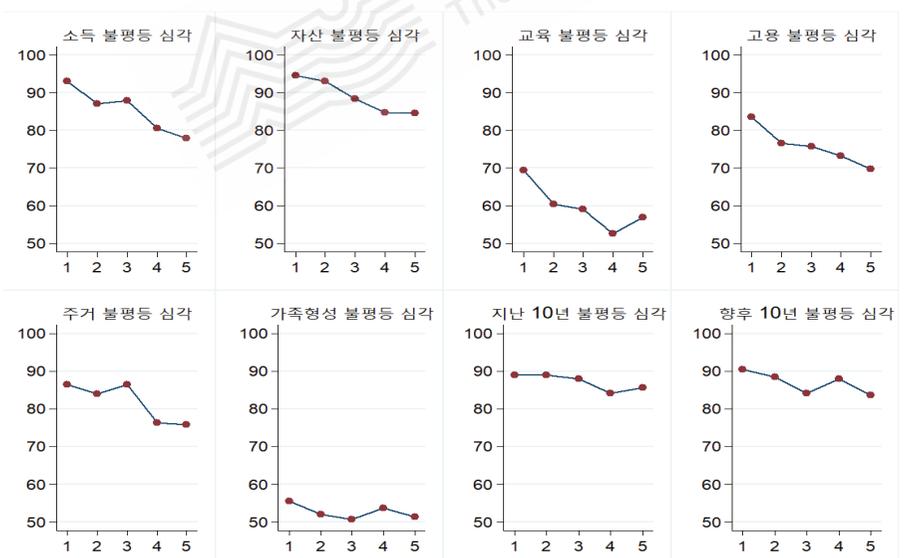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의 불평등 인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제4장의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응  
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의 부모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  
정하여 수치화하고 이를 5분위수로 구분한 변수를 아래 분석에서 사용했다.

#### ①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응답자가 15세였을 무렵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사회 일반의 개별 불평등 영  
역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5-1]에 따르  
면, 전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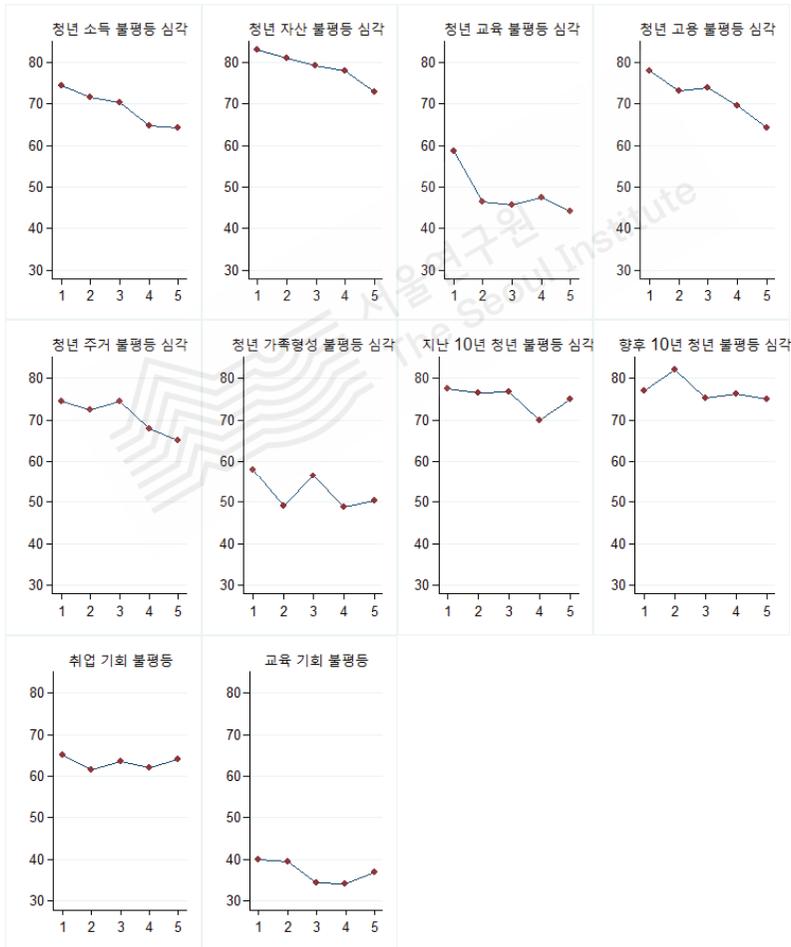


[그림 5-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 ②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그림 5-2]는 응답자가 15세였을 무렵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사이의 개별 불평등 영역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5-1]에서 나타난 결과와 큰 차이는 없지만, 자산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덧붙여,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보다 월등히 높으며, 가족형성 불평등 심각성 인식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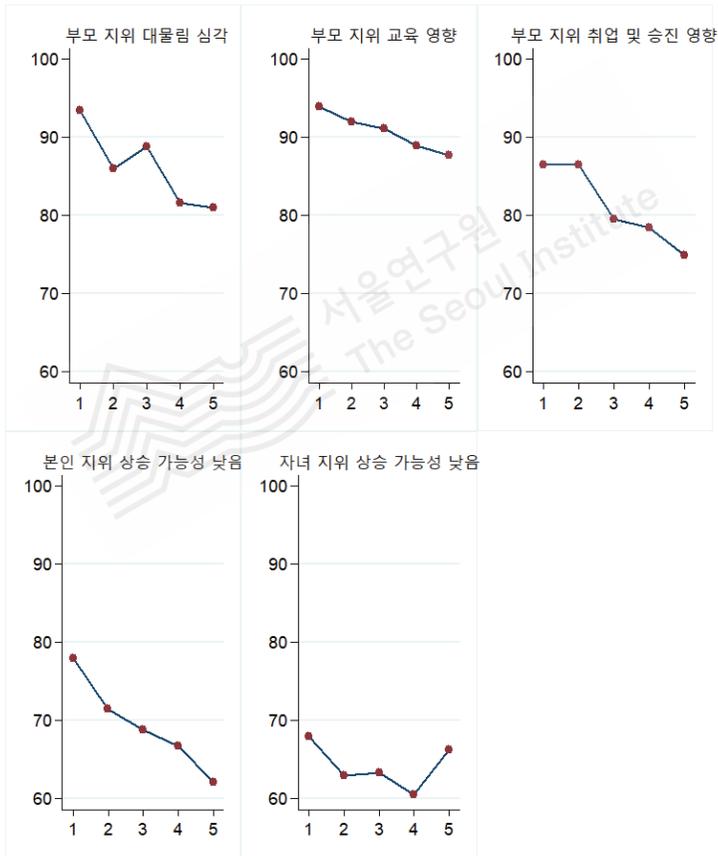


[그림 5-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 ③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그림 5-3]은 응답자가 15세였을 무렵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심각하고, 교육이나 취업 및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본인의 지위 상승 가능성을 낮게 예측하는 비율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이와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

(단위: %)



[그림 5-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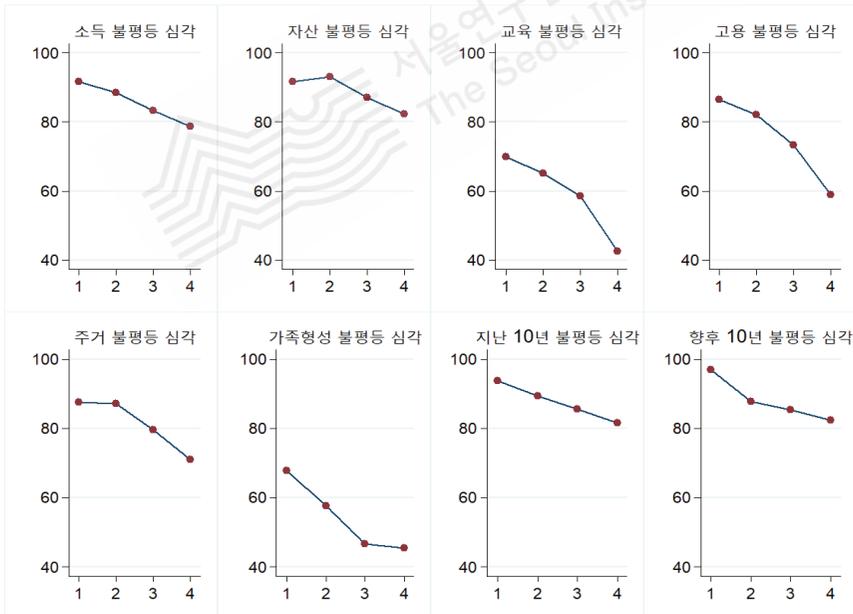
## (2) 청년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1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 청년의 현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그룹은 지위 1과 2를, 두 번째 그룹은 지위 3과 4를, 세 번째 그룹은 지위 5와 6을,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지위 7~10을 하나로 묶었다.

### ①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그림 5-4]는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사회 일반의 개별 불평등 영역에 대한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앞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분석과 달리 가족형성 불평등 심각성 인식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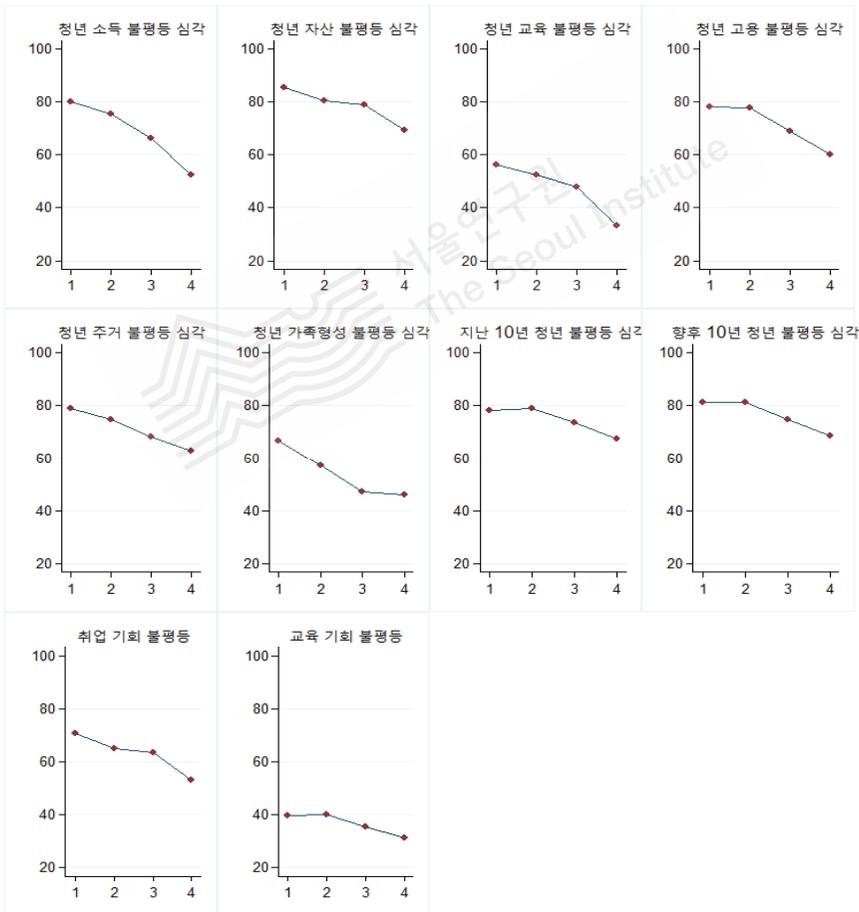


[그림 5-4]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 ②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그림 5-5]는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사이의 개별 불평등 영역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5-4]에서 나타난 결과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주관적 지위 최하층은 자산, 고용, 주거 불평등 심각성 인식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에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취업 기회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인식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그림 5-2]에서와 달리 좀 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주관적 지위가 높을수록 취업 기회 및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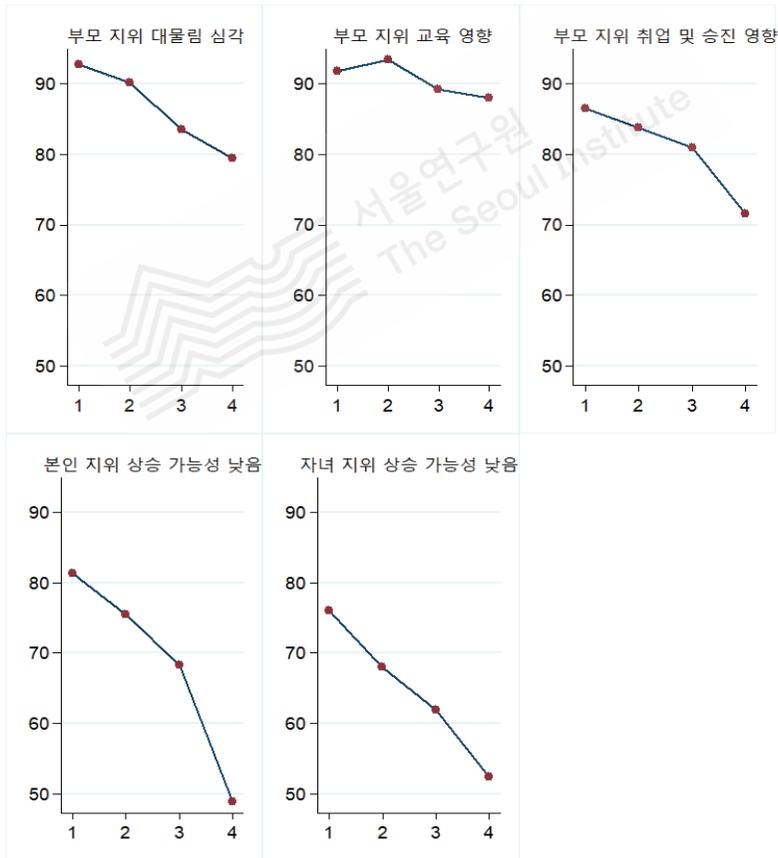


[그림 5-5]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 ③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그림 5-6]은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관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부모 지위의 대물림 심각성이나 부모 지위의 취업 및 승진 영향에서의 차이보다 크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전자의 질문에는 전체의 90.8%나 되는 압도적 다수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고, 후자에는 각각 전체의 86.3%, 81.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본인이나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관적 지위가 낮을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뚜렷하게 커졌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그림 5-3]에서의 자녀 지위 상승 가능성 전망이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단위: %)



[그림 5-6]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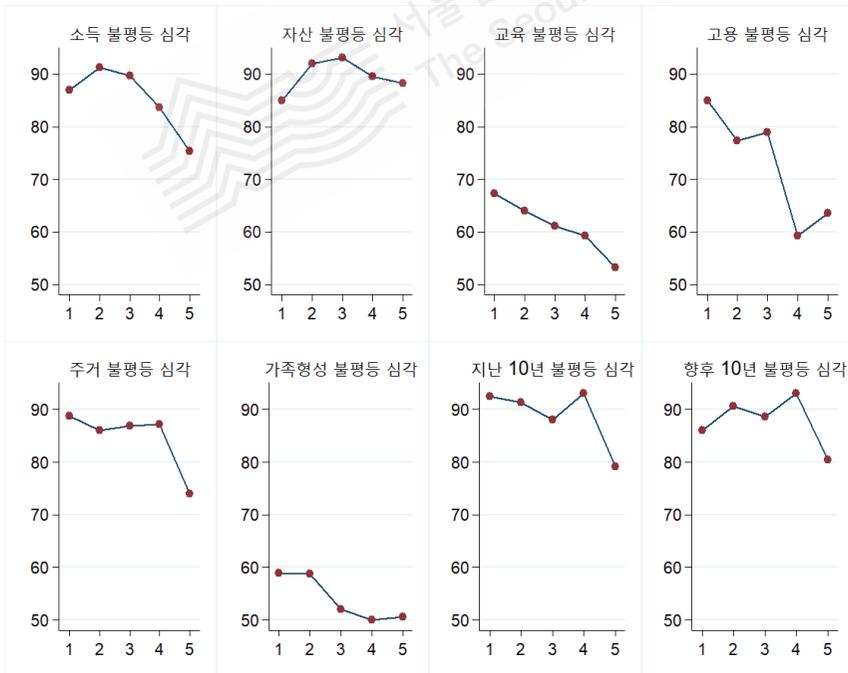
### (3) 청년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청년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월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5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그룹은 200만 원 이하, 두 번째 그룹은 201~250만 원, 세 번째 그룹은 251~350만 원, 네 번째 그룹은 351~450만 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451만 원 이상으로 나뉘었다.

#### ①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그림 5-7]은 소득으로 표현되는 응답자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사회 일반의 개별 불평등 영역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앞서와 같은 선형적인 상관관계의 양상은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자산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하위 그룹의 심각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상위 그룹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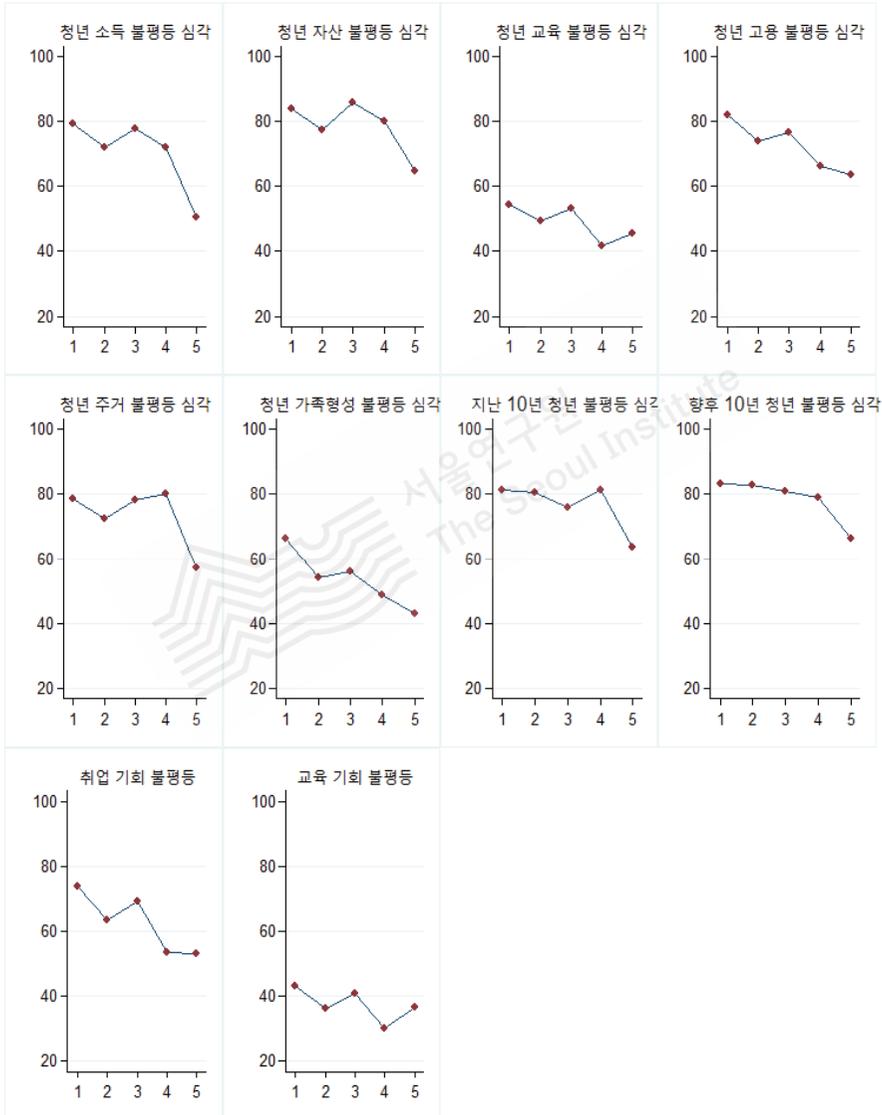


[그림 5-7]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 ②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그림 5-8]은 응답자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사이의 개별 불평등 영역에 대한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산 불평등을 제외하면 [그림 5-7]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추세는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역시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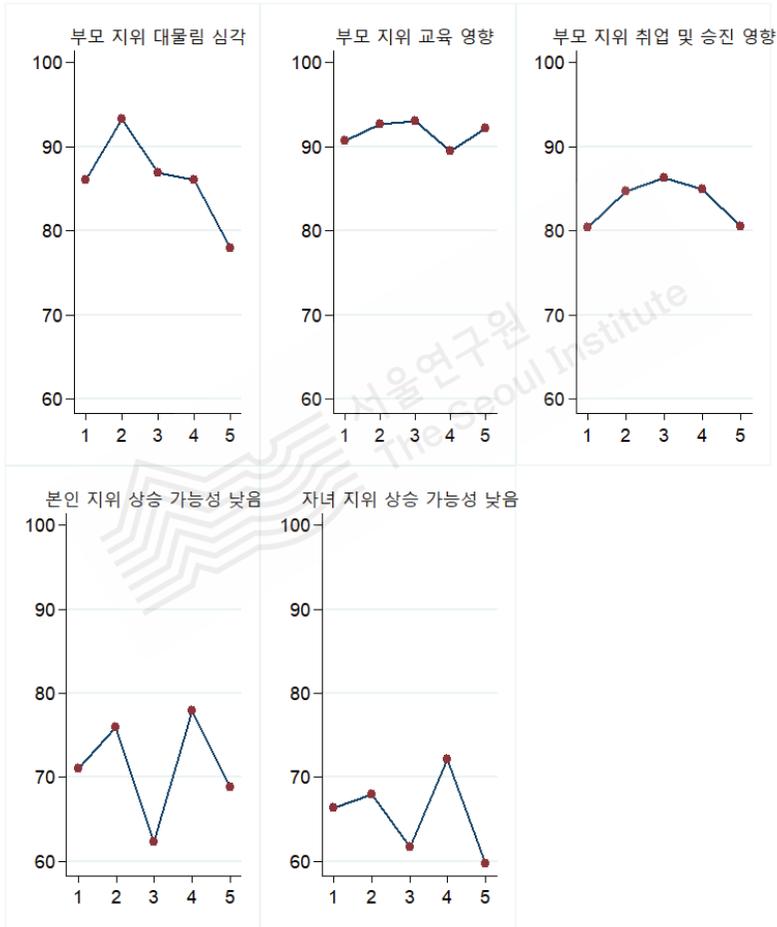


[그림 5-8]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 ③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그림 5-9]는 응답자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역시 선형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위의 다섯 개 항목 가운데 소득 최하위 그룹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그룹을 제외한 중간 그룹에서였다.

(단위: %)



[그림 5-9]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 2\_청년 연구자 및 플랫폼 노동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 1)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목적과 방법

청년 연구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불평등 인식과 청년정책, 불안정 노동 현실을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질적 연구를 활용해 이 연구의 양적 연구를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참여자는 2020년 현재 만 20~39세인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두 개의 그룹을 선정했다. 하나는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청년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한 청년 연구자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새로운 불안정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의 현실 파악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 그룹이다.<sup>29)</sup>

두 그룹 각각의 참여자 모집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참여자 선정 기준에 맞는 주 정보제공자(key informant) 1인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주 정보제공자로부터 참여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출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더욱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각 그룹의 참여자를 5명 이내로 모집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20년 8월 두 개의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이 연구진과 속기사, 참여자들만 있는 독립적인 회의실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진 가운데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룹별로 1시간 30분 정도씩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표 5-5)의 주요 질문 참조)에 따라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료 분석은 속기사가 작성한 (초별 작성 이후 녹음파일을 통해 보정된) 속기록에 기초하여 연구의 주요 질문별로 핵심적인 진술을 뽑아내고,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정리했다.

인터뷰 시작 전 주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인터뷰 진행방법과 소요시간, 진술 내용의 익명성 보장과 연구 이외 목적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위한 속기록 작성과 녹음기 사용에 관하여 구두 동의를 받았고,

<sup>29)</sup> 불안정 노동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의 개념에 대해 아직 명확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장지연 외(2020)의 정의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나 일거리를 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플랫폼이 특정인에게 과업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이전의 표준적인 고용관계로부터 멀어져 불안정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프레카리아트(preariat)로 명명하기도 하는데(Standing, 2011),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

답례비 지급을 위한 지급조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인터뷰 종료 이후 추후 연락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연구진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규정에 따른 소정의 답례비를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했다.

[표 5-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와 주요 질문

구분	청년 연구자 그룹	플랫폼 노동자 그룹
참여자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석사과정을 마친 20대 청년 연구자 4인(이하 청년 연구자 1~4로 표기)	배민라이더스 소속 30대 플랫폼 노동자(라이더) 5인(이하 플랫폼 노동자 1~5로 표기)
주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li> <li>- 세대 간 불평등</li> <li>- 불평등의 대물림</li> <li>-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li> <li>- 플랫폼 노동의 장단점과 불만 사항</li> <li>-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li> <li>-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직업 전망</li> <li>- 계층 구조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li> </ul>

## 2) 청년 연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 (1)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의 만 20~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여러 개별 영역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참여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견해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인식의 원인과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소득과 달리 자산의 큰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친구들이 볼 때 본능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비트코인 몇 번 해서 번만큼의 돈을 절대 획득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이고... 2015년부터 한국사회에서 많이 회자됐던 수저 계급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부모님 세대가 거쳐 왔던 첫 직장을 잡고 거기에서 자산을 축적해서 몇 년 내에 집을 사고 이런 식의 생애 과업을 이행해 나가는 코스 자체가 극단적 도박이 아니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 연구자 1)

자산 불평등이 1순위로 나오고 있는 건... 그게 약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 2)

어떤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초기 임금도 많은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가시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나 있고 그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각인이 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주변에서도 그런 식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 3)

## (2)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집단 사이의 불평등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격차이고,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성별 격차와 함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대 간 격차에 관한 담론과 연구가 주목을 받으며 관련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위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위계화된 큰 규모의 조직사회를 전제한다면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세대 간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기성세대의 남성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 레벨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한국사회에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도 그런가라는 건 다른 설명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연구자 2)

386 남성으로 이미지화되는 조직 내에서 또 그걸 청년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직장에 끈대 같은 사람들 있고 부장님들이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구력이 굉장히 있는데, 약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조직, 정부 조직,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것... 마치 직장에 있는 신입사원과 부장님 이런 식으로 인격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간의 격차가 마치 한국사회의 세대 간 격차를 전부 다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환상이 있다고 생각 (청년 연구자 1)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세대 내의 이질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 격차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넓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년 연구자 3)

정말 세대 간 격차로 집중해서 세세하게 실제화를 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접근방법이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 4)

### (3) 불평등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각성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취업 및 승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자산과 지위의 직접적인 세습과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세습 유형을 구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교육에 미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논란이 된 공정성 또는 능력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서로 다른 출발선에 있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부모의 도움으로 앞선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대물림이라는 또는 불평등 세습이라는 것이 담론화되고 화두가 되는 건 오늘날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010년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이런 게 논쟁이 된다고 할 때 특징 중 하나는 조국 사태와 최순실 사태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소수 1%대 99%, 특정 부패한 재벌이나 정치, 엘리트들의 결탁과 나머지가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중상층이라는 강남에 사는 걸로 상사되는 386세대의 자식들이 끼워지면서... (청년 연구자 1)

최순실이 정유라한테 지위를 상속하는 것과 조국이 자기 딸에 지위를 상속하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오늘날에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사교육 시키는 건 스카이스케울 같은 데에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약간 더 나가는 것 같은 조국 케이스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게 경계가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가르는 선이... 인국공정규직 청년들의 많은 수는 짐작건대 부모의 지원을 충실히 받으면서 공부에 매진해서 높은 스펙을 쌓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받은 부모의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인이 정규직 전환시켜줬다 이것이 불공정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불공정과 공정을 가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연구자 2)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자녀한테 그대로 세습되거나 바로 자산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되는 데 사람들이. 이 교육이라는 매개체가 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육도 교육에 대한 태도까지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사이에 교육이 킴으로써 굉장히 전 과정을 정당화하게 되고 그게 능력주의라는 것까지 결합되면서 더 교묘해지게 되는데... (청년 연구자 3)

####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은 대체로 최근 청년정책 일반이 큰 주목을 받고 일부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참여자들은 특히 청년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식의 시혜나 배려에 입각한 접근법,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판단이 기존의 정형화된 규범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기존 세대의 경험이나 규범의 틀을 넘어서서 오늘날 청년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담아내는 가운데 이에 걸맞은 규범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는 청년에게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에게도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

**신혼부부 장려 정책도 청년층의 수요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청년은 원룸에 산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구직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금, 원래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보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현금을 지급해서 구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흘러간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의 노동시장 문제에 개입해서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청년 연구자 4)**

**우리가 N포, 3포라고 했을 때 연애, 결혼, 출산이 힘들다고 했을 때 연애, 출산, 결혼을 다시 잘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연애, 출산, 결혼이라는 규범 자체를 이번 기회에 재구성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라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지금 청년이 위기구나, 그러면 청년들이 이전 청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해 주자는 구도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도 그 규범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가족주의나 재생산의 문제 그런 문제를 지금 이걸 재구성할 기회로 청년정책을 삼을 필요가... (청년 연구자 1)**

**청년이라는 기표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과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걸 이용해서 청년이라는 기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약간 뭔가 제안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사회 정책을 좀, 예를 들어서 N포시대 말씀하셨는데 결혼해서 출산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데 동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청년정책이 활용된다면 저는 이게 뭔가 청년만을 위한, 청년을 피해자화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걸 넘어서 좀 더 긍정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연구자 2)**

청년들의 기존 규범을 새로 다시 짜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존 규범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청년들한테 시혜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되게 세세하게 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듯한데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조명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연구자 3)

### 3) 플랫폼 노동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 (1)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

참여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는 참여자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첫째, 시간 대비 수익성이 좋다는 점. 둘째, 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셋째, 다른 일자리보다 문턱이 낮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sup>30)</sup>

배달 일을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 지금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오토바이 자체 타는 걸 싫어했어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일자리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일자리를 아예 구할 수 없어서... (플랫폼 노동자 1)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달 일을 해서. 집안일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2)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려서 병원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이것만큼 자유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됐어요. (플랫폼 노동자 3)

배달 일을 하게 된 경위는 시간 대비 상당히 고수익 균이었어요. (플랫폼 노동자 4)

이분은 고수익이라 하신 거고 저는 하다가 나이가 차고 그쪽 일을 구할 수 없어서 취미는 바이크였고 10년 정도 땀었는데 취미이다 보니까 일로는 안 하려고 했다가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직장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플랫폼 노동자 5)

30) 김영아·이승호(2019)의 조사에 따르면, 이전에 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경험해 본 배달대행업 사용 배달원 93명 가운데 직접고용이 아닌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사유로 '시간 대비 수익이 높기 때문에'를 꼽은 사람은 44명(47.3%),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서'를 꼽은 사람도 44명(47.3%), 마지막으로 '업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를 꼽은 사람은 5명(5.4%)이었다.

## (2) 플랫폼 노동의 장점

플랫폼 노동의 장점은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와도 직결되는데, 참여자들은 시간 대비 수익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시간 선택의 자유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즉,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sup>31)</sup>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이러한 시간 선택의 자율성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플랫폼 노동의 단점 또는 불만 사항에서도 언급되지만, 낮은 기본배달료에 높은 프로모션 요금으로 수익 구조가 형성되다 보니 경제적 필요가 큰 노동자는 인센티브의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비오면 안 나오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나오고 하다가 들어가고. (플랫폼 노동자 1)**

**수입을 가지고 자유노동의 유연화가 있어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모아서 다른 자기의 본업 아니면 꿈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의 효율성이 굉장하지요. 플랫폼 노동이, 저도 이걸 하면서 프리랜서가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2)**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벌 수 없어요.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이니까 본인이 움직였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일 수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3)**

**시간적인 자유가 커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5)**

## (3) 플랫폼 노동의 단점 또는 불만 사항

시간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플랫폼 노동의 장점이지만, 이것이 소득의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즉, 10여 년간 3천원 수준에 묶여 있는 낮은 기본배달료에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높은 프로모션 요금 구조가 이러한 소득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주된 요인이다.<sup>32)</sup>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사고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보였다.<sup>33)</sup> 배민라이더스

31) 김영아·이승호(2019)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업 배달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가운데 '일할 때의 자율성'(3.56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소득수준'(3.32점), '근로시간'(3.30점), '근로강도'(3.13점)의 차례로 만족도가 높았다.

32) 예를 들어, 2020년 8월에 공지된 서울의 배민커넥트 한 지점의 이벤트 내용을 보면, 기본배달료 3천원에 피크타임 프로모션 4천원, 특정 배달지 프로모션 3천원, AI추천 배차 프로모션 천오백원, 우천시 날씨 프로모션 3천원으로 모두 합하면 배달 1건당 최대 14,500원을 받을 수 있다.

라이더는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다른 배달대행업 라이더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 보험도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이는 가입자의 나이가 내려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고충 사항이 있을 때 라이더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20년 7월 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라이더유니온 등의 조직화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는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2천 원 더 준다고 했다가 3천 원 더 준다고 했다가 천원 더 준다고 했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돈 많이 주네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플랫폼 노동자 1)

배달료가 정해진 게 아니고 부족하면 더 주고 라이더가 많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금은 붙여주는 시즌이지요. 그런 때를 만나서 수입이 올라가는 건데 아무래도 나중에 이런 수입이 유지될 것 같지 않고 널뛰기하는 거니까 불안정이 있지요. 수입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 2)

산재는 배달의민족만 되어있고, 밑에 다른 대행업체도 안 되어있어서 그분들은 안전망을 오토바이 타다 다치면 자기가 번 걸로 알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배달 노동은 특히 몸이 장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위험한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도 안 되어있는 업체가 많아서 그런 게 불만이 있지요. (플랫폼 노동자 2)

가까운 거리를 15분 안에 쫓아야 하고, 시간 싸움이에요... 마음이 조이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늦으면 라이더 책임이거든요. 저희는 배달의민족은 그나마 종합보험이 있는데 일반 그런 데는 다 책임보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해야 하는 부담이 서로 너무 커요. (플랫폼 노동자 3)

대화가 안 된다는 것.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500원 정도라고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회사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대화 시도 자체가 힘들니까. 민노총이라고 거기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플랫폼 노동자 5)

33) 김영아·이승호(2019)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업 배달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가운데 '작업 중 안전'(2.54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4)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 문제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했으며,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참여자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업체의 뒤바뀐 태도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sup>34)</sup>

사용자 아니면 다 노동자인데 가진 자들 층에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법률을 해서 노동자 따져가면서 조금만 책임지려고 하는 기업의 이기적인 발상이 포함되어서 노동자성이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네 돈 벌어주고 있으면 산재라든지 최소 안전망을 밑바닥에 깔고 가야 하는데 비윤리적인 것 같고 관리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플랫폼 노동자 2)

노동자라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희를 노동자 취급을 안 해요. 처음에는 노동자처럼 부렸는데 라이더유니온 노동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없애버렸어요. 출결도 없애버리고 처음에는 일어나라 모닝콜 해줬어요. (플랫폼 노동자 4)

#### (5)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직업 전망

참여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를 대하는 소비자의 태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체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인식을 반복 각인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인식했다.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다른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않는 한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위해 여건을 마련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결혼할 여자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가 배달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운송 관련업을 한다고 말을 한대요. (플랫폼 노동자 1)

인식이 좋아지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많고 비 많이 오는 날은 주머니가 가득 차요. (플랫폼 노동자 3)

반말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손님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심부름시키고 반말하고

<sup>34)</sup> 지난 2019년 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음식배달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라이더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을 처리하면서 해당 라이더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는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이다.

받을 때 물건을 채가고 손님들도 반말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사회적 지위가 한참 밑바닥이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요. 자존감도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나... 소비자들은 많이 나아졌어요. 18년 전보다 지금은 고생했다고 뭘 줘요. (플랫폼 노동자 4)

여기에 들어온 이상 발 빼기가 쉽지 않아요. 본업보다 수입이 더 돼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플랫폼 노동자 1)

지금은 충분히 시드머니가 모일 때까지는 할 생각이고 나중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고 인터넷 상거래를 해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4)

## (6) 한국사회의 계층 구조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계층 구조와 불평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상위계층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 등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넘어서 정보력까지 가진 계층 되는 거거든요. 조국이 딸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돈을 넘어서 지위까지 넘어서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노동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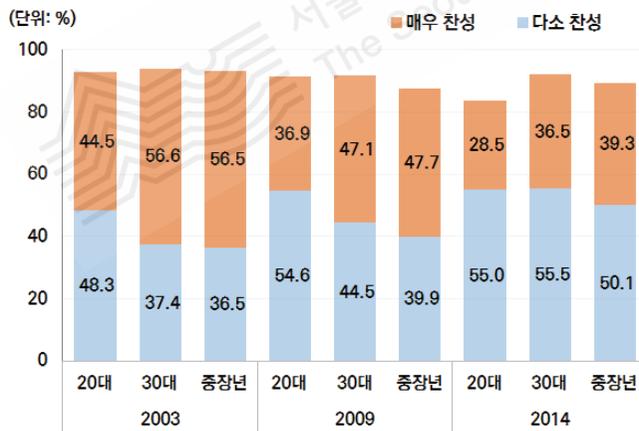
그때부터 저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해! 하면서 전폭적으로 서포트 해 주고 성적 떨어진 과외 선생님 붙여줄 수 있는데 자산이 없으면 과외비 없다. 내가 공부해라.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들이는 것들이 너무 겹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4)

### 3\_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의 차이

#### 1)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및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 소득 재분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취업 기회의 불평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10]은 소득 격차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총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찬성의 강도를 나눠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반대로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은 증가한다. 둘째,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20대의 비율이 30대 및 중장년층의 비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소득 격차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30대나 중장년층의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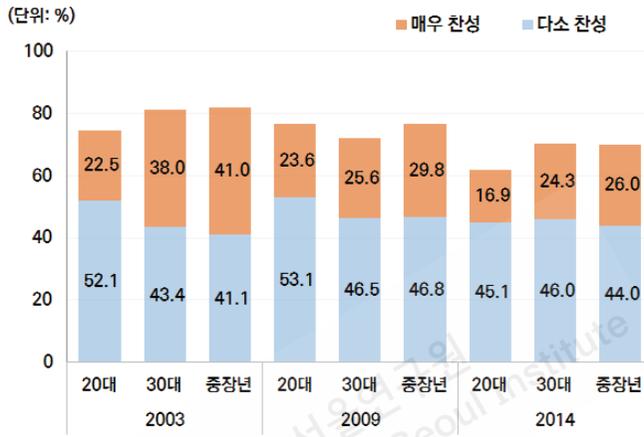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 질문은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이며, 척도는 매우 찬성/다소 찬성/찬성도 반대도 아님/다소 반대/매우 반대/선택할 수 없음임.

[그림 5-10] 소득 격차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그림 5-11]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전체적인 찬성 의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소득 재분배에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30대와 중장년층에서 소득 재분배를 ‘매우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2009년 조사에서 크게 줄어들었고, 20대는 2014년 조사에서 다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를 강하게 지지하는 의견의 비율은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20대가 가장 낮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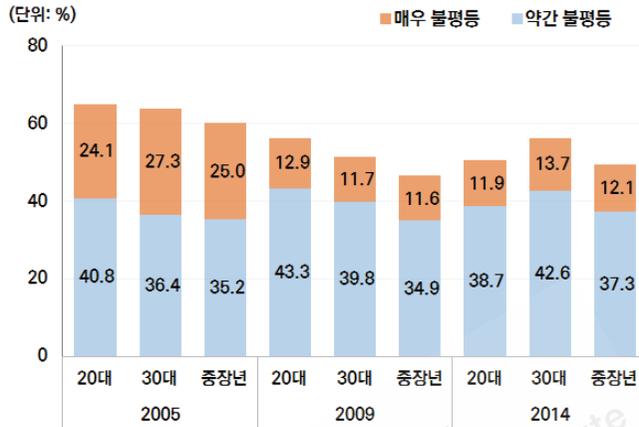
주: 질문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이며, 척도는 매우 찬성/다소 찬성/찬성도 반대도 아님/다소 반대/매우 반대/선택할 수 없음임.

[그림 5-11]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그림 5-12]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앞의 [그림 5-10]에서 살펴본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9년과 2014년 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낮게 나타났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매우 또는 약간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20대 비율이 30대와 중장년층 비율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단, 2014년의 조사에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sup>35)</sup>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이 매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세대별 비율을

35) 이와 유사한 문항이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2007, 2010, 2013, 2016, 2019)에도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할수록 ①, 불평등할수록

살펴보면, 각 조사에서 세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그림 5-10]에서 나타난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대 청년이 소득 격차의 정도에 관한 질문에 보인 반응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관한 질문에 보인 반응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척도는 매우 평등/약간 평등/그저 그렇다/약간 불평등/매우 불평등/모르겠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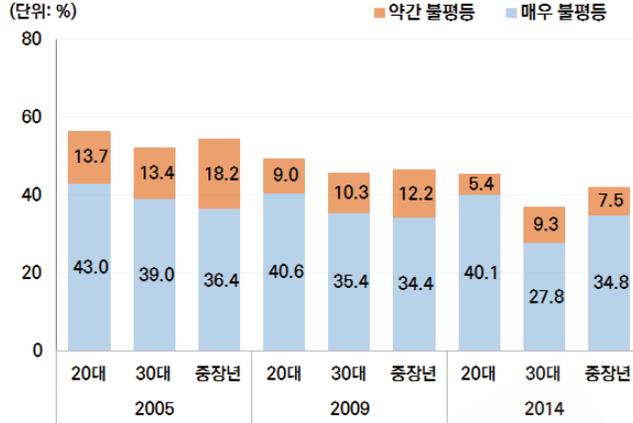
[그림 5-12]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그림 5-13]은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세대별 비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기회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세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4년 조사에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불평등 인식은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4]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세대별 비율이 2014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것으

⑦을 고르는 문항인데, 중간인 ④를 기준으로 불평등에 가까운 쪽인 ⑤, ⑥, ⑦을 전체를 합한 수치를 살펴보면, 2010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불평등에 응답한 20대 비율이 30대나 중장년층의 해당 응답 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표본 수와 대표성의 차이, 척도와 문항 구성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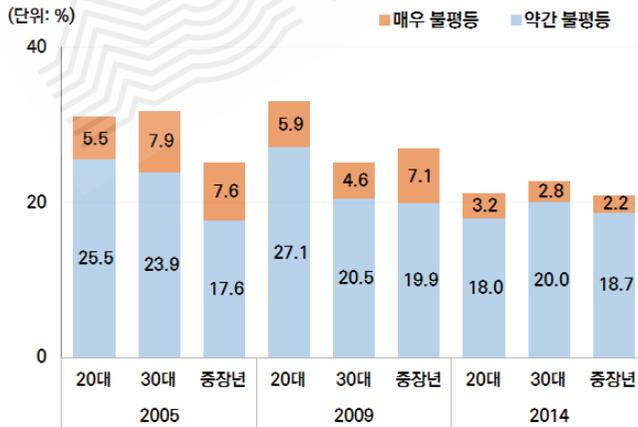
로 확인됐다. 2005년 조사에서는 30대가 20대에 견주어 약간 높은 비율로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했고, 2009년 조사에서는 20대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하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아주 미미해졌다.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취업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척도는 매우 평등/약간 평등/그저 그렇다/약간 불평등/매우 불평등/모르겠다임.

[그림 5-13]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척도는 매우 평등/약간 평등/그저 그렇다/약간 불평등/매우 불평등/모르겠다임.

[그림 5-14]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한편, 같은 질문과 척도가 사용된 소득과 재산, 취업 기회, 그리고 교육 기회에 대한 20대, 30대, 중장년층의 불평등 인식을 함께 비교해 보면(표 5-6 참조),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이 세 영역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다고 느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낀 사람은 이보다 다소 적었으며,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낀 사람이 가장 적었다. '매우 불평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단, 2009년 조사의 중장년층 응답자 가운데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예외가 있다.

【표 5-6】 소득과 재산, 취업 기회,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2005년			2009년			2014년		
	20대	30대	중장년	20대	30대	중장년	20대	30대	중장년
소득과 재산	64.95	63.65	60.19	56.26	51.5	46.47	50.55	56.3	49.38
취업 기회	56.68	52.35	54.62	49.59	45.66	46.62	45.48	37.06	42.31
교육 기회	31	31.82	25.19	33.01	25.11	26.97	21.21	22.76	2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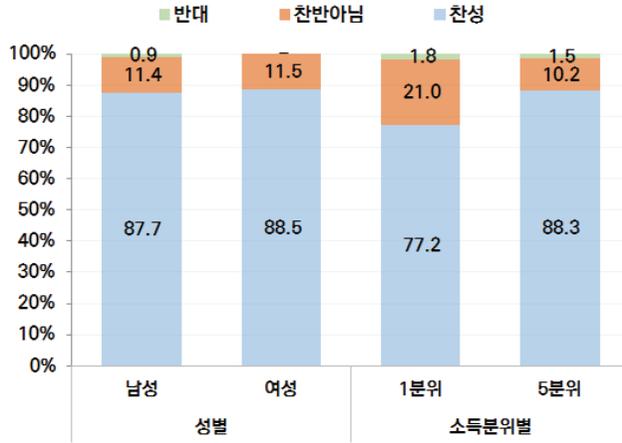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 위의 수치는 응답자 가운데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고른 응답자를 합한 비율임.

## 2)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 및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 소득 재분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취업 기회의 불평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살펴보았다.

[그림 5-15]에 따르면, 소득 격차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는 매우 미미하고,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사이의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소득 하위분위에서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소득 상위분위에서 오히려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응답이 더욱 많은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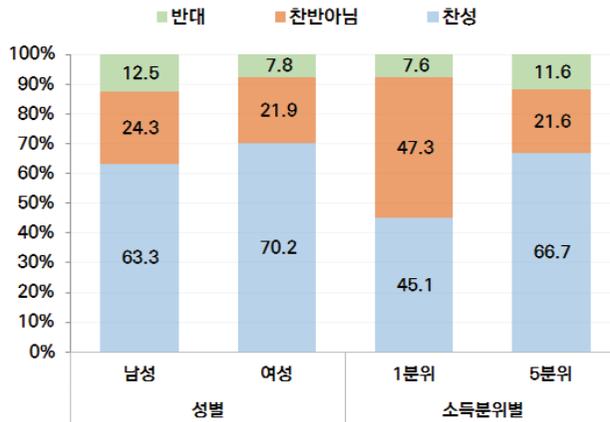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2014)

주: 질문은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이며, 척도는 매우 찬성/다소 찬성/찬성도 반대도 아님/다소 반대/매우 반대/선택할 수 없음임. 위의 그림에서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한 것이고,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한 것임.

[그림 5-15] 소득 격차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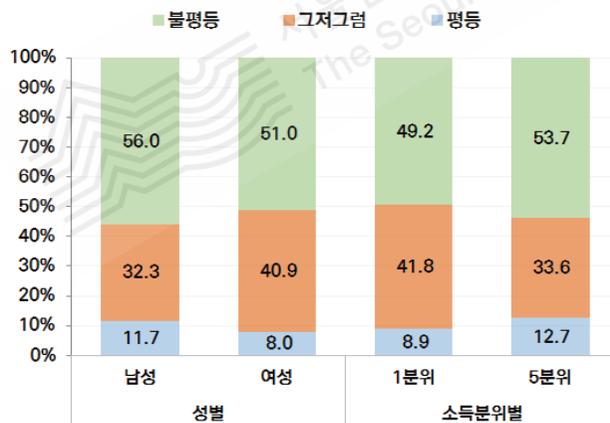
[그림 5-16]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소득 재분배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 5분위에 속하는 청년보다 소득 재분배에 훨씬 덜 우호적인데, 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상응한다. [그림 5-17]은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지만, 평등하다고 응답한 남성도 여성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 5분위에 속하는 청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다는 의견이 적었지만, 불평등하다는 의견 또한 적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과 관련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의 인식이, 소득 1분위보다는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청년의 인식이 좀 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2014)

주: 질문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이며, 척도는 매우 찬성/다소 찬성/찬성도 반대도 아님/다소 반대/매우 반대/선택할 수 없음임. 위의 그림에서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한 것이고,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한 것임.

[그림 5-16]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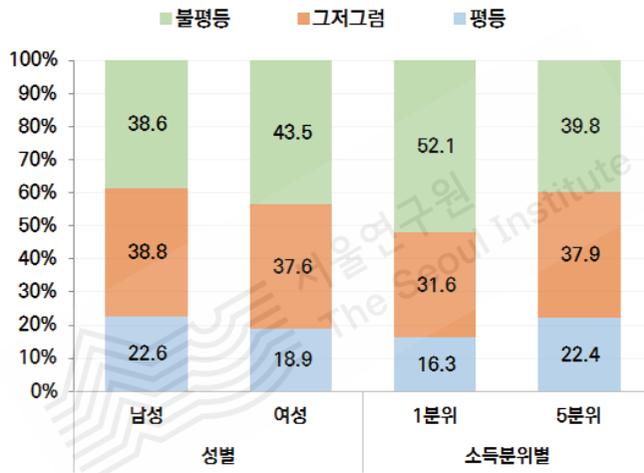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2014)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척도는 매우 평등/약간 평등/그저 그렇다/약간 불평등/매우 불평등/모르겠다임. 위의 그림에서 평등은 매우 평등과 약간 평등을 합한 것이고, 불평등은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합한 것임.

[그림 5-17]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그림 5-18]은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이 소득 5분위에 속하는 청년보다 취업 기회가 더욱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성별에 따른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 거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56.9%, 여성은 69.5%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여 불평등 응답 비율이 2014년 조사와 비교하면 남녀 각각 18.3%, 26% 증가했다. 다만,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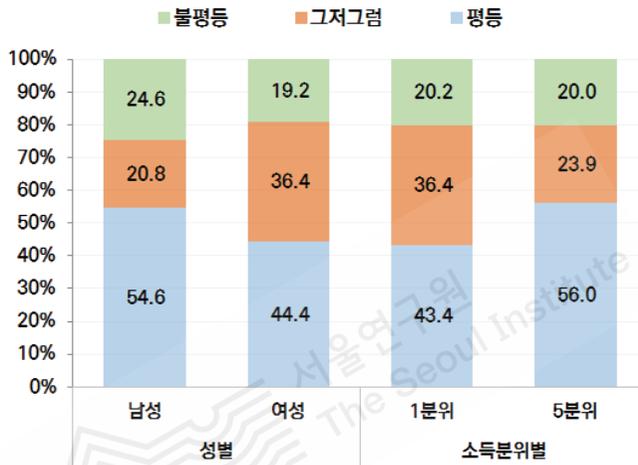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2014)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취업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척도는 매우 평등/약간 평등/그저 그렇다/약간 불평등/매우 불평등/모르겠다임. 위의 그림에서 평등은 매우 평등과 약간 평등을 합한 것이고, 불평등은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합한 것임.

[그림 5-18]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그림 5-19]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은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남성보다 훨씬 적었지만,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이 좀 더 많았다.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은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소득 5분위 청년보다 상당히 적지만,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청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한편, 서울 거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또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30.3%, 여성은 43.5%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여 불평등 응답 비율이 2014년 조사보다 남녀 각각 5.7%, 24.3%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성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취업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다.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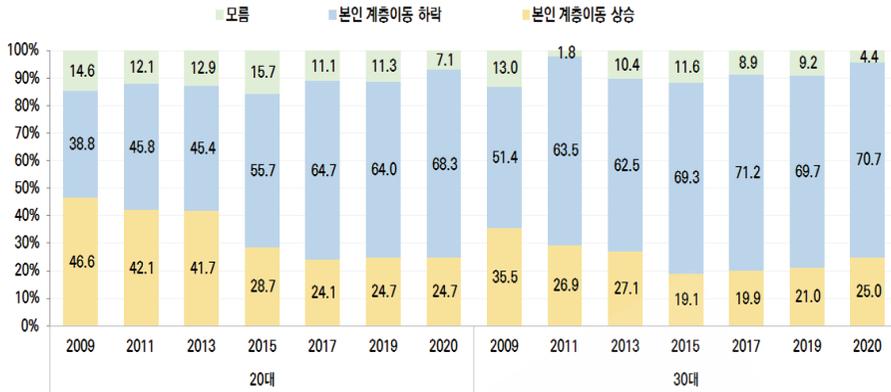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고, 척도는 매우 평등/약간 평등/그저 그렇다/약간 불평등/매우 불평등/모르겠다임. 위의 그림에서 평등은 매우 평등과 약간 평등을 합한 것이고, 불평등은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합한 것임.

[그림 5-19]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내 인식의 차이

### 3) 청년세대의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

[그림 5-20]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20대와 30대 청년이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20대와 30대에서 모두 본인의 계층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이 점점 많아졌고, 상향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

는 30대와 비교할 때 20대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대 응답자 중 상향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6.6%였지만 2019년에는 24.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 거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조사됐다. 즉, 지난 10여 년간 청년, 특히 20대 청년 자신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관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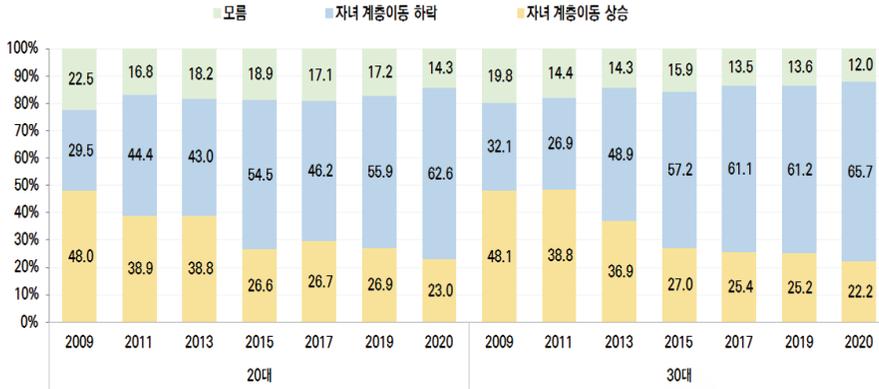
주: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조사」에서 20대의 2009년은 15~29세, 2011~2015년은 13~29세, 2017~2019년은 19~29세 자료임. 2020년의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 20대는 20~29세임.

[그림 5-20] 20대와 30대 본인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 추이

[그림 5-21]은 위와 같은 조사를 이용하여 20대와 30대 청년이 자녀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20대와 30대에서 모두 자녀의 계층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이 점점 많아졌고, 상향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점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20대와 30대 모두 자녀세대의 계층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한편, 2020년 7월에 실시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의 자녀세대 계층상승 전망은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의 결과보다 20대와 30대 모두에서 좀 더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대와 30대 사이에 일정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자녀세대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2009년 당시 20대는 자녀의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만큼 본인의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도 컸던 반면, 30대는 자녀의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보다 본인의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훨씬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30대가 다소 비관적인 계층상승 전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주: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조사」에서 20대의 2009년은 15~29세, 2011~2015년은 13~29세, 2017~2019년은 19~29세 자료임. 2020년의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 20대는 20~29세임.

[그림 5-21] 20대와 30대 자녀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 추이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20대와 30대 본인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본인과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인식 모두가 더욱 비관적인 방향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10여 년 전에는 적어도 30대에서 본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낮았지만, 자녀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는 컸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대마저 매우 낮아져 본인과 자녀세대에 대한 기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계층이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원인과 관련하여, 계봉오·황선재(2016)는 절대적 사회이동성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김희삼(2016)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내 상향이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 상향이동 가능성도 낮게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용관(2018)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계층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근에 증가한 것은 절대적 사회이동성 감소라는 배경 아래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4\_소결

제1절에서는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평등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배경은 응답자가 15세 무렵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가족 배경,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응답자가 15세 무렵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의 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사회 일반과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가운데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형성 불평등의 심각성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가족 배경이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 예측을 제외하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모의 지위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앞서 나타난 비교적 뚜렷한 상관관계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하층보다 소득 중하위층에서 더욱 컸고, 주거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에서도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심각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은 발견되지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흥미롭게도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계층이 소득 최하층이 아니라 중간층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불평등 인식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하지만 불평등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사이의 상관관계는

36) 이러한 영향은 불평등 인식뿐만 아니라 공정성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이희정(2018)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꽤 다르게 드러난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가족 배경은 이보다 약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득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객관적인 경제적 처지는 가장 약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못지않거나 더 큰 영향력을 여러 인식이나 태도, 선호 등에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up>37)</sup>

제2절에서는 청년 연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청년들이 자산 불평등을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자산 격차가 이미 개인의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둘째, 세대 간 격차가 드러나는 부분은 청년이 처한 현실의 한 단면에 불과하므로 세대 간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청년의 처지 전체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청년들은 교육을 매개로 한 불평등의 세습에 주목하면서 하나의 그룹에 적용되는 공정성 또는 기회의 평등이 다른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기존 규범을 준거로 시혜나 배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며,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포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산 배경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구조적 조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우면서도 시간 대비 수익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둘째, 소득의 불안정성과 사고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배달료를 낮게 유지하며 높은 프로모션 요금으로 노동을 유인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고, 시간 선택의 자유도 온전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성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계층 구조 및 불평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은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이 자신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적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7) 본인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평등 인식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재분배 선호 결정요인 등의 많은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변수이다(예를 들어, 강우진, 2020; 황선재·계봉오, 2018; Choi, 2021; Kim & Lee, 2018).

제3절에서는 기존의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불평등과 관련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먼저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 차이를 소득 격차와 재분배, 소득과 재산 불평등, 취업 및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30대와 중장년층의 인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30대의 인식은 20대보다는 중장년층의 인식과 가까웠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서도 재분배를 강하게 지지하는 의견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낮았고, 30대와 중장년층의 지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대의 인식이 나머지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재산 불평등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2009년, 2014년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20대가 근소하게 높았는데, 20대와 30대의 격차가 가장 컸던 2014년도 조사는 따로 언급할 만하다. 이때 20대는 45.5%가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30대는 37.1%만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예로 들면, 첫째, 2010년대 이후 30대 청년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20대의 고용률은 정체 내지 다소 하락했다(그림 3-5 참조). 둘째, 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0년대 이후 30대는 정체 경향을 보였다면 20대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3-6 참조). 셋째, 2010년대 이후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조금씩 상승했는데,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도 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다(그림 3-10 참조). 한편,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도 조사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때 세대 간의 격차는 매우 미미했다. 다음으로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를 기존 조사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14년도 자료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격차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소득에 따른 차이는 드러났는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득 상위층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진술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의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분배에 우호적이었고, 소득 최상위층의 재분배 찬성 의견이 소득 최하위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 그

이유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미미했던 이유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고, 소득 하위층의 청년이 상위층의 청년보다 훨씬 더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남녀 각각 18.3%, 26% 증가했다. 한편, 20대와 30대 사이의 연령대별 차이는 미미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10년대 후반에 청년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답한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소득 하위층보다는 소득 상위층이 많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취업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또한 2014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5.7%가 증가했고, 여성은 무려 24.3%나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분석해 본인과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여 년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결과를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20대와 30대 모두에서 상향이동이 가능하리라는 응답이 꾸준히 낮아졌다. 특히 20대는 지난 10여 년간 이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절대적인 수치는 30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인 변화의 폭을 보면 20대의 비관적 인식이 30대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한 지난 10여 년간 20대와 30대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 다만, 20대는 본인이나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지난 10여 년간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인 동조 현상이 있었는데, 30대는 이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10여 년 전 30대는 본인의 계층이동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51.4%), 자녀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훨씬 덜 부정적이었는데(32.1%), 이 격차가 최근 매우 좁혀진 것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최근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20대와 30대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 청년의 일반적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

## 결론 및 정책과제



1\_청년 불평등의 현실과 인식, 그리고 연구의 한계

2\_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06. 결론 및 정책과제

### 1\_청년 불평등의 현실과 인식, 그리고 연구의 한계

#### 1) 청년 내부의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와 불평등의 대물림 경향

이 연구는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새로이 밝힘으로써 다차원적 특성을 지닌 청년과 불평등의 문제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의 측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고찰했다. 객관적 상황 분석 가운데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한 분석이 불평등 차원 각각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다차원적 불평등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청년 불평등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여기서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와 이것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의 조망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 인식 분석은 기존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에 덧붙여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내용을 보완했다.

먼저 이전의 청년세대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불평등의 변화를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묶기보다 여러 차원에서 내부 격차를 지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연령대(20대와 30대), 성별, 소득, 학력,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 등에 따른 내부 격차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또한 깊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최근 그 정도가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소득

과 자산 격차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불평등은 혼자 사는 청년 사이에서 가장 컸고, 청년부부 가구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다. 30대 부부 가구의 상대적 소득은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 가구의 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30대 청년부부 가구는 주택 구매 등의 영향으로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부채도 많아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불평등이 30대보다 훨씬 높았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은 예상대로 사교육, 학업성취도, 대학진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구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90년대생 청년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렸다. 그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 비율이 급감한 것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실업률도 30대와 달리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가운데 저학력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으며, 20대 남성의 종사상 지위도 크게 불안정해졌다. 반면, 20대와 달리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30대보다는 20대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나빠졌다.

주거와 가족형성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성장 경제의 지속 속에 1인 가구의 급증 및 월세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가구주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이 최근에 더욱 두드러졌다. 30대 부부 가구의 자가 비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탓에 이는 주거 격차와 더불어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를 증폭시켰다.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과 더불어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던 30대 혼인율마저 2010년대 후반에 정체 내지 하락한 영향이 컸다. 20대의 결혼은 더욱 드문 현상이 되었고, 30대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야만 결혼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출산율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교육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파악했다.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대 여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획득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소득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2000년대 이후 점점 커져 왔다는 사실이다. 경제자본의 직접적인 상속을 제외하면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이는 학령기 이전의 양육 격차에서부터 시작되며, 대학진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사재기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 노동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교육 투자 연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하다. 교육을 통한 부모 지위의 대물림 경향은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 양상도 바뀌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사회이동성이라는 렌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 간의 상대적 사회이동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1980년도 출생 코호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생에 이르러 그 영향이 극대화되었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무려 70% 정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그 절반으로 조사됐다. 20대 취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세대 간 교육의 절대적 이동성에서 30대의 상승 이동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20대의 상승 이동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20대 부모의 다수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간 직업의 절대적 이동성에서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이 크게 두드러졌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소득이

낮은 그룹은 10년 후에도 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초기 소득이 높은 그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른 소득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소득이동성의 저하가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위의 상승 가능성도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어떤 경로로 하느냐가 이후의 생애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와 함께 교육에서의 경쟁체제와 기회 불평등을 촉진한다.

## 2) 자산 불평등과 불평등 대물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층상승에 비관적인 청년

이어서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인식은 세대 간 및 세대 내에서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이 꼽혔다. 집단 사이의 불평등 가운데는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청년 세대 내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 청년들은 자산 불평등이 여전히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을 묻는 앞의 문항에서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은 소득 및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청년 사이의 불평등에서는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이 소득 및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은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은 남성보다 심각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4명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이 남성보다 심각했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질문에서 청년들 10명 가운데 9명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다수였다. 계층이동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이었다. 불과 4명 중 1명만이 본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

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항목에서 청년들 10명 가운데 불과 1~2명만이 우리나라에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지위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세대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10명 가운데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약간 낮았는데, 학력에 따른 격차는 매우 큰 편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학력에 따른 삶의 조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속해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평등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배경은 응답자가 15세 무렵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가족 배경,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응답자가 15세 무렵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의 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사회 일반과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가운데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형성 불평등의 심각성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가족 배경이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 예측을 제외하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모의 지위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앞서 나타난 비교적 뚜렷한 상관관계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하층보다 소득 중하위층에서 더욱 컸고, 주거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에서도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심각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은 발견되지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흥미롭게도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계층이 소득 최하층이 아니라 중간층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불평등 인식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평등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꽤 차별적으로 드러난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가족 배경은 이보다는 약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득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객관적인 경제적 처지는 가장 약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 차이를 소득 격차와 재분배, 소득과 재산 불평등, 취업 및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30대와 중장년층의 인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30대의 인식은 20대보다는 중장년층의 인식과 가까웠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서도 재분배를 강하게 지지하는 의견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낮았고, 30대와 중장년층의 지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대의 인식이 나머지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재산 불평등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2009년, 2014년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20대가 근소하게 높았는데, 20대와 30대의 격차가 가장 컸던 2014년도 조사에서 20대는 45.5%가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30대는 37.1%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도 조사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때 세대 간의 격차는 매우 미미했다.

다음으로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차이를 기존 조사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14년도 자료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격차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소득에 따른 차이는 드러났는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득 상위층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진술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의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분배에 우호적이었고, 소득 최상위층의 재분배 찬성 의견이 소득 최하위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이나 소득에 따른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고, 소득 하위층의 청년이 상위층의 청년보다 훨씬 더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남녀 각각 18.3%, 26% 증가했다. 한편, 20대와 30대 사이의 연령대별 차이는 미미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10년대 후반에 청년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답한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소득 하위층보다는 소득 상위층이 많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취업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또한 2014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5.7%가 증가했고, 여성은 무려 24.3%나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분석해 본인과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여 년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20대와 30대 모두에서 상향이동이 가능하리라는 응답이 꾸준히 낮아졌다. 특히 20대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절대적인 수치는 30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인 변화의 폭을 보면 20대의 비관적 인식이 30대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한 지난 10여 년간 20대와 30대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다만, 20대는 본인이나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지난 10여 년간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인 동조현상이 있었는데, 30대는 이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10여 년 전 30대는 본인의 계층이동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51.4%), 자녀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훨씬 덜 부정적이었는데(32.1%), 이 격차가 최근 매우 좁혀진 것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최근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20대와 30대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 청년의 일반적인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다차원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이상으로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현실과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청년들과 플랫폼 노동에 뛰어들어 청년들의 목소리와 고민도 직접

들었다.

불평등의 여러 영역 가운데 역시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은 현실과 인식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득 격차도 심각하긴 하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자산 격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청년에게 팽배했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자산 격차가 청년에게는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진 셈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요즘 세태를 지칭하는 ‘영끌’이나 최근 30대 중심의 서울 아파트 ‘패닉바이нг’ 현상은 이러한 현실을 직접 반영한다. 지금 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 넘어서질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낡은 결과이다. 이 때문에 땀질 처방식의 부동산 대책을 넘어 해방 이후의 토지개혁과 같은 급진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김종철, 2017),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에 논외로 한다.

수많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여러 불평등 영역들이 시공간 속에 교차하면서 영킨 매듭처럼 보이지만,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이나 자산의 재분배 정책을 제외하면 결국 다차원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고리는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 또한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산업구조의 변화나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심화 등은 교육 자체의 이러한 역할을 매우 제약하고 있다(김두환, 2017).

즉, 노동시장 개혁이 코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푸는 열쇠일 수 있다. 사실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정책이 일정한 수준에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을 완화하면 교육 기회 및 취업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노동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면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해소하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족형성 불평등을 줄여 자산 불평등 완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과 지위 이동을 위한 직업 및 직무 교육 훈련을 활성화하면 임금 및 일자리 지위의 상승을 통한 사회이동을 촉진하여 불평등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덧붙여,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매우 도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불안정 노동에는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노

동자의 요구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 청년은 이 문제의 해결이 플랫폼 노동에 내재한 일의 자율성이라는 긍정적 속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일의 자율성과 생활의 안정성 사이의 조화는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하다.

#### 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의 현실과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폭넓게 고찰하면서 어느 정도 그 특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였지만 여러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영역별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는 물론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일차적으로 청년이 마주한 다차원적 불평등의 객관적인 현황 분석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차원적 불평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할 때 다차원적 불평등의 공간에서처럼 인과관계의 방향이 단순하지 않을 때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는 후속연구가 극복해야 할 몫으로 남겨둔다.

둘째, 불평등 영역별로 그 동태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 등으로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기간에 걸친 변화 양상을 추적하지는 못했다. 이 역시 앞으로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사회이동성 연구에서는 더욱 긴 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20대인 90년대생의 사회이동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축이 적어도 30대 초중반이 되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대와 30대를 구분하여 분석했지만, 연령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보다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용할 때가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분석할 때는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 때문에 20대 전반과 20대 후반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넷째,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를 살필 때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를 주로 활용했는데, 서울과 비서울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청년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불평등 관련 인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장동호, 2011), 관련 후속연구는 전국의 청년을 포괄하면서 지역 간 인식의 격차까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은 이 연구가 포괄하는 기간에 들어 있지만, 이러한 경제 충격이 불평등의 각 영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또한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가 청년 불평등에 미친 영향도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를 것임에 틀림 없다.

## 2\_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1) 기존 청년정책의 한계

불평등의 역사를 추적한 역사학자 발터 샤이델에 따르면, 인류사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벽을 허물어왔던 것은 오직 전쟁, 혁명, 체제 붕괴, 대유행병뿐이다(Scheidel, 2017). 하지만 이는 불평등의 완화와 관련한 정책 대응 또는 정치 역할의 무용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계층이동성의 저하를 비롯한 불평등의 심화가 필연적인 경제 법칙에 따른 것이라면 정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라면, 좀 더 평등한 기회와 결과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불평등의 심화를 제어할 수 있다.

사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사회 각 영역에서 벌어진 다층적인 격차의 심화와 이것이 청년세대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일깨워주었다. [표 6-1]은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련한 그간의 정책적 시도를 보여준다. 정부 또한 최근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2019년 7월에는 계층이동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 2020년 3월에는 5개 분야 34개 과제를 망라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지난 9월에는 5개 분야 43개 과제를 제시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제출되었다.<sup>38)</sup>

<sup>38)</sup>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2020년 9월에 출범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개선방안의 5개 분야와 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분야(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2) 주거 분야(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소기업

한편,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중앙정부 19개 부처에서 100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74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표 6-1] 청년 불평등 관련 기존 정책

구분	명칭	목적	주요 내용	소관기관
소득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준비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지원	졸업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sup>39)</sup>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촉진	졸업 후 2년이 지난 중위소득 150% 미만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원	경기도
자산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 <sup>40)</sup>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 촉진과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적립, 정부 900만 원, 기업 400만 원 공동 적립,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 적립, 정부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 공동 적립, 만기 시 3,000만 원의 목돈 마련	고용노동부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지원	세전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에게 2년 또는 3년간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저축액과 1:1 매칭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서울시
	청년노동자통장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34세 이하 청년이 3년간 일하면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총 1,000만 원 적립	경기도
주거 관련	청년월세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3) 교육 분야(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4) 생활 분야(청년 저축계좌 확대, 청년 자립마을 확대), (5) 참여·권리 분야(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39) 서울시 이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청년수당, 대전시의 청년취업희망카드, 부산의 청년디딤돌카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최근에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둔 각종 청년정책의 효과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기에 논외로 하고, 2000년대 이후 쏟아진 무수한 기존 정책들은 사회이동성의 하락을 포함한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 가운데 하나이다.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청년정책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효과성 분석과는 별개로, 기존 사회보장정책 전반의 효과성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이현주 외(2020)가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존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의 수급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청년세대가 대체로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좀 더 들여다 보면, 실업급여는 청년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5세 청년 가구는 가구 기준 소득 5~6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26~39세 청년 가구는 소득 4~6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모성보호 급여의 수급률은 소득 상위 8~10분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세대가 마주한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전반적인 일자리의 부족 속에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로도 더욱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청년정책을 넘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sup>41)</sup>

대부분 취업준비 비용 지원과 구직 촉진이 그 목적이어서 일정한 범주의 인구집단에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사회수당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40) 만 15~34세 청년이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41) 불평등 관련 최신 연구의 집대성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윌킨슨과 피킷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조세 체제나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으로는 불평등 감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작업장 민주주의를 포함한 경제 민주주의의 확대를 역설한다(Wilkinson & Pickett, 2018).

## 2) 장벽사회의 문턱을 낮지 않기 위한 정책 목표

다차원적 불평등 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이러한 구조의 세습과 고착화가 더욱 강화되면 격차사회는 폐쇄적인 장벽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 청년 불평등의 특성을 폭넓게 살펴본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분명히 장벽사회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특히 90년대생인 20대 청년에게 그 장벽은 좀 더 가깝게 다가와 있다. 그리고 같은 20대 청년 가운데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에게 그 장벽은 더욱 견고하게 보인다. 장벽사회로 향하는 길을 막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불평등 각각의 차원이 서로 연쇄를 이루며 구조화되고 있는 메커니즘을 제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차원적 불평등 구조에서 중핵을 이루는 경제적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고착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대 간 지위의 세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교육 자체의 불평등이라기보다 교육 불평등을 양산하는 교육 바깥의 불평등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멋진 스펙을 쌓지 않으면 경제적 보장과 안정을 이루기 힘든 사회에서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계층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일종의 합리적인 경제행위이다. 교육 불평등은 이러한 집단적 경제행위의 결과로 더욱 강화된다.

현재의 지배적인 불평등 구조는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안정적으로 보장된 인생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단일한 기회구조 모델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와 동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지프 피시킨이 제안한 기회 다원주의(opportunity pluralism) 모델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Fishkin, 2014). 그에 따르면, 기회 다원주의 모델은 생애주기의 어떤 시점에서든 다양한 관문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희소한 지위를 둘러싼 제로섬 경쟁이 벌어지는 단일한 기회구조 모델과 이에 기초한 불평등의 구조화와 영속화 메커니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다원적 기회 모델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복지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동조성 강화 경향을 제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김희삼, 2017). 구체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추구하고, 후자의 교육을 택하더라도 다양한 양질의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sup>42)</sup>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인생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보편적인 사회보장 확대와 결합한 노동시장 개혁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사회이동성지수2020’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의 공정한 임금 분배와 사회보장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World Economic Forum, 2020).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6-2] 청년 불평등 관련 기존 정책 제안**

구분	명칭	목적	주요 내용	제안 출처
소득 관련	청년기본소득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청년(19~29세)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매월 지급	청년기본소득 법안(김부겸 의원, 2017)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 이용권	생애주기상 안식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보편적인 소득보장 기회 제공	청년기(20~39세) 최대 2년과 중장년기(40~59세) 최대 2년 동안 중위소득 30%(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신청자에게 지급	석재은 (2018)
자산 관련	청년기초자산	불평등의 세대 간 확산 고리 차단	일정 연령(20세 또는 25세)의 모든 청년에게 사회출발자본(약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속세와 부유세로 재원 마련	김병권 (2020)
	Universal Capital Endowment	부의 집중 완화와 부의 확산	만 25세 청년에게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를 지급하고, 상속세와 부유세로 재원 마련	Piketty (2020)
주거 관련	청년주거안정 지원	청년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에 이바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19~39세)에게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지원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	청년주거안정 지원특별법안(김현아 의원, 2017)

주: 청년기본소득법안과 청년주거안정지원특별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의안으로 남았음. 석재은(2018)의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생애주기별 서울형 기본소득’이라 명명하여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

42) 예를 들어, 대학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전문기술 관련 직업을 준비시키는 독일의 수습 제도는 대학진학으로 획일화된 삶의 경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여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여력을 갖도록 [표 6-2]의 제안과 같이 소득 또는 자산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다.<sup>43)</sup>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양질의 공보육과 공교육의 보장,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막고 일자리 지위의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체제의 수립,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인 관철과 함께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sup>44)</sup>

좋은 대학에 가서 인기 높은 전문직종으로 진출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 불평등 완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마련된 사회는 인생에서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주어져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할 이유가 없는 사회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리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아래에서만 용인될 것이다.

### 3) 포괄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앞서 언급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포괄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적 차원의 구조개혁을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청년정책은 수직적 차원의 다층적 포괄성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과 결합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통합적 노동시장 정책 패러다임 도입을 전제로 한다.<sup>45)</sup> 이러한 구조적 대안과 연결하여 정책을 설계하려는 노력 없이, 예를 들어, 단순히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몇 가지 나열하는 것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4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청년에게 더 시급한 것은 소득보장보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 지원이며, 무조건적 소득보장은 청년층의 구직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석영환, 2017).

44) 참고로, 김희삼(2020)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격차의 방지, (2) 적극적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재능 사장의 방지, (3) 교육과정의 개별화를 통한 성공경로의 다양화, (4)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한 사회적 배제의 예방, (5)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과 포용의 학습 패러다임로의 전환.

45) 전병유 외(2018)와 장지연 외(2019) 등의 최근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닌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다.

둘째, 불평등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안적 청년정책 또한 관련 영역을 가로지르는 수평적 포괄성을 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 불평등 영역에서 우리는 2000년대 이후 특히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 상승 구조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포괄해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6-1] 청년정책의 포괄성

셋째, 불평등은 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동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은 시간적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 포괄성은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개입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나 인적자본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년기 이전 아동과 청소년기의 정책개입도 중요하다.

넷째, 청년이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 여러 집단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청년 가구의 유형이나 청년 내부의 이질적인 욕구와 인식에 조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미, 2018). 예를 들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현재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서는 자녀

가 있는 청년부부 가구만 1순위로 선정된다. 주택정책이 단순히 출산을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청년 가구의 유형별로 각각의 주거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행히 올해 2월에 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46)</sup>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년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청년정책의 거버넌스 프레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그 집행을 담보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오늘날 청년세대 자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선취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 사이에는 기존의 규범을 준거로 시혜나 배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며,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포괄하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김창인 외, 2019). 이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기존의 낡은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의 밑거름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sup>46)</sup> 정부는 2020년 9월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 20명과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참고문헌

- 강우진, 2020,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 「한국인구학」, 19(2), pp. 37-61.
- 계봉오·김영미, 2020, “불평등과 인구변동: ‘운명의 분기’는 시작되었는가?”, 2020 불평등연구회 심포지엄 발표문.
- 계봉오·황선재, 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pp. 1-28.
- 계봉오·황선재·최율, 2019, “행정자료를 이용한 세대 간 분위소득 이동 분석”, 정해식 외,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127-144.
- 고용노동부, 2017,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Guide Book」.
- 구인회·김정은, 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pp. 27-49.
- 김경희, 2019,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세대 전더 및 사회의식 조사 결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토론회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발표문.
- 김낙년, 2016,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40(3), pp. 393-429.
- 김도영·최율, 2019,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 「경제와 사회」, 123, pp. 40-74.
- 김동한·고영화, 2017, “도시양극화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정책Brief No. 635, 국토연구원.
- 김두환, 2017,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론 비판”, 「사회사상과 문화」, 20(4), pp. 197-236.
- 김병권, 2020, 「사회적 상속: 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 이음.
-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선·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기·천주희·최태섭·최혁규, 2019, 「통계로 본 서울 청년의 삶 연구보고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김성태·전영준·임병인, 2012,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 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60(4),

pp. 5-43.

김세직·류근관·손석준, 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2), pp. 355-384.

김수혜·손수경·임혜정·노언경, 2020, "OECD 형평성 지표로 본 교육격차 추이: 서울교육종단연구 1~9차연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도시연구」, 21(2), pp. 127-144.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pp. 27-52.

김영미, 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pp. 386-396.

김영아·이승호, 2019,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김용성, 2014,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대한 연구: 학력계층을 중심으로", 김용성·이주호 엮음,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김종철, 2017, "기본자산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전망」, 101, pp. 107-135.

김창인·전병찬·안태언, 2019, 「청년현재사」, 시대의창.

김희삼, 2016,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 통계개발원.

김희삼, 2017, "다중격차와 사회통합의 다중장벽: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동조성", 황규성·강병익 엮음, 「다중격차II: 역사와 구조」, 페이퍼로드, pp. 147-176.

김희삼, 2020,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 정운찬 외,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 동반성장연구소.

남재욱·류기락·김영빈·변영환·최승훈·크리스티나 히슬, 2019,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혜진·변금선·구인회, 2015, "대학진학에서 가족소득 역할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17차연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박효민, 2019,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539-550.

변금선·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pp. 257-285.

변수용·김경근, 2008a,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pp. 39-66.

변수용·김경근, 2008b,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pp. 53-82.

- 석영환, 2017, 「청년기본소득법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석재은, 2018,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보건사회연구」, 38(2), pp. 103-132.
- 성명재, 2018,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4(3), pp. 1-58.
- 성재민, 2018, “임금 불평등의 최근 추세와 원인”, 「월간노동리뷰」, 8월호, pp. 55-74.
- 신진욱·조은혜, 2020,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18(1), pp. 49-99.
- 여유진, 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pp. 61-81.
- 오성재·주병기, 2017,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3), pp. 1-30.
- 윤성주, 2018,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11(1), pp. 21-48.
- 이경희·민인식, 2016, 「직업 및 소득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기쁨, 2019, “청년층(20~29세) 고용보조지표 추이와 특징”, 「월간노동리뷰」, 7월호, pp. 44-55.
- 이수빈·최성수, 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과 유지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 「한국사회학」, 54(1), pp. 181-240.
- 이용관, 2018,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pp. 465-491.
- 이은수·박가열, 2018, “4년제 대학 재학 중 일 경험 유형이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31(3), pp. 115-133.
- 이지영·고영선, 2019,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KLI 패널 워킹페이퍼.
- 이진영, 2017,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0(3), pp. 1-29.
-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 이철승·정준호, 2018,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동향과 전망」, 104, pp. 316-373.
- 이철승·정준호·전병유, 2020, “세대·계급·위계 II: 기업 내 베이비 부머 / 386 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 「한국사회학」, 54(2), pp. 1-58.
-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오욱찬·이윤경·이원진·성재민·이길제·박형준·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

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위원회.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pp. 119-164.

장동호, 2011,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대중의 불평등 인식수준과 빈곤관의 차이 분석”,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37, pp. 259-284.

장지연·이호근·조임영·박은정·김근주·Enzo Weber, 202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정이환·전병유·이승렬·조성재·강성태,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 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2018,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월간노동리뷰』, 10월호, pp. 21-35.

전병유·정준호, 2014, “소득-자산의 다중격차”, 『경제발전연구』, 20(1), pp. 105-134.

전병유·황인도·박광용, 201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정원오·김연아, 2015,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과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46(1), pp. 85-109.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 사회」, 생각의힘.

조윤지, 2020,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19-24.

주희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pp. 59-88.

최성수·이수빈, 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pp. 77-113.

홍민기, 2015, “최상위 임금 비중의 장기 추세 (1958-2013)”, 『산업노동연구』, 21(1), pp. 191-220.

황규성, 2016,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 전병유·신진욱 엮음,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페이퍼로드, pp. 23-38.

황선재·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pp. 65-88.

Brunori, P., F. H. G. Ferreira & V. Peragine, 2013, “Inequality of Opportunity,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Mobility: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E. Paus (ed) Getting Development Right: Structural Transformation, Inclusion, and Sustainability in the Post-Crisis Era, Palgrave Macmillan, pp. 85-115.

- Byun, S., S. Evan & K. Kim, 2012, "Revisiting the role of cultural capital in East Asian educational systems: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85(3), pp. 219-239.
- Carroll, D. R. & A. Chen, 2016, "Income inequality matters, but mobility is just as important", *Economic Commentary*, 2016-06,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 Chauvel, L. & M. Schröder, 2014, "Generational inequalities and welfare regimes", *Social Forces*, 92(4), pp. 1259-1283.
- Choi, G., 2021, "Individuals' socioeconomic position, inequality perceptions,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https://doi.org/10.1007/s10888-020-09471-6>.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pp. 79-102.
- Crawford, C., L. Macmillan & A. Vignoles, 2017, "When and why do initially high-achieving poor children fall behind?", *Oxford Review of Education*, 43(1), pp. 88-108.
- Doepke, M. & F. Zilibotti, 2019, *Love, Money, and Parenting: How Economics Explains the Way We Raise Our Ki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마티아스 도프케·파브리시오 질리보티, 2020, 「기울어진 교육: 부모의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김승진 옮김, 메디치.)
- Fishkin, J.,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조지프 피시킨, 2016,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유강은 옮김, 문예출판사.)
- Kim, H. & Y. Lee, 2018,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Social Science Journal*, 55(3), pp. 300-312.
- Koh, Y., 2018,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 Policy Study 2018-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아네트 라루, 2012, 「불평등한 어린 시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박상은 옮김, 예코리브르.)
- Montenegro, C. E. & H. A. Patrinos, 2014, "Comparable Estimates of Returns to Schooling Around the Worl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020, Education Global Practice Group, World Bank.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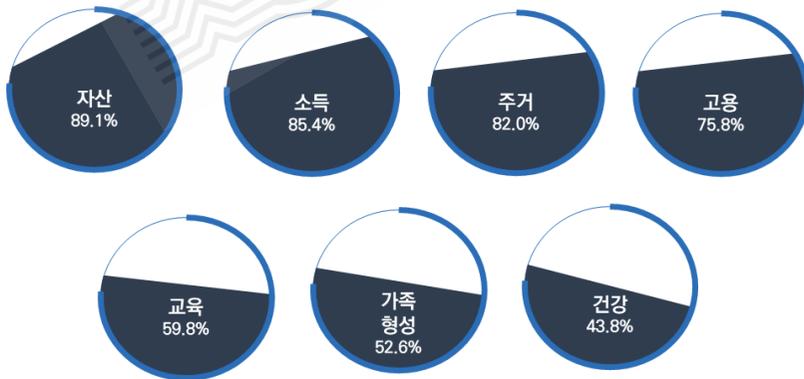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oldhamm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토마 피케티,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옮김, 글항아리.)
- Piketty, T., 2020, *Capital and Ideology*, A. Goldhamm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토마 피케티,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 Putnam, R. 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imon & Schuster. (로버트 D. 퍼트남, 2017, 「우리 아이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정태식 옮김, 페이퍼로드.)
- Reeves, R. V., 2017, *Dream Hoader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리처드 리브스, 2019, 「20 VS 80의 사회」, 김승진 옮김, 민음사.)
- Roemer, J. 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가이 스탠딩,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 Scheidel, W., 2017,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터 샤이델, 2017, 「불평등의 역사」, 조미현 옮김, 에코리브르.)
- Stewart, M., 2018, "The 9.9 Percent is the New American Aristocracy",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8/06/the-birth-of-a-new-american-aristocracy/559130/>. (매튜 스투어트, 2019, 「부당세습」, 이승연 옮김, 이음.)
- Wilkinson, R. & K. Pickett, 2018, *The Inner Level*, Penguin Books. (리처드 윌킨슨·케이트 피켓,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이은경 옮김, 생각이음.)
-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Global Social Mobility Report 2020: Equality, Opportunity and a New Economic Imperative*.

## 부록: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 요약

### 1)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 (1) 불평등 영역별 심각성(심각성 인식 및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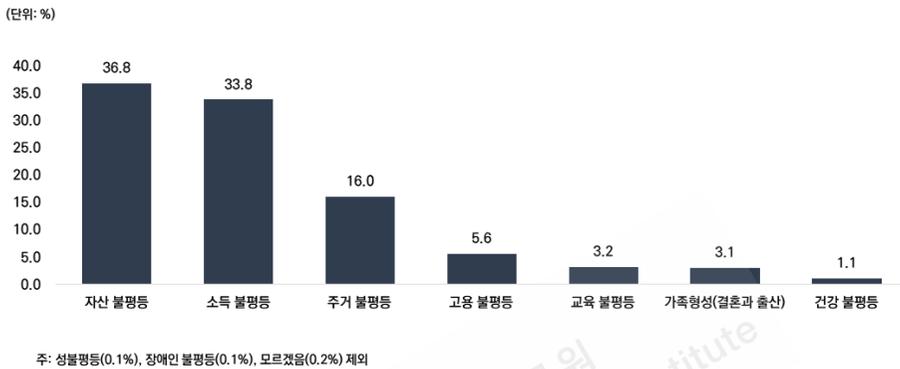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심각성(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을 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자산 불평등은 10명 중 9명(89.1%)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득(85.4%), 주거(82.0%), 고용(75.8%), 교육(59.8%), 가족 형성(52.6%), 건강(43.8%) 순이었다. 불평등의 전체 영역에서 남성보다 여성, 20대보다 30대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과 건강 불평등은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 불평등의 경우 남성은 66.7%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지만, 여성은 84.6%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다. 건강 불평등의 경우 남성의 35.4%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여성은 52.0%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다.



[그림 1]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심각성

오늘날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영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1순위), 자산 불평등이 36.8%로 가장 높았고, 소득 불평등(33.8%), 주거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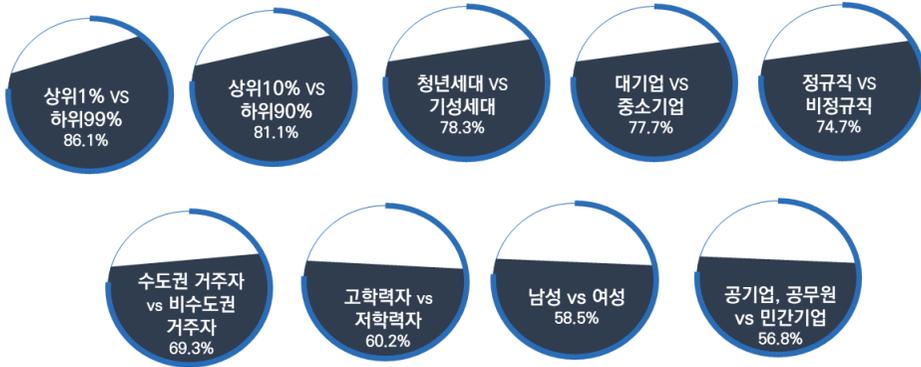
평등(16.0%), 고용 불평등(5.6%) 순이었다. 성별로 불평등 영역의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소득 불평등(36.6%)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자산 불평등(34.6%), 주거 불평등(14.0%) 순이었으나, 여성은 자산 불평등(39.0%)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소득 불평등(31.1%), 주거 불평등(17.9%) 순이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2명 중 1명(48.2%)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10명 중 3~4명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2]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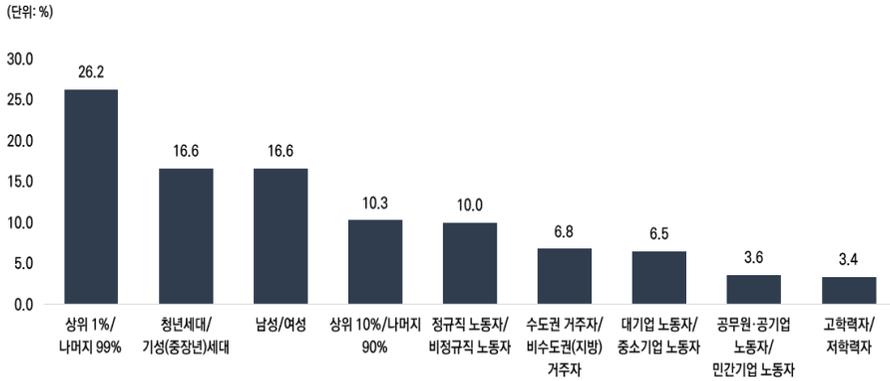
## (2) 집단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 비교(심각성 인식 및 1순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집단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을 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상위 1%와 하위 99%의 불평등 심각성이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10%와 하위 90%(81.1%), 청년세대와 기성세대(78.3%), 대기업과 중소기업(77.7%), 정규직과 비정규직(74.7%) 순이었다. 특히, 성별 불평등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30대가 20대보다 불평등을 심각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불평등(남성과 여성)에 대해 남성의 40.9%, 여성의 75.6%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며, 20대의 60.2%, 30대의 56.8%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한국사회 집단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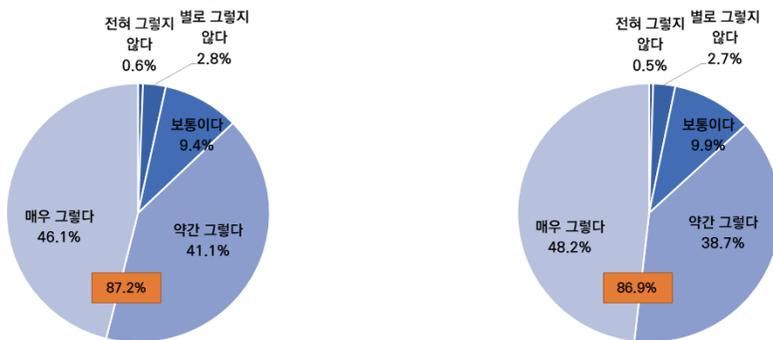
오늘날 한국사회의 집단 간 불평등 영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1순위),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청년세대와 기성(중장년)세대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6.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불평등(25.4%)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23.4%), 남성과 여성(11.6%), 상위 10%와 나머지 90%(9.8%)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불평등(27.0%)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21.5%),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11.2%), 상위 10%와 나머지 90%(1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불평등(23.0%)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21.6%), 청년세대와 기성(중장년)세대(17.0%) 순이었다. 그리고 30대는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불평등(29.3%)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16.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11.9%), 남성과 여성(11.7%) 순이었다.



[그림 4] 한국사회 집단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 1순위

###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 변화(과거 및 미래)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일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7.2%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했다. 특히, 남성(84.3%)보다 여성(90.0%)이 20대(84.8%)보다 30대(89.5%)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일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 10명 중 8~9명(86.9%)은 향후 10년간 한국사회 일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83.3%)보다 여성(90.4%)이, 20대(84.2%)보다 30대(89.5%)가 좀 더 향후 10년간 한국사회 일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해지리라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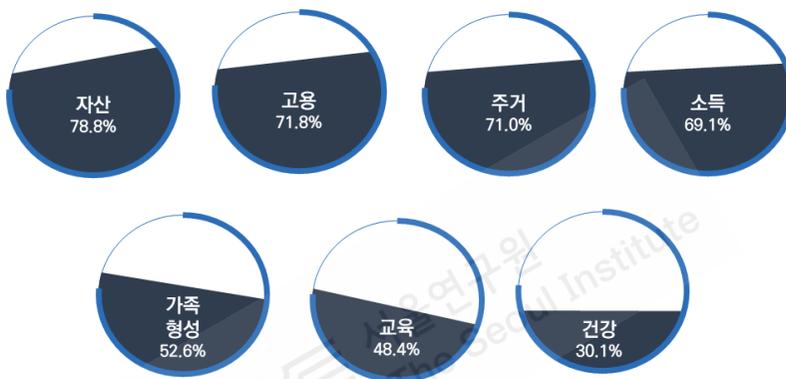


[그림 5]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도(좌),  
향후 1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도(우)

## 2)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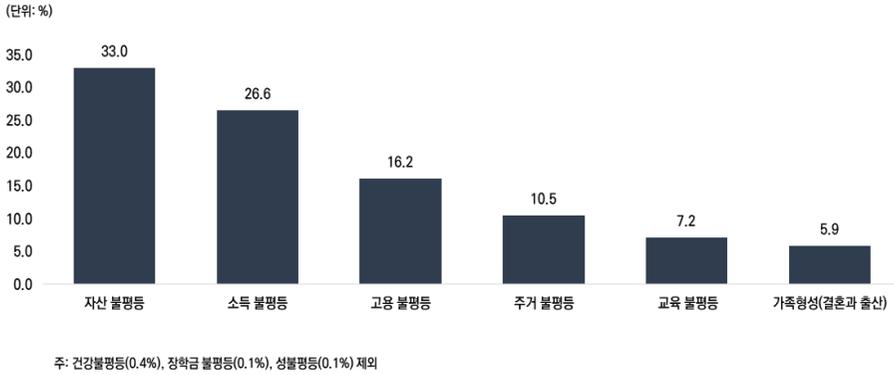
### (1) 불평등 영역별 심각성 비교(심각성 인식 및 1순위)

오늘날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심각성(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을 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자산 불평등은 10명 중 8명(78.8%)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용(71.8%), 주거(71.0%), 소득(69.1%), 가족 형성(52.6%), 교육(48.4%), 건강(30.1%) 순이었다. 특히, 전체 영역에서 여성과 30대가 불평등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사이의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불평등은 학력이 낮을수록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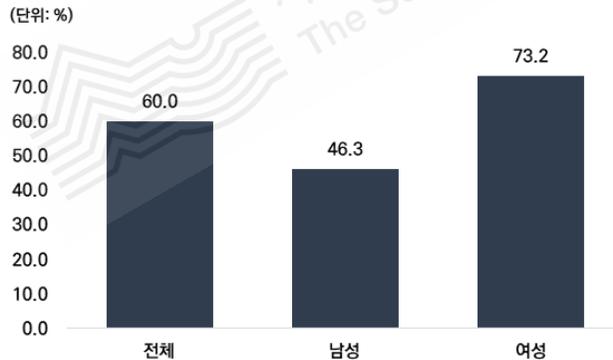
[그림 6]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심각성

오늘날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영역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질문한 결과(1순위), 자산 불평등이 33.0%로 가장 높았고 소득 불평등(26.6%), 고용 불평등(16.2%), 주거 불평등(10.5%) 순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자산과 고용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20대보다 주거와 가족 형성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울과 경기권일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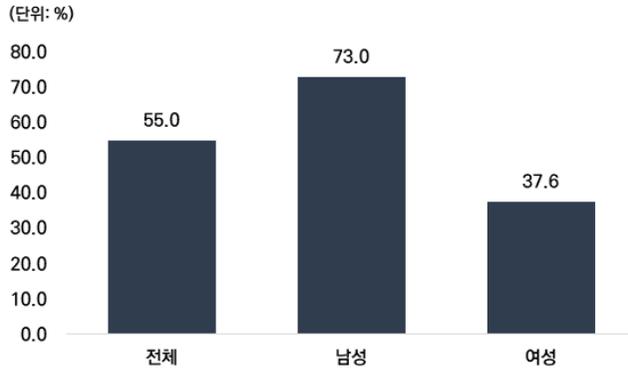
[그림 7]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심각성 1순위

(2) 집단 사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및 역차별의 심각성 및 동의 정도 비교  
 오늘날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 사이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은 46.3%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73.2%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62.4%, 30대의 57.6%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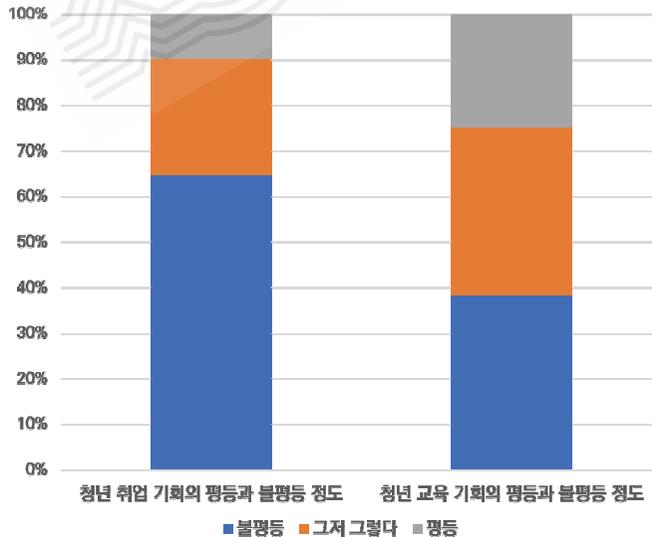
[그림 8] 청년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

오늘날 청년 남성에 대한 역차별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남성의 73.0%, 여성의 37.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54.7%, 30대의 55.2%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그림 9] 청년 남성의 역차별 동의 정도

오늘날 청년의 취업 기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명 중 6명(63.3%)은 불평등(약간 불평등 +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남성(56.9%)보다 여성(69.5%)이 더욱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인식했다. 한편, 오늘날 청년의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서울 거주 청년의 37.0%가 불평등(약간 불평등 +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30.3%)보다 여성(43.5%), 20대(35.6%)보다 30대(38.4%)가 인식하는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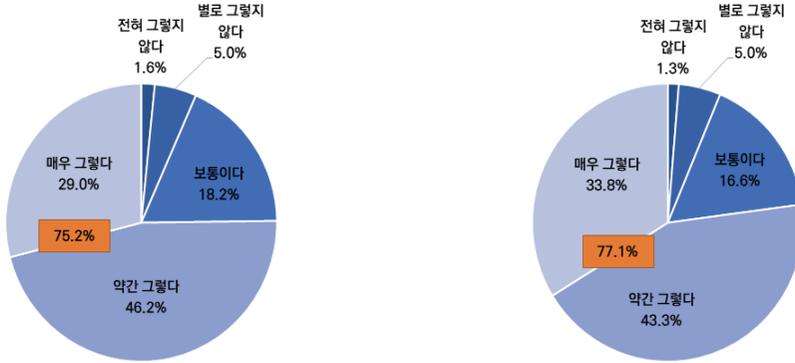


[그림 10] 청년 취업 및 교육 기회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

아울러, 오늘날 청년의 취업 기회에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47.6%가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42.7%)보다 여성(52.4%), 30대(45.5%)보다 20대(49.7%)에서 수도권 역차별 현상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늘날 청년의 교육 기회에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서울 거주 청년의 37.9%가 동의(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35.2%)보다 여성(40.6%), 20대(37.2%)보다 30대(38.6%)에서 수도권 역차별 현상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덧붙여, 오늘날 수도권 거주 청년과 비수도권 거주 청년 사이의 불평등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56.1%가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48.8%)보다 여성(63.2%), 20대(54.7%)보다 30대(57.4%)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 변화(과거 및 미래)

지난 10년간 청년세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75.2%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69.7%)보다 여성(80.5%)이 20대(73.1%)보다 30대(77.2%)가 지난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 10명 중 7~8명(77.1%)은 향후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71.3%)보다 여성(82.7%)이, 20대(74.5%)보다 30대(79.6%)가 앞으로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리라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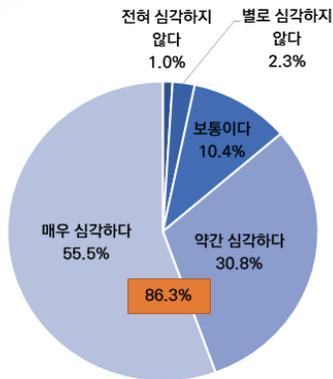


[그림 11] 지난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도(좌), 향후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도(우)

### 3)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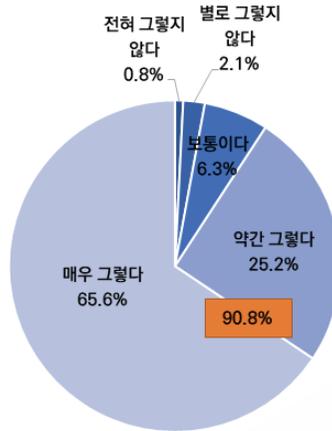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영향력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6.3%가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80.9%)보다 여성(91.5%)이 20대(84.2%)보다 30대(88.3%)가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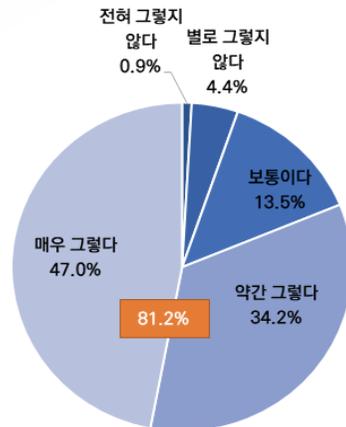
[그림 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대물림 심각성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90.8%가 영향을 끼친다(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86.8%)보다 여성(94.7%)이 20대(89.1%)보다 30대(92.5%)가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했다.



[그림 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교육 영향력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이나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81.2%가 영향을 끼친다(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76.0%)보다 여성(86.2%)이 20대(77.0%)보다 30대(85.3%)가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과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했다.



[그림 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취업과 승진 영향력

## (2) 계층이동성

한국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한 결과, 높다(비교적 높다 + 매우 높다)는 응답의 비율은 24.8%에 그쳤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비교적 높다 + 매우 높다)는 응답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 모두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이 힘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이 적어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서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15] 계층이동 가능성(본인과 자녀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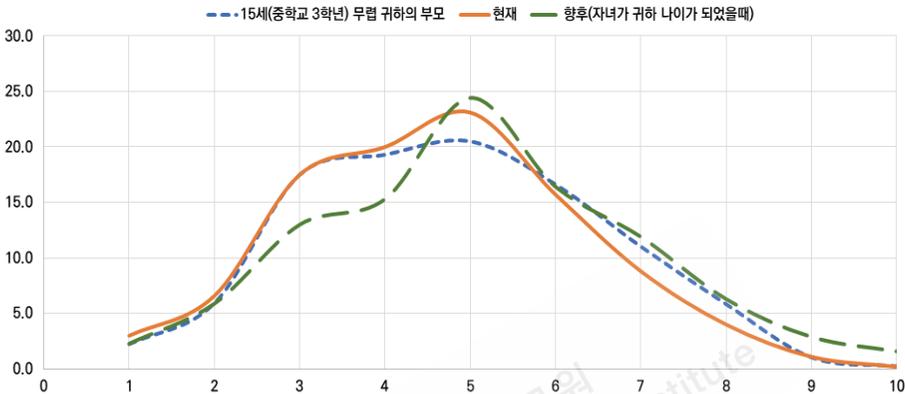
## 4)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에 관한 인식

### (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과거, 현재, 미래)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때 15세(중학교 3학년) 무렵 서울 거주 청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4.80점, 현재 청년은 4.64점, 향후 자녀가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는 5.11점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보다 현재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적으로 낮다고 인식되지만 향후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는데, 현재의 청년은 과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향후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기대치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분포를 보여준다. 앞서 평균 점수 비교가 시사하듯이 향후 자녀의 지위 기대치는 5 이상의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현재 본인의 지위는 6 이상에서 낮게 나타남과 동시

에 3과 4에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이 두텁게 나타났다. 이는 이희정(2018)의 분석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주관적인 계층인식 변화를 살펴본 이 연구는 2010년대에 청년층의 계층인식이 전반적으로 하향화 추세를 나타냈으며, 그 가운데 하상층과 중하층(6분위 가운데 2분위와 3분위)으로 인식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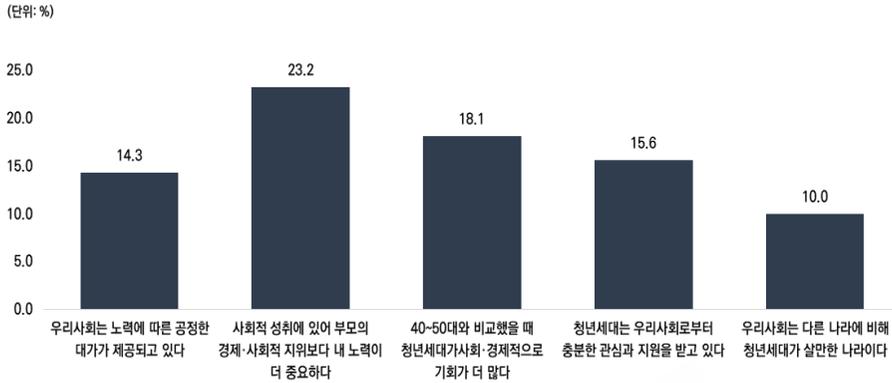
[그림 16]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2) 공정성, 기회, 관심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의 공정성, 기회, 관심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설문문의 동의 정도에 대해 불과 14.3%만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성취에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3.2%가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55.0%는 사회적 성취에 내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라는 질문에 청년의 18.1%가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3.3%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청년의 15.6%가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3.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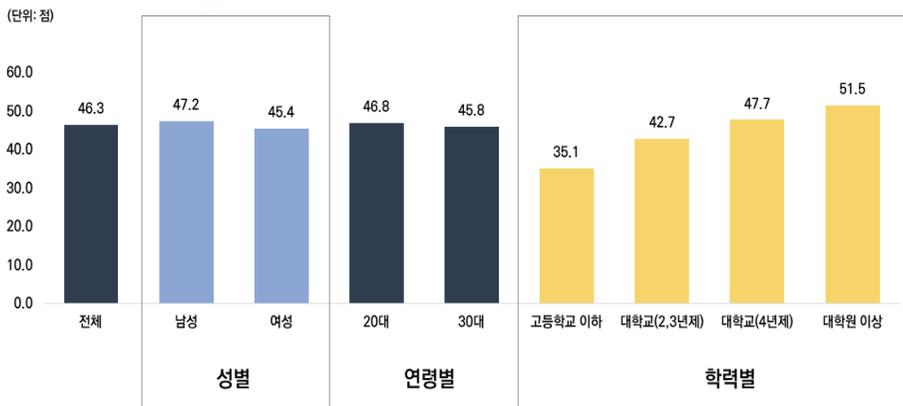
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라는 질문에 청년의 10%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71.9%)과 20대(69.3%)에서는 동의하지 않음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 공정성, 기회, 관심에 대한 인식

### (3) 청년의 삶의 만족도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점 만점에 46.3점으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성(45.4점)보다 남성(47.2점), 30대(45.8점)보다 20대(46.8점)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는데,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성별 또는 연령별 격차를 훨씬 능가한다. 이러한 차이는 학력에 따른 삶의 조건 차이가 성이나 연령에 따른 삶의 조건 차이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8] 청년의 삶의 만족도

---

# Abstract

## **Society with Class Barrier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Youth and Inequalities**

This study, on the one hand, integrat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inequalities that the youth are facing; on the other hand, extensively explored the inequality issues of today's young people, which hav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objective realities and subjective perceptions. The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found the close and consolidated relationships among the dimensions of inequality in space, while the analysis of the hereditary succession and persistence of inequalities helped understand the dynamic features of inequalities in the youth by looking at the multiple disparities on a temporal axis. These analyses enabled us to have a bird's eye view of a place where the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are being structured and changed over time. Moreover, how young people perceive inequalities was analyzed with the Seoul Youth Inequalities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Seoul Institute in July this year, in addition to the re-analysis of the existing surveys.

Toda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inequalities that the youth experience. Passing down inequalities to the next generation is to stop moving up or down the social ladder.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a society where young people have a hope that they can catch up with someone ahead of them if they do their best and a society where such a hope does not exist. Where is Korean society close to? According to the Seoul Youth Inequalities Survey, 9 out of 10 young people in Seoul supported

the statement that an inheritance of a social position from one's parents is widespread. When looking at the Social Survey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ring the past decade, the prospects of upward mobility of those in their twenties as well as their future generation steadily declined. 5 out of 10 young people in their twenties ten years ago expected that they can move up the social ladder; however, only 2 or 3 out of 10 people born in the 1990s currently think so. In other words, Korean society seems to be a place where there is no hope, at least, in terms of perception.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o examine objective situations since there might be a gulf between realities and perceptions. Are there, in reality, vast social disparities in Korea that cannot be narrowed by individual efforts? Judging from various statistics and research, there are real grounds for a dramatical increase of a pessimistic view among the youth of today, in particular, those in their twenties. Since the 2000s, those holding a university degree have continuously increased. But the employment rate of the youth has declined or stagnated, and their unemployment rate has steadily risen. The quality of employment has also significantly deteriorated. Full-time regular jobs have disappeared to a great extent, and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in their twenties in large enterprises has drastically reduce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men in their twenties with less education in insecure jobs is noticeable. There is a growing tendency of having less social mobility among those born in the 1990s. The prospects for a rise in income and an improvement in employment status have gradually become faint since the 2000s. To summarize,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have driven those in their twenties into fierce competition and have made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worse. This, in turn, has motivated more spending in education to be more successful. Different family backgrounds make a difference in the size and diversity of resources, thereby increasing inequality in education.

In order to reduce inequalities that the youth go through,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respective policies for the youth and address the problem that current social welfare schemes do not sufficiently help the youth who ar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In the field of platform work, which has

---

164

recently emerged as accessible jobs for the youth under the circumstances of a chronic shortage of jobs, there exist widespread blind spots that existing welfare systems cannot fully cover and several factors that make the work insecure. In addition to dealing with a variety of policy issues that the youth are confronted with, it is urgent to pay attention to securing decent jobs for the youth. This is coupled with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that focuses on dismantling the polarized labor market and promoting the potentiality of industrial growth, thus creating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road map of innovative and comprehensive policies that should be based on, first, a firm strategy for a structural reform alleviating inequalities, second, a social security system eliminating every blind spot, and third,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arrangements for the youth.



## **01 Research Outline**

- 1\_Background and aims of the research
- 2\_Research contents
- 3\_Research methods

## **02 Society with Social Disparities, Society with Class Barriers**

- 1\_On the threshold of a society with class barriers
- 2\_The youth and the space of current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 3\_Hereditary succession of inequalities, the youth in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 **03 The Youth and Inequalities, Changed Circumstances and Intragenerational Gaps**

- 1\_Income and asset inequalities
- 2\_Inequalities in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 3\_Housing inequality and inequality in family formation

## **04 Hereditary Succession of Inequalities, Persistence of Inequalities**

- 1\_Inequalities being passed down to the youth
- 2\_Sticky floors and sticky ceilings

## **05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Youth toward Inequalities**

- 1\_Perceptions of the youth toward inequalities explored through the Seoul Youth Inequalities Survey
- 2\_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gaps in perceptions toward inequalities in Korean society

---

## 06 Conclusions and Policy Tasks

1\_Realities and perceptions of inequalities in the youth,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2\_Policy tasks for alleviating inequalities in the youth



---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 2020-BR-02

---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0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550-5 9333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